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길은배 김용재 고성호

조한범 박찬석 이종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2개 국책연구기관과 4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 약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구축 방안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즉,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 체제가 약화되는 등 통일의 외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역동적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내적 통일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과 이른바 ‘남남갈등’의 확산 등 통일역량을 저해하는 요인도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는 올바른 통일관의 부재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정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은 국가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는 평화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의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갈등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타협,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정치교육의 확산 등 우리의 통일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적극적 통일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내용적으로 적극적 통일의지 배양, 건전한 안보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관, 민족공동체 의식에 의거한 객관적·균형적 북한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의거한 이념관의 형성을 지향한다. 방법상으로는 공급자의 의도와 수요자의 관심간 조화,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간 균형, 집합교육과 on-line 교육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 역할분담에 의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개선하고 통일교육 강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며, 통일교육센터 혹은 통일교육대학원 등 통일교육을 전담할 독립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평화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4장(학교통일교육), 5장(사회통일교육), 그리고 6장(통일교육 인프라)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3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북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과반 수 이상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고(42.6%),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으로는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는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다수였으며(59.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21.3%). 또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44.0%),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주된 경로는 TV·라디오(64.3%)였으며, 인터넷(10.0%)의 응답률이 신문(5.6%)이나 잡지·일간지(1.8%)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45.4%)라고 생각하고 있어,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78.7%)과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 등의 교육방법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로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69.3%),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6.9%에 달하였다. 북한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함께 살 동포”라는 의견이 55.9%로서 과반수를 점하였고,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할 남짓한 반면, 전체의 절반이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응답(50.6%)하였다. 북한 대중매체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할 미만의 소수에 머

물렀고(28.6%), 실제로 북한 대중매체에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6.9%에 불과하였다.

현재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이 47.8%로서 다수였고, 바람직한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61.1%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관심 부족”(85.7%)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북한의 실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4%에 불과하였고 주관기관은 “정부·공공기관”(41.8%)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 정도(50.0%)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43.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는 ①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중장기적 비전을 갖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TV,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⑥통일문제는 국내문제이면서 국제적 수준의 정치·군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공공-민간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⑧평화·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 방안에 대해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에 따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통일관을 평화관, 이념관, 그리고 북한관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원칙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관’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인식하는 방법은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남북한 관계 및 변화에 대해 그때그때 현안대로 인식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관’은 통일교육의 평화적 지향을 함양하는 인식의 강화를 요구한다. 평화적 인식 강화는 그 동안에 강조되었던 안보 의식을 뛰어넘어 보다 한 차원 높은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념관’은 ‘자유 민주주의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통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실천의 생활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실천적인 평화 공간으로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하여 평화의지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교수자 즉,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학교통일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통일교육 교수자들은 통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철저한 분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변화하는 통일교육환경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기초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출발점부터 재검토하는 한편, 현실적인 체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은 그 속성상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①‘사실상의 통일’ 지향, ② 적극적 ‘평화 만들기’와 포괄적 안보관의 수용, ③사회문화 영역의 중시, ④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재규정하고, 교육시설의 이용 협조,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각급 사회교육단체는 통일부장관이 정한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계성을 높이도록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조정 및 협조를 이루며 정책개발 및 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은 교육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일교육원은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교육의 구체적 방향·목표·내용을 정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교재개발 및 지원, 교육기관의 조정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의 종합적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일교육’을 위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 통일교육을 특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역할 분담과 함께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사요원은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 방향과 교수기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통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민간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일센터의 지정 및 활용, 전국 12개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전문위원회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통일교육 지역중심센터 육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600만 명의 재외동포는 통일을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일 뿐만 아니

라 통일후 남북주민간 갈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한편,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일교육의 개선에는 모든 단체, 국민들이 동참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연계시키고, 역할을 분담 조정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의 확대개편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수준별, 성별, 연령별, 가족그룹별, 제3국 체류기간별 등의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분류하고, 이들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퇴원이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적응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재교육시킬 수 있는 중장기 통합교육 관리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통합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정관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부의 전문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하나원 생활과정에서의 교육과정에 긴밀하게 참석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원과 하나원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남한 사회 사회통합 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통일교육원 내에 설립(가칭: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 센터)하도록 한다.

넷째, 노동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활성화하고, 기술습

특과 재교육과정에서 남한사회 기업경영의 방식,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 노동과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사용자와 노동관계, 기업조직운영 방식과 경쟁관계, 남한의 기업문화 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지자체별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단체를 조직화하고,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과정에서의 남북주민간의 심리적, 정신적 충돌과 몰이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교육조직과 연계하여 재교육 혹은 사회통합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한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북한이탈주민 재교육기관(가칭: 사회통합 재활센터)에 재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전국적인 비정부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단체나 조직의 컨소시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국적인 비정부 기구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직화하며,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정부 사회통합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교단체,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방송국 등의 조직과 각 기구의 인터넷 방송 조직도 연계될 수 있다. 중앙과 각 지방의 네트워크 거점을 두며, 네트워크 연계망은 인터넷, 방송, 오프라인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될 수 있고, 사이버 사회통합 센터의 사이버 토론방 개설, 의료법률 상담, 직장 문화 이해와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사이버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은 통일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각종 통일교육기관과의 원격통일교육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서 원격통일 교육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통일교육대상자 환경을 구현하고, 통일교육원, 교원단체, 공무원 연수원, 대학 사회, 일반인 등 전체를 종합하는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원격통일교육 통합운영시스템과 통합운영사무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사업은 사이버 통일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교육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는 것과, 통일교육 통합운영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통일교육 주체의 협의체로 이루어진 정보통신 사이버통일 교육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등 각 지역 교육연수원, 동국대, 경남대, 각종 사이버 대학 등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로 제휴하여 일회성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지는 통일교육 과목을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 교원은 물론이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원격통일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교육생 및 전문교육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교육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의 원격강의 콘텐츠의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된다.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성화 기관의 운영이 요청된다.

다섯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 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안건의 협의, 사이버 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 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격통일사이버교육 담당자들도 컨소시엄의 형태나 개별적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내 모든 사이버 교육에 사이버통일교육을 연계할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대학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교육수요자의 욕구달성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 등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일단 대학의 북한관련 학과나 각종 남북관련 전문연구소는 전문화된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연수원, 통일교육원 등은 통일교육 대상자의 발굴과 전달수단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관의 장점을 서로 연결하여 각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원격통일 교육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통일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 방송국의 개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추진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요계층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통일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교육적 성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이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도 큰 장점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위성을 통한 통일교육 방송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교육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참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이 케이블 방송보다 위성방송 쪽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위성용 통일교육 방송국을 고려하는 것도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케이블 통일방송국 개국은 케이블 TV의 공공성이 규정이나 법규 등으로 명문화되거나 일정한 방송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영화관에서 국산영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시간대나 혹은 채널권을 확보한다하더라도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케이블 시청자 분야에서 공공성으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통일지향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구현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를 ‘통일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발달시켜야 할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함으로써 통일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Ossis’와 ‘Wessis’의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목 차

I. 서론	1
II.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의 정립	9
1.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11
2. 기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검토	12
3. 외국의 정치교육 사례	27
4.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	41
5. 소결	51
III.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	55
1. 조사의 개요	57
2. 조사의 결과	60
3. 조사결과 요약	111
4.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사점	117
IV.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	123
1.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125
2.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146
3.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방안의 실천	154
4.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실제적 교수기법 적용	159
5.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 수업모델 개발	174

V. 사회통일교육의 체계화 방안	179
1. 사회통일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181
2. 사회통일교육 추진체계의 재정립방안	189
3.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실천방안	198
4. 소결	210
VI.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213
1. 통일인프라의 필요성	215
2. 통일인프라 구축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17
3. 단기 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전략	229
4.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238
5. 정보화 시대의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283
VII. 결 론	347
참고문헌	361
부 록: 통일교육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367

표 목 차

<표 II-1> 평화공존모델의 특징	19
<표 II-2> 평화도구의 출현	34
<표 III-1> 표본의 특성	59
<표 III-2>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61
<표 III-3> 북한·통일문제 대화 상대	62
<표 III-4>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	63
<표 III-5>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	64
<표 III-6> 통일의 예상시기	65
<표 III-7>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66
<표 III-8> 북한·통일관련 정보 입수 경로	67
<표 III-9>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68
<표 III-10> 통일문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69
<표 III-11> 통일문제 “성인들의 문제이다”	69
<표 III-12> 통일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70
<표 III-13> 통일문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	70
<표 III-14>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 방안	71
<표 III-15>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72
<표 III-16>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73
<표 III-17>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 실시	73
<표 III-18>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74
<표 III-19> 탈북 주민·청소년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75
<표 III-20> 북한의 변화정도 평가	76
<표 III-21>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 평가	77
<표 III-2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78
<표 III-23>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가	79
<표 III-24>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80

<표 III-25> 주한미군 재배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81
<표 III-26> 남북한 평화공존의 저해요인	82
<표 III-27> 북한주민관	83
<표 III-28> 북한주민이 보는 남한주민	84
<표 III-29> 북한주민의 생활상 이해정도	85
<표 III-30>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	86
<표 III-31>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전체	86
<표 III-32>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평화적이다”	87
<표 III-33>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합리적이다”	87
<표 III-34>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근면하다”	88
<표 III-35>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검손하다”	89
<표 III-36>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믿을 수 있다”	89
<표 III-37>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인내심이 강하다”	90
<표 III-3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90
<표 III-39> 차별 경험 유무와 북한청소년관	91
<표 III-40>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과 접촉 경험	93
<표 III-41> 북한 대중매체 접촉과 통일문제 관심 증진	94
<표 III-42> 현행 학교의 통일교육 방식	95
<표 III-43>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식	96
<표 III-44> 학교통일교육 평가 전체	97
<표 III-45> 통일교육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	97
<표 III-46> 통일교육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98
<표 III-47> 통일교육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	99
<표 III-48> 통일교육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99
<표 III-49> 통일교육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100
<표 III-50> 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101
<표 III-51> 통일교육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	101
<표 III-52> 통일교육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	102
<표 III-53> 통일교육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	103
<표 III-54> 통일교육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103

<표 III-55>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104
<표 III-56> 통일교육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	104
<표 III-57> 학교 북한교육의 북한 실상 반영 여부	105
<표 III-58>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평가	106
<표 III-59>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이수 경험	107
<표 III-60> 통일교육 참여 의사	108
<표 III-61> 자신이 참여한 통일교육 주관기관	108
<표 III-62> 학교 외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평가	109
<표 III-63> 학교 외 통일교육 참여 계기	109
<표 III-64>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방식	110
<표 III-65>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일정	110
<표 III-66> 학교 외 통일교육 재참여 의사	111
<표 IV-1>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의 원칙	126
<표 IV-2>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 중점적 목표	129
<표 IV-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131
<표 IV-4> 6, 7차 교육과정의 도덕·윤리와 통일교육 내용 비교	138
<표 IV-5> 6,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시수 비교	139
<표 IV-6>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통일교육 내용반영 방안	142
<표 IV-7>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145
<표 IV-8> 대학 교양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지향	178
<표 VI-1> 연도별 교육생 현황	241
<표 VI-2> 계층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244
<표 VI-3>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248
<표 VI-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교육	268
<표 VI-5> 중장기 통일교육 중점 방향	271
<표 VI-6> 통일교육기관별 교과 프로그램 특성 비교	274
<표 VI-7>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 설정(예시)	278
<표 VI-7>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 설정(예시)	279
<표 VI-8> 사이버통일교육 원격강의 교과목(예시)	288

<표 VI-9> 교원 원격연수기관 현황	292
<표 VI-10> 대학부설 원격교육기관 현황	293
<표 VI-11> KBS 인터넷 방송 주요 코너와 프로그램 코너	300
<표 VI-12>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 내용 사례	302
<표 VI-13> 주요 지상파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304
<표 VI-14> 기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305
<표 VI-15> 청소년 인터넷 방송 채널 현황	309
<표 VI-16>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 방송 사례	311
<표 VI-17> 일요스페셜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319
<표 VI-18> 100분 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 프로그램 사례	323
<표 VI-19> 프로그램 공급사 현황(PP)(45개 채널)	341

그림 목 차

<그림 II-1> 현행 통일교육 추진체계	19
<그림 II-2> 통일관의 구조	44
<그림 V-1> 통일교육 추진체계	196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242
<그림 VI-2> 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 교육 대상의 확대	254
<그림 VI-3> 사회통합 교육 진행도	255
<그림 VI-4> 직업훈련과 사회통합 교육 연계	261
<그림 VI-5>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263
<그림 VI-6> 통일교육 체제 통합 모형	264
<그림 VI-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266
<그림 VI-8> 거주지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	267
<그림 VI-9> 통일교육기관의 연계 강화	276
<그림 VI-10>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284
<그림 VI-11> 원격통일교육 운영방식	285
<그림 VI-12>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교육서비스	290
<그림 VI-13> 통일교육 방송시스템	315
<그림 VI-14> 미래 통일교육방송	316
<그림 VI-15>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지도	317
<그림 VI-16> 통일교육 위성방송 설치 필요성 및 가능성	337
<그림 VI-17> 통일교육 방송 인프라구축 가능성	344

I

서론

소련의 붕괴와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등 세기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해왔다. 일례로, 1990년을 전후해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단행하면서 우리는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하는 등 국제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반면 ‘사회주의 형제국’을 상실한 북한은 정치적·경제적 곤경에 직면하였다.

세기적 전환기에도 변화를 거부해오던 북한은 1991년 나선경제무역지구 설정, 개방을 시도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였고,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행정특구, 개성공업지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등 부분적이거나 개방을 시도해오고 있다. 또한 1998년 소유권, 수익성, 원가 등 자본주의 개념을 개정헌법에 반영하면서, 개혁조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2년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배급제를 폐지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으며, 2003년에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개혁적 조치도 내놓고 있다.

이런 북한의 변화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2003년 착공된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중재, 그리고 청산결제 등 4개 부분의 경험합의서도 발효되었다. 남북간 철도·도로의 연결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1987년 시작된 남북간 교역은 2003년에 이르면 7억 2천만 달러에 달한다. 사회문화적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벤트성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산가족도 8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상봉 8,051명, 생사확인 18,939명, 서신교환 679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런 교류협력이 남북간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취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간 관계 차원에서 급격히 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 결집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첫째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무관심’ 현상이다. 이 연구의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청소년들은 통일 실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통일이 필요없다는 ‘통일무용론’, 심지어는 아무렇게나 통일만 되면 그만이라는 ‘통일환상론’ 등 올바른 통일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일무관심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적 책임으로 전가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기성 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통일역량 낭비의 두번째 요인으로는 이른바 ‘피주기’ 논쟁을 들 수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북지원이 무용하며 오히려 북한의 입지만 강화해 줄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부분적이거나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런 부분적 변화가 누적되고 확산되면 결국 근본적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부정하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변화는 생존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면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유지 및 대남적화전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한·미관계를 보는 관점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하며 ‘외세와의 공조’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를 실현시킴으로써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북한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여전히 기능적이며 미국과의 공조는 유지·강화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통일 실현에 우호적 상황을 조성해주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무관심 현상을 가져오는 등 우리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건전한 토론의 장을 벗어난 남남갈등은 그 자체로 소모적일 뿐 아니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통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그만큼 통일 실현은 힘들게 될 것이다. 결국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과 이에 근거한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의 열쇠는 부분적으로나마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올바른 통일관 형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구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¹

물론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제시 및 토론은 유익한 논쟁이 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동성, 사회의 규모와 다양성의 증가, 그리고 참여욕구의 증진 등은 통일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최소한도의 합의된 통일관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적 토론이나 참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이다. 시민참여라고 하여 무분별한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일문제에 관한 한 더욱 그렇다. 통일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최소한도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초보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 그리고 생산적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통일지향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통일지향 교육은 크게 두 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적 노력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혹은 평화공존 교육은 그 내용과 방법이 통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일지향 교육은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는 교육이다.

통일지향 교육의 두번째 의미는 시간적 한계를 반영하는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교육을 의미한다. 물론 통일과 관련된 많은 가치관과 태도가 통일 이후 남북간 사회통합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체제통합의 문제 등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의 통일지향 교육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교육으로 한정

¹ 박영규·김수암,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2003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3-08 참조.

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지향 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통일교육과 통일지향 교육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뢰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구축 방안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이 연구는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통일지향 교육의 패러다임을 다룬다. 먼저 통일지향 교육 신뢰러다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을 검토하며 199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점검한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등 정치교육을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방안을 일반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모색해 보게 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다. 청소년의식 조사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설문문항은 주로 북한·통일관, 북한주민·북한청소년관, 통일·북한 관련 교육경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서 ‘북한·통일관’은 북한·통일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 등을 조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주민·북한청소년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주민·북한청소년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북한 대중매체 접촉경험을 다루었다.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에서는 학교 및 학교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북한관련 교육의 방식과 내용 및 그

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 학교는 성별(남·녀), 학교계열(인문계·실업계)을 기준으로 학교명부에 의거한 다단계 표집방법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하여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에서 제시한 통일지향 교육의 방향에 따라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 방안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통일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를 다룬다. 이에 의거하여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학교통일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또한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수기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대학통일교육의 실험적 수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화 방안을 다룬다. 연구대상인 사회통일교육으로는 각급 학교를 제외한 사회교육기관, 민간단체, 민방위교육, 언론기관, 군부대를 포함한다. 물론 여기서도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과제를 도출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통일교육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룬다. 그리고 신뢰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일교육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제6장에서는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살펴본 다음, 구축방안과 정보화 시대의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체제를 검토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나아가 정보화 시대의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에서는 인터넷 발전에 따른 원격교육 시스템의 통일교육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 나아가 인터넷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 등 정보화 시대의 각종 방송

시스템의 통일교육과의 연계가능성을 알아본다.

제7장은 요약 및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결과를 장별로 요약하고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끝을 맺고자 한다.

II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의 정립

1.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이후 우리의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하여 왔다. 1990년대 초에는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해체된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단행함으로써 세계적 냉전질서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냉전의 승자로 남은 미국은 단일패권의 시대를 열었지만, 2001년 9월 미증유의 테러를 거치면서 테러를 척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이라크 및 이란과 더불어 ‘악의 축’의 한 국가로 지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누적된 체제모순과 더불어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였다. 그 동안 변화를 거부해오던 북한은 점진적이기는 하나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침이 있기는 하나 남한과의 교류협력에도 응해오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군사모험주의를 추구하면서 미국 등 강대국과 대결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도 ‘민족공조’ 등의 슬로건을 통하여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체제의 약화 그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신장은 통일환경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통일무관심 현상과 이른바 ‘남남갈등’은 우리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번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제3장 참조),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도 안되는 42.6%에 그치고 있으며, 통일문제를 ‘성인들의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41.7%에 달하는 등 통일문제에 대한 의식이 미약한 상황이다.

대북지원의 필요성, 북한의 변화 여부, 미국과의 공조 문제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남남갈등’은 우리의 통일역량을 약화시키고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올바른 통일관의 결여와 정보

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통일문제에 대한 참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평화관, 이념관, 그리고 북한관을 배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극적 통일관을 함양할 필요가 제기된다.

2. 기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검토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은 한반도가 분단된 1945년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크게 3단계를 거치며 발달해왔다. 제1단계는 분단에서 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안보교육기, 제2단계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의 통일안보교육기, 그리고 제3단계는 90년대 초 이후의 통일교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각 단계의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은 국내외적 통일환경과 남북간 역학관계, 그리고 국민의식의 변화에 기초하여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해왔다.

가.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반공안보교육 패러다임 (1945~1987)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과 6·25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식 결집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안보를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반공교육을 추진하면서 통일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에서 ‘도의교육과’와 ‘반공교육’을 병합하여 ‘반공·도덕’이라는 독립과목을 설치하면서 통일지향 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²

통일교육이 보다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토통일원이 정부 부서의 하나로 설치(1969)되고, 그 산하에 통일연수소(현 통일교육원)를 발족시키면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토통일원은 “통일열망을 배경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서 설치되었으나, 점차 교육홍보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전담할 통일연수소를 발족시켰다.³ 당시 정부는 평화통일 3대원칙에 대한 이해증진, 통일안보관 정립, 그리고 반공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사상무장에 교육 목표를 두면서, 『통일안보교육의 집중강화계획』(1976)과 『국민정신교육 강화방안의 시행계획』(1976) 등 종합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반공안보 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목표와 내용이 조금씩 변화기는 하였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반공정신과 국가 안보의식 고취, 이념적 우월성 등 통일주도세력의 기반 구축에 통일교육의 일차적 목표를 두었으며, 1980년대 초반에는 통일정책 홍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대한 이해, 체제 우월성에 대한 신념과 대북 자신감 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반공안보 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교육 목표 및 내용 면에서 볼 때, 이데올로기 중심의 교육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통일보다는 반공안보에 역점을 두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객관적 인식보다 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결의식과 대북 적개심을 키우는 일방적 비판에 치중하였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²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7-15 (1997); 이우영 등,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민족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KDI 주관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연구보고서 (1997).

³ 통일부,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서울: 통일부, 1999), p. 381.

구체적으로, 이승만 정부에서는 국권과 실지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맹목적 통일관’을 주입시키는 것이 주된 관심이 된 반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선건설 후통일’ 전략에 따라 통일보다는 수세적 반공안보에 관한 내용이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대북 자신감에 기반하여 북한 실상에 대한 소개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보다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주된 관심은 여전히 반공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1980년대 중반까지의 통일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이라기보다는 반공안보교육이며 체제수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일안보교육 패러다임 (1987~1991)

1980년대 후반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 냉전이 완화되는 등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였다. 북한도 누적된 체제 모순이 드러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남북간 경제력 차이가 뚜렷해졌다. 이런 통일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이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반공일변도의 통일교육이 지양되고, 통일과 화해를 강조하면서 체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병행하는 통일안보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⁴ 보다 구체적으로, 통일안보교육은 기존의 반공일변도의 교육이 지양된 반면, 자유·민주·평화 통일관의 범국민적 확산, 자유사회 이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고취, 국론통합과 통일 주도 역량의 세력화,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의 정신자세 확립,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 등을 주요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도 제5차교육과정(1987~1991)을 수립하면서, 반

⁴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30년사: 통일교육의 발자취, 1972~2002』 (서울: 통일교육원, 2002), p. 27.

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하였다.⁵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한편으로는 안보의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라는 균형적 북한관을 배양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안보교육 시기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북한 바로알기 운동’은 통일논의의 다양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기는 하였지만, 정규교육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적 지식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일부 편향된 시각을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한계가 노출되었다.

통일·안보교육은 과거의 일방적 반공·안보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교육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교육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필수교양 과목이었던 「국민윤리」 교과목이 폐지되고, 고등학교의 「윤리」 과목시간도 시간이 축소되는 등 학교통일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었다.⁶ 또한 통일교육이 수세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정부 독점의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3) 통일교육 패러다임

1990년대에는 통일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도미노 현상처럼 퍼져나가면서 국제적 차원의 냉전질서는 해체되었으며, 전후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을 성취하였다. 한반도 상황도 비록 휴전체제에 종식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지각변동’을 겪게 되었다. 남한은 냉전질서 하에서 적대적 관계를 가져오던 중국과 1991년, 소련과 1992년 각각 수교를 맺었으며, 1992년에는 북한과 더불어

⁵ 위의 책, p. 27.

⁶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 44.

어 UN에 가입하였다. 반면 북한은 그 동안 누적된 체제 모순과 사회주의 권의 해체로 말미암아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체제 안전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간 체제의 우열과 관련된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남북한 당국자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냉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통일문제는 구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실현의 문제로 다가왔으며, 여기에 그 동안 성장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통일논의의 다양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제6차 교육과정(1992~1996) 개정을 통해 소극적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모색함과 더불어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의 삶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통일과 화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대체되었다.⁷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1992년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개발하여,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분단현실의 이해, 통일여건 인식,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준비 등 5개의 중심 영역으로 구분 강의하였다. 1999년부터는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하여, 통일의 필요성, 북한 사회의 변화 이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노력,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등을 그 중점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지도하고 있다.

통일교육 시기는 이제까지 수세적·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이 보다 공세적·적극적 차원으로 전환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층의 낮은 통일문제 관심도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내용도 강조되었다. 북한에 대한 이해도 체제적·제도적 접근 못지않게 주민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역사인식 등 사회문화적 접근을 가미하였으며, 이해방법도 반공·안보보다는 ‘객관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시대별로 상이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의 붕괴 및 급격한 통일에 대비한 ‘통일대비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체제통합, 과거청산방안 등 통일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교육의

⁷ 위의 책, pp. 44; 이우영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p. 12.

대상도 일반 국민보다는 교사와 공무원 등 전문직·행정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흡수통일 배제’ 원칙에 의거, 통일대비 교육보다는 평화·화해·협력 등 남북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남북공존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강의되었고, 남북간 관계 개선의 변화를 반영한 ‘방북교육’의 등장도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북공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안보 및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된 내용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통일교육의 다양화

1980년대 말까지의 통일교육은 사실상 관독점 체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하였는가 하면, 교육 자체도 정부만이 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나 북한에 대한 자료도 이른바 ‘불온문서’라 하여 금지시되었다. 결국 지식 및 자료의 정부 독점 그리고 자유로운 통일논의에 대한 억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통일교육도 획일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한 세기적 변혁과 남북간 국력의 차이 등 통일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관독점 체제의 통일교육이 점차 약화되고 민간의 관심 및 참여가 증대되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 그리고 통일교육 주체와 내용 등에 있어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권혁범은 통일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통일의 당위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일교육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편향적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통일교육 대신 ‘탈분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 탈분단교육이란 분단구조 속에서 생성·발전되어온 의식과 정서를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교육으로, 북한을 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차이를 ‘차별적’으로 보면서

⁸ 권혁범,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0).

우열의 관계로 전치시키는 오류를 범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권혁범은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차이 속의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을 제안한다. 권혁범의 탈분단교육론은 ‘통일’교육의 측면에서 지향점이 불분명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기성은 통일교육을 체제통합을 위한 ‘민족통합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족화해교육’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⁹ 민족통합교육이란 정치적·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진 후 남북간 이질적 측면을 완화하고 동질성을 제고하는 교육이다. 민족화해교육이란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제반 교육을 의미하며, 화해협력 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은 민족화해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기성은 민족화해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 다양성, 평화,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족화해, 분단 질서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 척결, 민족번영 등을 민족적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화해교육의 내용으로는 평화, 북한 이해,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성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대북관과 관련해서는 “북한주민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안경을 쓰고 북한의 사회·문화를 보아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한 후 보편적 및 민족적 가치기준에 의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영옥은 사회의 구성원은 상징체계를 공유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통일교육은 ‘한민족’으로서의 상징통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의 주장에 의하면, 통치의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상징체계를 추구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이 공통의 언어와 관념을 공유하면서 행위나 사건 그리고 인물 등에 대해 동일하게 해석하고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남북한 주민간 동질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⁹ 오기성, “학교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연구,” 『국민윤리연구』, 46권 (2001).

¹⁰ 유영옥, 『남북교육론』 (서울: 학문사, 2002).

최근 통일교육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체계적으로 종합·제시한 통일교육모델은 한만길의 평화공존을 위한 통일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만길은 통일교육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교육의 내용도 체제적·이념적 내용보다 사회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한만길의 평화공존모델은 기존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학문적 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 II-1>은 기존의 접근방법을 ‘체제우위 접근’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제시하는 평화공존 모델의 접근 방향을 이상적(ideal-typical)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II-1> 평화공존모델의 특징

	체제우위 모형		평화공존 모형
기본방향	안보·통일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확인	→	평화·화해 지향: 평화와 화해·협력 추구
통일방법	정치·제도적 통합	→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목표	이념·체제 중심 교육	→	사회·문화 중심 교육
교육주체	정부주도	→	정부·민간협력체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체제·이념중심 - 비교우위적 접근 - 일방적 전달	→	- 생활문화 중심 - 객관적 비교와 상호이해 - 개방적 토론
통일관 형성	- 제한된 정보·자료 - 수동적 참여 - 닫힌 통일관	→	- 다양한 정보·자료 - 능동적 참여 - 열린 통일관

자료: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서울: 교육과학사, 2001), p, 40.

한만길의 평화공존모델은 남북간 적대적 대결상황과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의 노력이며 또한 기존의 ‘신패러다임’ 논의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본질적으로 통

¹¹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서울: 교육과학사, 2001).

일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화공존 그 자체는 통일로 가는 하나의 단계 또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공존의 접근지향’은 하나의 이상형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기존 패러다임과의 차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통일환경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 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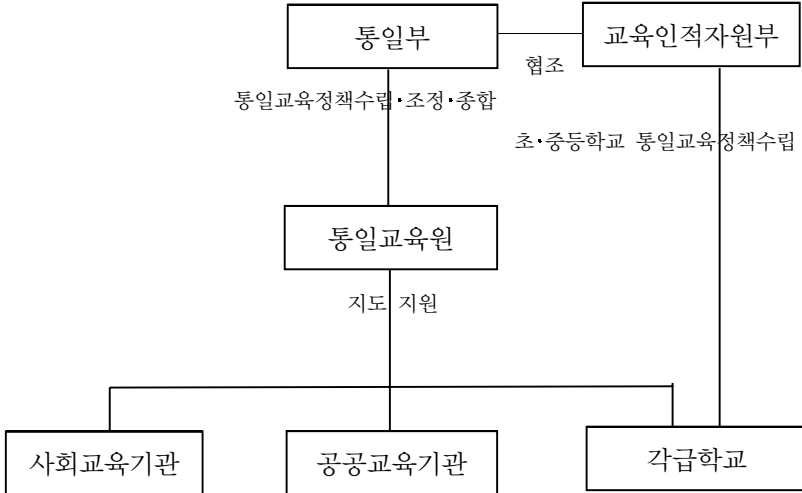
나. 통일교육 추진체계

통일문제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볼 때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주제로서, 국민적 합의 및 일체감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국민과 더불어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역동적 시민사회의 출현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동시에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통일교육이 국가의 독점 체제하에 놓임으로써, 아직까지 민간의 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주관 부서를 정부(통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추진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1> 현행 통일교육 추진체계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기본계획, 2004~2006」, p. 10.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부를 통일교육의 주관부서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통일교육에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통일부 장관이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 6인은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고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에 공무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임용하도록 강제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은 정부가 실시할 수도 있지만, 사회단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일교육 실시자간 협의·조정 등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해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체계 작성과 현장 통일교육 실시 등 통일교육 전반에 관한 국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은 과거 관독점 교육적 전통에서 볼 때, 민간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진전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실시체계에 대한 논의는 민관파트너십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

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장희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지침체계’와 ‘실시체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¹² 그는 지침체계와 관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유, 평등, 복지, 정의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시체계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강화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를 주장한다. 현행법상 사회교육기관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는 기능이 협소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교육협의회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일교육협의회가 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 등 그 역할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인 통일교육원과 민간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철의 경우는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교육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적 지원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 그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지만,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가 통일교육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통일교육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의 결정권을 민간기구에 넘겨야 한다고 한다. 결국 김용철의 주장은 정부의 역할을 재정적 지원으로 한정하고 정부 보조금의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포함한 통일교육의 실시를 민간단체의 역할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

¹² 이장희,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정상돈 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 오름, 2002), pp. 115~140.

¹³ 김용철,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기피 현상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상돈 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pp. 141~177.

다. 기존 통일교육패러다임 평가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안보교육을 거쳐 1990년대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분단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통일교육은 관주도로 실시되었으며, 민간의 참여는 최근의 현상이다. 관주도형 통일교육은 정부가 자료를 독점하고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통일교육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통일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통일교육 또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환경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성숙 등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통일교육의 유지 문제에서부터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1) 통일교육 유지와 대체의 문제

통일교육에서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은 통일교육 패러다임 정립에서 가장 초보적인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통일교육이 탈분단교육이나 평화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통일교육 대체론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요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대체론자의 주장은 현 단계에서 통일이 긴요한 것이 아니라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국가에서 가장 큰 국가적 관심사는 통일일 수밖에 없으며, 통일은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의 폐해에 대한 관심은 역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의 표방이며, 평화공존은 통일로 가는 과정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분단문화를 씻어내고 평화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그리

고 태도를 다루는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이나 평화교육, 심지어는 앞으로 논의하게 될 민주시민교육도 그 자체로서 통일교육은 아니다. 이는 마치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제교육이 통일교육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2)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점도 심도있는 토의를 요하는 주제이다. 통일교육이 평화공존을 지향한다면 그 목표는 객관적인 북한관과 이에 기초한 민족화해교육 혹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둘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교육은 예단된 이데올로기 주입을 통해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필요도 없다. 수강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스스로 판단할 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차별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평화공존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단현실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이 유지된다면, 통일지향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바람직한 통일관을 함양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남북 대치상태에서의 건전한 안보관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보관을 함양한다 하여 맹목적 적대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건전한 안보관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취에 대한 자긍심에 기초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를 갖추으로써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평화통일 의식의 증진 그리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관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3) 통일교육의 내용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통일관과 북한관에 관한 내용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교육이며 그 이데올로기는 체제유지용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사실 반공안보교육기의 경우 통일문제를 정권안보용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 환경에 부합되는 지식과 신념 그리고 태도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성격상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도 이데올로기를 배제할 수 없음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데올로기는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북한관을 함양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비판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제도적 차원의 북한관을 편향적이라고 한다면, 사회문화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 또한 편향적이라고 할 수 없다.¹⁴ 사회문화적 사실(facts)을 이해한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해는 외적 현상은 물론 그 현상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포함하며,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가치(물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는 정치적·체제적 구조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으며, 특히 통제체제인 북한의 경우 그렇다. 이는 북한주민이 정치적·체제적 이해 없이 남한 주민의 생활과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¹⁵ 그

¹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정상돈,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의 다원화,” 정상돈 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pp. 19~71. 정상돈은 사회문화적 접근법 또한 역편향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체제적·제도적 접근과 사회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¹⁵ 인식론적으로 볼 때, 이해(understanding)는 기술(description), 설명(explanation), 그리고 예측(predic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인식론적 논쟁은 주로 인과관계에

렇다면 북한 사회의 구조(혹은 정치적·체제적 특징)와 생활(혹은 사회문화적 특징)간 관계를 인과적으로 병행·이해하는 것도 균형적 북한관을 발달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교육의 추진체계

통일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파트너십의 형성·강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민간과 정부간 역할 분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통일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재정지원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남북간 관계와 통일교육의 경험을 고려해볼 때 정부의 통일교육 배제론은 보다 심층적 토론을 요한다. 남북간에는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치군사적으로 대치상황에 있다. 통일교육이 국가 안보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통일교육의 실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의 경우 통일교육의 경험이 일천하며, 전임인력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 상황에서 정부를 통일교육 실시자에서 배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정부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민간단체의 취약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여지도 있다. 특히 통일교육이 경제적 이윤동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보조금 집행에서부터 통일교육 실시 전반에 대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정부와는 독자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독자적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 설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Earl Babbie, 고성호 외 역, 『사회조사 방법론』 (서울: 그린, 2003); Russell Keat and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2) 참조.

정부기구인 통일교육원과 민간협의기구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통일교육원은 한편으로는 통일부의 한 부서로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간단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반면, 통일교육 실시자로서 민간단체와 협의·협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민간의 참여 그리고 정부의 지원 확대는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리고 현재의 통일교육 실태를 감안하여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점차 민간의 참여를 높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의 정치교육 사례¹⁶

가. 민주시민교육: 미국을 중심으로

(1)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민주시민교육은 그리스-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 개념과 민주시민교육은 18세기 ‘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통적 시민권은 시민적 덕목을 갖춘 소수의 엘리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면, 새로운 시민권은 민주적 권리와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춘 대중에 기반을 두는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다. 리센버그가 명명한 ‘제2의 시민’ 개념은 ‘국가건설’의 문제 즉, 시민으로서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적 소속감의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신뢰(trust)에 근거한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¹⁷ 과거 폴리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호

¹⁶ 여기서는 외국 정치교육의 사례를 역사적 배경과 목적·목표·내용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룬다. 외국 정치교육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추진체계에 관해서는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72~226.

¹⁷ Peter Riesenberg, *Citizenship in the Western Tradition: Plato to*

이해는 사라졌으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정부가 선행을 할 것이라는 믿고 그리고 정부도 비슷한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일단의 신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2의 시민권은 국가건설과 사회적 자본이 교육적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교육적 관심은 보통선거(suffrage)의 보편화로 유권자의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옮겨졌고, 특히 제3세계 신생 독립국의 경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1916년은 시민교육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 해에 각급 학교에서 정부 강의를 대한 보고서가 미국정치학회(APSA)에 의해 출판되었고, 전국교육학회(NEA)에서는 「중등교육에서의 사회과목」이, 그리고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교육」이 출판되었다. 특히 NEA 보고서에서는 시민교육을 전수하는 다학문 분야로서 ‘사회과’(social studies)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사회과의 목적은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수 방법은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각각의 시민이 직면하고 있는 시사쟁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 목표의 변화는 학생들에게 사실과 자료(facts and data)를 제공하는 전통적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도록 사실과 자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보고서의 내용은 듀이의 교육철학 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는데, 듀이는 민주주의, 공동체, 의사소통, 책임, 그리고 진보라는 핵심개념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가정은 공동체”라고 설파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학교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명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1917년부터 일부 주에서 국가에 대한 일방적 애국심과 충성심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 배양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고, 10년 후가 되면 모든 주가 학교에서 민주시민

Rousseau (Chapel Hill, NC: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¹⁸ Derek Heater,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 Falmer, 2004).

교육을 교육해야 한다는 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순탄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전통적 교육 목표를 선호하는 세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이 혼돈에 쌓이게 되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논쟁과 워트케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회과 교육은 민주시민교육 보다는 당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마약, 성, 그리 사회적 병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각의 편리한 내용을 편리한 방식으로 교육함으로써 시민교육의 일관성이 붕괴되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 학자와 교육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크게 3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즉,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내용의 모델을 재창조하는 것,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부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교육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학자들이 교과서를 개편하는 작업이었다. 미국의 교사들은 단편적인 자료보다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미국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대에 이르면 중요한 발달을 목도하게 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모델로서의 CIVITAS의 설계가 여기에 포함된다.

(2) 민주시민교육의 목적·목표·내용

시민교육의 부흥을 목표로 한 커리큘럼 틀인 CIVITAS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적 지식과 참여기술을 갖추는데 있으며, 이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¹⁹ 시민적 덕성은 크게 시민적 자질(dispositions)과 헌신(commitment)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민적 자질이란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한 작동과 공동선에 도움이 되는 시민으로서의 태도와 습관이며, 시민적 헌신이란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와 원리에 대한 자발적·합리적 약속이다.

시민적 덕성은 용기와 정직 등 사적 생활과 관련된 덕성과는 다르다. 시민적 덕성은 정치과정이 공동선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미국 정치체제의 근본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질이며 헌신이다.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주요 시민적 자질로는 시민성(civility)으로서의 타인에 대한 존중과 시민적 담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수용, 외부의 권위없이 미국 입헌 정부의 유지에 필수적인 절제와 규칙에 대한 순종, 개인적 이익에 앞서 공동선을 취하려는 시민적 정신과 의지, 개방 정신(건강한 회의론과 사회적·정치적 현실의 모호성 인정 포함), 타협 의지(가치와 원리는 종종 상충된다는 점을 이해), 다양성의 관용, 공공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인내와 참을성,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아량, 공화국과 공화국의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충성을 들 수 있다.

시민적 헌신은 근본 원리와 근본 가치로 나눌 수 있다. 시민교육을 받은 학생은 근본적 가치와 원리에 대해 자유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입헌 정부의 근본 원리로는 법의 지배,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다수의 지배 하에서 소수자의 권리 존중, 종교와 국가의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근본적 가치로는 공공선(공동선)과 개인의 권리(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정의, 평등, 다양성, 진실, 애국심 등)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요약컨대,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데 주요 목적이 있지만, 단순히 시민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능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배양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시민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하여 시민들이 옹호하는 모든 행동이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고무하

¹⁹ <<http://www.civied.org/civitasexec.html>>.

는 것은 아니다. 입헌 민주주의 자체가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공동선 등 근본적인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도 이러한 가치에 부합되는 정부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교육이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고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 측면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도록 훈련한다.

나. 평화교육: 영국을 중심으로

(1) 평화교육의 역사적 배경

전쟁과 평화는 시대와 사회를 떠나 주요 관심사로 존재해왔지만, 17세기 체코의 교육자인 코메니우스가 ‘교육을 통한 평화’에 대한 관심을 최초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⁰ 이후 19세기 말에 유럽에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개념이 도입되고, 평화협회가 공식화되면서 평화에 대한 태도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이런 노력은 1930년대 중반 영국의 세실 로버트(Cecil Robert)경이 국제평화운동(IPC)을 출범시키면서 행동지향적 운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 평화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에 대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갈등에 내재되어 있는 원인에 대한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파시즘의 등장으로 평화교육은 쇠퇴하였으며,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에 대해 재개된 관심(특히 핵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평화교육은 크게 2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

²⁰ Robert Aspeslagh and Robin J. Burns, “Approaching Peace Through Education: Background, Concepts and Theoretical Issues,” in Robin J. Burns and Robert Aspeslagh, *Three Decades of Peace Education Around the World: An Antholog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6).

주의(internationalism)에 초점을 맞추는 평화교육으로서, 국제주의 평화교육은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전 분야를 포괄하여 갈등(잠재적 갈등을 포함하여)을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평화교육은 평화달성의 결정적 방안으로 군축(disarmament)을 중요시하며, 군축을 통한 전쟁 방지(전쟁의 파괴력 감소를 포함하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국제주의 평화교육과 군축 평화교육은 우선순위에 따라 범주적으로 분류하는 것일 뿐,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군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전후 평화교육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UNESCO의 결성을 통해서 조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UNESCO는 1974년 「국제적 이해, 협력과 평화,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 관련 권고」를 채택했다. 여기서 국제적 이해, 협력, 그리고 평화는 민족과 국가간 우호적 관계의 원칙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평화교육은 평화협정체결 100주년을 기념하여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Hague Appeal for Peace Conference에서 Hague Appeal이 채택되고 세계평화교육운동(The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을 발족시키면서 또 한번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세계평화교육운동(The Global Campaign for Peace Education)을 위한 헤이그 호소문(Hague Appeal)은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IPB, 2004). 첫째, 모든 교육영역에 평화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중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정치적 지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화교육을 위해 교사에 대한 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20세기 초 로버트경이 국제평화운동을 추진하면서 근대 평화교육의 기초를 놓았으며, 오늘날 영국에서는 평화교육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평화교육은 과거 식민지 국가였으며 오늘날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제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인종·민족간 차이를 이해하

고 화합을 도모하는 등 국제주의가 영국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영국의 평화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달리 전담교사가 없을뿐더러 독립된 교과목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독립된 교과를 형성하고 있으며, 평화 관련 내용은 상당수가 민주시민교과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볼 때, 영국의 평화교육은 역사적 장구성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평화교육은 학교교육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 교과목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²¹ 좀더 구체적으로, 영어과목의 읽기와 쓰기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평화 관련 내용을 읽고 미래의 평화적 모습을 표현하도록 한다. 과학 과목에서도 과학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이해시킨다.

(2) 평화교육의 목적·목표·내용

IPB는 평화교육의 목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류는 대량파괴무기의 지속적 개발, 국가와 민족집단간 갈등, 인종차별의 확산, 공동체 폭력, 세계화된 경제에서 부자와 빈자간 차이의 심화, 대규모 인권위반, 그리고 환경의 악화 등 유례없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 이런 복합적이고 상호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화교육의 목표를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로 하여금 갈등의 기반을 인식하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시켜 준다. 둘째, 학습자로 하여금 모든 차원의 상호작용에서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시민으로 준비시켜 준다. 그리고 셋째, 교실을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소우

²¹ 한만길·길은배·강영혜·김학성·오해섭·최영표,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3-05 (2003).

주(microcosm)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상호의존, 사회정의, 그리고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지구적 가치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평화와 정의(peace and justice)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증진시키는 참여과정이다. 그러나 평화와 정의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접근방식이 따르고, 따라서 어떤 접근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평화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엘저(Alger)는 역사적으로 출현한 평화도구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II-2> 참조). 그에 의하면, 전통적으로는 외교와 힘의 균형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도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인권, 경제적 형평, 생태학적 균형 등 적극적 평화는 2차 대전 이후에 출현한 것이다.

<표 II-2> 평화 도구의 출현

	19세기	1919	1945	1950-1989	1990-	
소극적 평화	- 외교 - 힘의 균형	국제연맹조약 - 집단안보 - 평화적 해결 - 군축/ 무기통제	UN헌장 - 집단안보 - 평화적 해결 - 군축/ 무기통제	UN실행 - 집단안보 - 평화지키기 - 평화적 해결 - 군축/ 무기통제	UN 실행 - 집단안보 - 평화지키기 - 평화적 해결 - 군축/ 무기통제 - 인도적개입 - 예방적외교	NGOs/ 시민운동 Track II 외교 - 전환 - 방어적 방어
적극적 평화			- 기능주의 - 자기결정 - 인권 - 기능주의 - 자기결정 - 인권	- 기능주의 - 자기결정 - 인권 - 경제발달 - 경제적 형평 - 의사소통의 형평 - 생태학적 균형 - 공동선을 위한 통치	- 기능주의 - 자기결정 - 인권 - 경제발달 - 경제적 형평 - 의사소통의 형평 - 생태학적 균형 - 공동선을 위한 통치	비폭력 시민방어 주체 여권주의 시각 평화교육

주: 진한 글자는 새로이 출현한 평화도구임.

자료: C. F. Alger, "What Should Be the Foundations of Peace Education?," in Y. Iram, *Education of Minorities and Peace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ies* (London: Praeger, 1996), p. 47.

평화교육은 평화도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평화교육 또한 전통적으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즉, 대규모의 물리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즉,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물리적 폭력의 원인이 제반 사회적 차원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요한 갈통의 평화교육이 큰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평화교육은 전쟁의 원인과 전쟁을 방지하려는 국제조직의 노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개인적 폭력,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환경파괴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교육은 모든 차원에서 진행되는 상호작용의 건설·유지·회복, 개인적 차원에서 국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다루기 위한 긍정적 접근법 개발, 물질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안전한 환경 창출, 그리고 착취와 전쟁으로부터 유지가능한 환경의 유지 및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다. 독일의 정치교육

(1) 역사적 배경

독일은 영국이나 미국 등 서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민주주의적 전통이 짧은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크지도 못했고 시민권 획득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해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로 이식된 제도였을 뿐이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Schile, 1998)였고, 결국 나치즘의 등장으로 14년간 존속하는데 그쳤다.

독일이 본격적인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이 임박한 1945년에 개최된 포츠담 회의

에서 연합국 정상들은 나치즘과 군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국가사회주의의 재등장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전후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결국 독일의 정치교육(Staatsbürgerkunde)은 민주시민교육(Staatsbürgerliche)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초기에는 정치적 논쟁이나 활동보다는 공동체와 사회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공의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²²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면,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반공보다는 국가적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이르면 정치교육의 목표를 비판의식과 독립적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참여 능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변모하였다.

물론 독일의 정치교육도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주제는 학생, 타과목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외면당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전반적 염증때문이기도 했지만, 정치교육이 역사, 지리, 사회과학, 사회교육은 물론 정치학과 경제학 등 여러 교과에 분산됨으로써 체계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한편 정치교육의 내용이 타 교과에 분산됨으로써, 교사간 고도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배제하기 힘들다.

(2) 정치교육의 목적·목표·내용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²³ 다시 말해, 독일 시민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는 한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 가치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²² Derek Heater,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Falmer, 2004).

²³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 5.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독일 정치교육의 일차적 목적이다. 독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 아니라, 전후 연합국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폴뿌리’ 민주주의가 미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참여를 고조시키려는 의도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그리고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을 겪어 왔으며, 아직도 그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Meinardus는 이런 논쟁을 ‘합의모델’과 ‘갈등모델’로 범주화하여 설명하고 있다.²⁴ 합의모델이란 교육 대상들 즉, 독일국민들에게 이미 합의된 민주주의의 이점과 장점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와 충성심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갈등모델에서는 민주국가에서의 정치교육이란 항상 비판을 유도해야 하며 잘못된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결국 정치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란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합의와 동의 및 수용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그림으로써 사회갈등을 표출시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정치교육은 한편으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합의와 충성성이 공유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융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개의 모델은 상호 보완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고 제도와 절차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반면 견해와 태도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공존해 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정치교육은 이 둘을 조화할 수 있을 때 소기의

²⁴ Roland Meinardus, “독일의 성인 정치교육 및 한국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활동 상황”, 1998, 명지대 및 유럽연구소-함부르크대 정치학 연구소 공동 주최, 『독일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인가?』, 학술회의 자료집, pp. 21~28.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크게 계몽기능, 참여기능, 그리고 민주화 기능으로 축약할 수 있다.²⁵ 첫째는 계몽기능으로서, 독일시민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이 운영되는 과정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의 소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둘째는 참여기능으로서, 독일 시민은 정치교육을 통해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밝혀내고 정치적 참여와 결심을 통해 정치적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에 단순히 적응하는 수동적·소극적 시민이 아니라 갈등상황 하에서 문제의 핵심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치과정에 대한 효과적 참여를 도모한다. 그리고 셋째는 민주화기능으로서, 독일 정치교육은 나치주의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하였으며, 민주주의적 시민을 양성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결국 독일 정치교육의 지향점은 독일의 민주화에 있었으며, 초기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독일의 정치교육은 본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독일적 특수성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은 통일관련 교육이다. 서독은 양독간 전쟁의 경험이 없었으며, NATO 체제에 의해 안보가 확고히 보장되었으며, 또한 연합군 점령지로서 통일의 자결권이 미약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적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서독 역시 전후 분단국으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통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독일문제’라는 명칭의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통일방안에 따라 즉각적인 통일보다는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 과 자유로운 체제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²⁶ 좀더 구체적으로, 동독에

²⁵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p. 13~17.

²⁶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p. 22~23.

대해서는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추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유럽의 안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양독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며, 국내적으로는 독일 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해 통일독일의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되었다.

라. 외국 정치교육이 통일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

외국의 정치교육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치교육은 그 국가가 처해있는 구조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통일교육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분단된 국가의 경우 (명칭이야 어떻든)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을 우리의 통일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우리의 통일환경을 면밀히 비교검토했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통일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 정치교육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인권·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다수의 지배’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되는 가운데 통일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시민의 참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논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무되어야 한다. 다만 시민참여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통일관련 문제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갖춘 가운데 자유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겠다는 의지 그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신념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한다. 평화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안보의 문제이면서 또한 우리 삶의 일부를 구성한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중

요할 뿐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하여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평화의 문제가 일상생활의 문제라면, 평화에 대한 접근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 및 직장 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은 상대가 있으며 평화적 통일은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급격한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내적으로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민족공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한반도에 이해를 갖고 있는 주변국과 우호를 증진시키고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 등 사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역사적·국제적 관점에서 다룰 필요도 있다.

넷째, 통일문제는 개인의 일상사와 직결된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문제이며 따라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역할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와 소재를 개발·배포함으로써 통일문제의 일상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국의 정치교육은 전 사회에 확산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정치과정에 대한 기본지식과 태도를 교육받는다. 또한 각 교육단체들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 통일교육도 선진국의 정치교육 사례를 기반으로 통일교육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와 민간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상을 넓혀 나가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통일교육의 일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

가.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의 특징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통일관련 패러다임도 그 성격이 누적적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에 제시된 내용도 독창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통일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 연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반공안보교육 및 통일안보교육과 비교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통일교육시기 제시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논의를 검토·종합했다는 점에서 ‘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교육내용이 적극적 통일관의 함양을 지향한다. 반공안보교육기 및 통일안보교육기 모두 통일교육이 수세적 입장에서 진행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최근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도 통일의식을 고양하기보다는 탈분단, 평화공존, 혹은 민족화해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적극적 통일관은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적합한 통일관을 정립함으로써 어느 정도 ‘남남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패러다임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실시체계가 민관파트너십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과거 통일교육은 사실상 관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민간단체의 교육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재정지원 등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추진하는 통일교육은 그 동안 관이 추적해온 노하우와 다양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으로써 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의 세 번째 특징은 접근성 확산 모델로서, 통일문제를 사회 전반에 전달하는 방법을 중요시 한다. 정부와 민간 등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의 대상을 넓히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접근성 확산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접근은 물론 교육대상자들로부터의 접근성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환류(feedback) 과정을 포함하며, 통일교육 기자재와 자료의 보급은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중요시함으로써, 국민과 더불어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나. 통일교육의 목적 및 목표

통일지향 교육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통일의 성취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의 지를 함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통일문제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포함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올바른 통일관 형성의 기초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생은 분단과 우리의 삶, 통일의 역사적 의의, 국제사회의 동향, 북한의 실태와 변화, 그리고 남북간 관계 등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목적이 국민의 참여를 조장하는 것이지만, 참여는 무분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과 행동이 우리 사회와 통일문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나친 이기주의에 기초해서 반통일적 자세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어떤 체제로라도 통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통일지상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고 반대 견해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킴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한편 과도기적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공존공영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은 물론 북한과도 선린관계를 유지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육은 예단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할 필요도 없다.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균형의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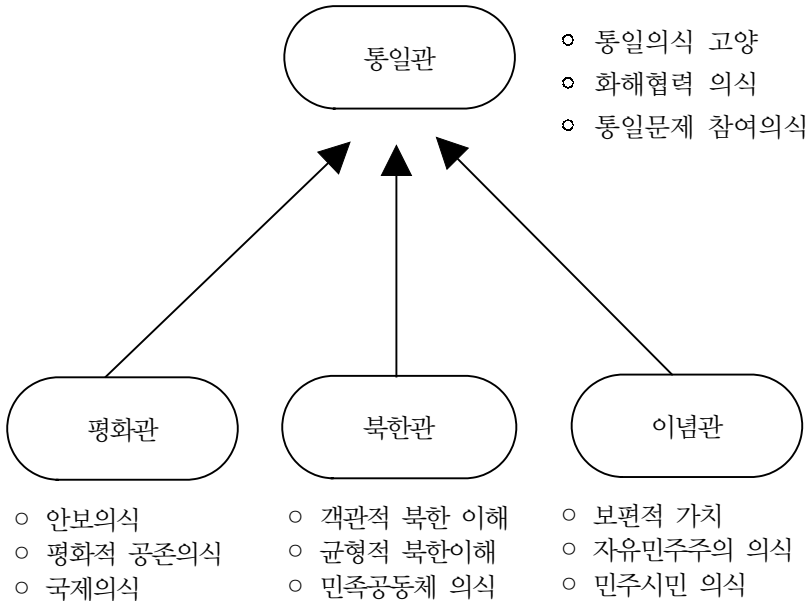
결국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의 당위성과 의지를 함양하는 가운데,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남북간 화해협력력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 세계문명사적 차원에서 통일의 의의와 국제환경,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안보의식을 함양하는 등 올바른 안보관, 북한관, 그리고 이념관을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둘 수 있다.

다. 통일교육 내용: 기본 방향

통일교육이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데 공헌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통일교육 또한 그러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은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여기에서는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으로 구분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⁷

²⁷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이라는 개념은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관, 안보관, 민족공동체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관 등은 범주(category) 개념으로 사용했으며, 내용상 안보관은 평화관, 민족공동체관은 북한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관은 이념관의 한 속성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지원법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2> 통일관의 구조



(1) **북한관: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균형된 지식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 객관적 이해 증진: 정치교육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교육은 구체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다른 체제나 문화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음’을 교육하는 것은 예단교육의 병폐이다. 가치중립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 체제나 문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교육생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균형된 이해 증진: 북한에 대한 교육은 특정 분야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편향적 지식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기존의 정치적·체제적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일반 주민 간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북한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다. 통일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분단 현실에서도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2) 평화관: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안보 의식과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안보의식의 고양: 국가의 일차적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세계 군사 강국의 이해가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평화달성의 일차적 조건이 국민의식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은 안보의식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평화공존 의식의 고양: 통일교육이 안보관을 함양한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가능성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전쟁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북한도 우리와 통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상대라면, 남북간 현존하고 있는 혹은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갈등해결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 국제의식의 고양: 세계화와 정보화 등 전지구적 변화로 인해 폐쇄적 민족주의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배타적 ‘민족공조’를 조장하기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국가와의 맹목적 공조를 지나치게 부각시킬 필요도 없지만, 집단운동 차원에서 백안시하는 방향이어서도 안된다.

(3) 이념관: 통일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하고,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 보편적 가치의 증진: 통일교육은 자유,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유와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 남한은 물론 북한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의식, 그리고 통일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신념 고취: 통일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이념은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고취는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며 정부의 ‘흡수통일 배제’ 원칙에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흡수통일 배제 원칙은 북한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의미일 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민주시민 의식: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고무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참여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설득과 타협,

다양성에 대한 존중, 소수가 보호되는 가운데서 다수의 견해 존중 등 민주시민의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파당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기초한 통일의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4) 통일관: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건전하고도 건설적인 통일관을 함양하는데 있다. 올바른 북한관과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은 바람직한 통일관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했을 때 배증될 것이다.

□ 통일외식 고양: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는 소극적 당위성에서부터 생활수준과 삶의 질 향상, 민족국가 건설의 완성과 통일한국의 위상 등 적극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 및 평화공존의 필요성은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하여 다를 수 있지만, 통일 자체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통일의지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이며, 무조건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화해협력 의식: 반세기 이상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남과 북이 통일에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남북통일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정치적·체제적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증진을 통해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의식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 통일문제 참여의식: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참여를 고무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국군에 대한 위문품 보내기,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운동 참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건전한 시민의식에 기초해야 한다.

라. 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의 확산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강의안도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대상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교육자가 교육생에게 접근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생 역시 교육자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급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 통일교육의 궁극적 수혜자는 국가이지만 일차적 수혜자는 교육대상인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자 중심이란 수요자의 관심을 반영하고 수요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이른바 ‘눈높이’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자의 성, 연령, 직업, 학력 수준 등 각 계층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도가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란 방법상의 문제일뿐 각 주제별 내용과 결론 등 핵심내용은 공급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교육은 공급자의 의도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 통일교육은 전달자의 강의와 수요자의 참여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전달자 중심의 일방적 교육은 수강자의 교육 동기화를 유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일교육은 수요자가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볼 때, 수강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참여 방법으로는 토론, 세미나 질의응답, 현장견학 등이 있을 수 있다. 기본지식은 강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단 교육생이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통일교육도 판문점 견학 등 현장체험의 기회가 부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간 관계의 발전과 맞춰 화해협력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라산 및 CIQ, 북한의 개방지역인 금강산과 개성공업단지,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 등 다양한 곳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집합교육(off-line)과 온라인(on-line)교육: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산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대상과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집합교육은 강사와 수강자간 대면접촉을 통해 친근성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지식과 심층적 지식은 집합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교육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방송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방송과 인터넷 교육은 전통적 집합교육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다. 방송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일방적 전달에 그칠 우려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경우,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거나(see) 게임을 할 수 있는(play)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인터넷 교육은 청소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교육은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일 수 있겠지만, 보수교육 등 교육생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동포 등 특수집단에 대한 교육도 on-line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마. 통일교육체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책임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관파트너십을 형성·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의 역할: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갖으며, 통일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학교 혹은 사회교육단체의 역할이다. 다만 과도기적 상황과 정부의 통일교육 경험 축적을 고려할 때, 정부도 특정 대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는 통일교육 기본 지침 작성 및 통일교육기관 지도·조정, 공무원, 통일교육 강사, 사회지도층 인사 등 파급 효과가 높은 교육대상자 교육, 교육자료 개발·보급, 통일교육 실시자(개인, 단체)에 대한 인정(recognition)·포상,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 학교의 역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영역에 속한다. 각급 학교는 유치원과정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기본지침에 의거 통일교육을 실시하며, 교사는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교육 연수에 참여한다. 물론 교사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통일교육지침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 민간단체의 역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대한 교육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사회교육단체의 역할이다. 각종 사회단체는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

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민간단체의 통일교육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통일교육 기본지침에 의거 실시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강사는 강사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통일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일교육 지침 작성에 반영하는 등 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 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대학원 설립

민관협조체제는 사안별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일교육센터의 설립 혹은 현재 통일부 소속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위상 재정립을 추구해 볼 수 있다. 통일교육센터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감독을 받지만 그 활동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 학교 교사, 사회통일교육 강사가 대표를 파견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하며, 통일교육 지침 작성, 통일교육 평가, 통일교육 교재 및 자료 발간, 통일교육 강사 양성 등 기존 통일부와 통일교육원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 연구 및 강사양성을 전담하는 통일교육대학원을 부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소결

소련의 붕괴와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등 세기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통일환경은 급격히 변해왔다. 통일환경의 격변은 한편으로는 긍정적 통일여건을 조성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 결집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통일 무관심이 확산되어 있으며 통일기피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퍼주기’ 논쟁, 북

한의 변화에 대한 논쟁, 한·미관계에 대한 논쟁 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전한 토론의 장을 벗어난 ‘남남갈등’은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모델이며,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모델이고, 통일교육을 각계각층에 파급시키는 모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의 목적·목표와 관련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는 등 적극적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의식의 고취 등 올바른 안보관, 북한관, 그리고 이념관을 확립하는데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은 통일의식과 화해협력 의식을 고양시키며, 통일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심어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균형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도록 한다. 평화관과 관련해서는 평화공존의식과 국제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남북은 물론 세계 각국과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남북간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안보의식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키는 한편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심어줘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관심사이며 통일교육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수요자의 관심과 지적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의 병행으로 기초지식의 전달 및 교육 동기 유발, 집합교육(off-line)과 온라인(on-line)교육의 병행으로 기본지식의 심층화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해 통일교육의 확산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통일교육은 민관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민간과 관이 상호작용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개선하고 통일교육 강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대학원 설립 등 통일교육을 전담할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통일교육의 위상정립과 효율적 추진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 제시된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제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종합적이며 일반적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확산체계는 각각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에서 제시될 것이다.

III

통일교육에 관한 의견조사 분석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목적과 내용

본 조사는 전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0년의 6·15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 지속적인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통일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태도는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북한·통일관”, “북한주민·북한청소년관”,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통일관”은 북한·통일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조사항목은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북한·통일문제 대화상대,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 통일의 예상시기, 북한·통일관련 정보 입수경로,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정도 평가, 대북 지원에 대한 의견, 통일의 장애요인,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주민·북한청소년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북한주민·북한청소년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북한 대중매체 접촉경험을 다루었다. 세부 조사항목은 북한주민관, 북한주민의 남한주민관 평가, 북한주민의 생활상 이해도 평가,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과 이미지,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과 접촉경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에서는 학교 및 학교 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북한관련 교육의 방식과 내용 및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나. 조사의 방법

(1) 조사의 방법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남녀 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표집은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뒤(서울·경인권·충청·강원권·영남권·호남권), 각 권역별 모집단의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학교는 성별(남·녀), 학교계열(인문계·실업계)을 기준으로 학교명부에 의거한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최종 조사대상이 된 학교는 모두 25개교였다. 학교가 선정된 뒤에는 각 학교별로 1~3개 학급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집단조사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실시 후 회수된 설문지는 총 1,950매였으며,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1,751매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조사결과의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확률은 $*=p<0.05$, $**=p<0.01$, $***=p<0.001$ 로 표기하였다.

(2) 표본의 특성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표본(1,751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자가 52.8%로서 남자(47.2%)보다 다소 많았으며, 학교계열별로는 인문계가 68.5%, 실업계가 31.5%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시군부(서울·광역시 제외)가 50.3%로서 가장 많았고, 광역시가 28.3%로서 그 다음이고 서울이 21.4%로서 가장 적었다. 부친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고(50.5%),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26.7%), 중학교 졸업 이하(12.3%)의 순이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7.0%)과 전문대학 졸업(3.5%)은 1할 미만이었다.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

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응답결과를 보면,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58.8%로 서 다수를 점하였고, 중간 이상보다는 중간 이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더 많았다.

<표 III-1> 표본의 특성

		빈도(명)	비율(%)
전체	계	1,751	100.0
	성별		
	남자	827	47.2
	여자	924	52.8
학교 계열	인문계 고등학교	1,200	68.5
	실업계 고등학교	551	31.5
거주 지역	서울	375	21.4
	광역시	495	28.3
	시군부	881	50.3
부친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9	12.3
	고등학교 졸업	856	50.5
	전문대학 졸업	59	3.5
	대학교 졸업	453	26.7
	대학원 졸업 이상	118	7.0
가정의 생활수준 평가	매우 못 사는 편	81	4.6
	중간보다 못 사는 편	400	22.9
	중간 수준	1,029	58.8
	중간보다 잘 사는 편	219	12.5
	매우 잘 사는 편	20	1.1

(3) 독립변인

조사결과 분석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인은 “성”(남·녀), “학교계열”(인문계·실업계), “지역”(서울·광역시·시군부)과 더불어 응답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한 “사회계층”의 네 가지이다. “사회계층”은 “부친의 학력”과 “가정의 생활수준 평가”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조작적으로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결과와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여 음수이면 0, 양수이면 1점을 부여한 뒤 두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상층(2점), 중간층(1점), 하층(0점)의 세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결국 사례 107명을 제

외한 표집인원 1,644명 중에서 상층이 517명(31.4%), 중간층이 794명(48.3%), 하층이 333명(20.3%)으로 나타났다.

2. 조사의 결과

가. 북한·통일관 일반

(1) 북한·통일문제 관심과 의견

(가)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평소에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가 45.2%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약간 관심이 있다”(35.5%), “전혀 관심이 없다”(12.2%)의 순이었으며,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으로서(42.6%)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북한·통일문제 관심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47.4%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38.4%)보다 1할 정도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는데(44.1% : 39.6%), 실업계의 경우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6.8%에 달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고, 계층별로는 세 하위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전 체		12.2	45.2	35.5	7.1
성별	남자	12.6	40.0	38.7	8.7
	여자	11.8	49.8	32.7	5.7
계열	인문고	10.0	45.9	37.4	6.7
	실업고	16.8	43.6	31.5	8.1

※ 통계: 성별 $\chi^2 = 18.81^{***}$, 계열 $\chi^2 = 19.40^{***}$

(나) 북한·통일문제 대화 상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있는지, 있다면 주로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청소년의 7할 정도가 “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하여 북한·통일문제가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화상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가 10.7%로서 가장 많았고, “부모님”(7.2%), “학교선생님”(8.1%), “형제·자매”(3.6%) 등은 모두 1할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북한·통일문제의 대화상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률이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실업계 고교생들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과 대화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인문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의 “부모님” 응답률과 하층의 “형제·자매”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모든 계층에 걸쳐 “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할 안팎의 대다수를 점유하였다.

<표 III-3> 북한·통일문제 대화 상대

(단위: %)

		부모님	형제 자매	학교 선생님	친구나 선·후배	대화 상대가 없다
계		7.2	3.6	8.1	10.7	70.4
성별	남자	7.0	3.9	8.2	9.8	71.0
	여자	7.4	3.3	8.0	11.6	69.7
계열	인문고	6.9	2.3	7.7	11.1	72.0
	실업고	8.0	6.3	8.9	10.0	66.9
계층	하	6.5	6.5	7.4	10.5	69.1
	중	6.5	3.5	8.6	11.0	70.3
	상	8.9	1.6	7.9	10.5	71.1

※ 통계: 성별 $\chi^2 = 2.00$, 계열 $\chi^2 = 19.30^{**}$, 계층 $\chi^2 = 16.53^*$

(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

통일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선택지로 제시된 항목을 각각 “통일우선론”(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점진적 통일론”(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상유지론”(통일이 되기보다는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으로 유형화하고 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 “점진적 통일론”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6할 수준에 달하여 가장 다수였고(59.3%), “현상유지론”(21.3%)과 “통일우선론”(19.4%)은 2할 안팎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편, 통일의 시기보다는 방법과 절차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통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분단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통일우선론”의 응답률이 25.8%로서 여자(13.6%)의 2배 수준에 달하였고, 반면 “현상유지론”의 응답률은 여자가 남자를 크게 앞서고 있었다(25.2% : 17.0%). 계열별로는 “현상유지론”의 응답률이 실업계가 26.6%로서 인문계(18.9%)보다 높은 한편, “점진적 통일론”의 응답률은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1할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통일우선론”의 응답률은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점진적 통일론”에서는 상층의 응답률이 65.2%에 달하여 5할 대에 머문 중간·하층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전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점진적 통일론”의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적인데, 이것은 사회안정을 중시하는 그들 부모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

(단위: %)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전 체		19.4	59.3	21.3
성별	남자	25.8	57.2	17.0
	여자	13.6	61.2	25.2
계열	인문고	18.8	62.3	18.9
	실업고	20.7	52.7	26.6
	하	19.9	58.3	21.8
계층	중	21.2	55.5	23.3
	상	16.1	65.2	18.7

※ 통계: 성별 $\chi^2 = 47.93^{***}$, 계열 $\chi^2 = 16.63^{***}$, 계층 $\chi^2 = 12.08^*$

(라)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 평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 지를 “매우 높다”에서 “매우 낮다”에 이르는 단계별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6.7%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30.5%), “대체로 낮다”(15.6%), “매우 높다”(9.4%)의 순이었고, “매우 낮다”는 응답은 7.7%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46.1%)이 낮다는 응답(23.3%)의 두 배 수준에 달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별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률은 남녀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45.8%, 46.5%),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자가 29.4%에 달하여 여자(17.7%)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유보적인 태도(“그저 그렇다”)를 나타낸 청소년이 남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반면, 여자는 낮다는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북한을 보다 위협적이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

(단위: %)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낮다	매우 낮다
전 체		9.4	36.7	30.5	15.6	7.7
성별	남자	11.6	34.2	24.7	18.6	10.8
	여자	7.5	39.0	35.8	12.8	4.9
계열	인문고	8.1	36.6	31.1	16.2	8.0
	실업고	12.3	36.9	29.4	14.3	7.2

※ 통계: 성별 $\chi^2 = 56.40^{***}$, 계열 $\chi^2 = 8.57$

(마) 통일의 예상 시기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쯤 실현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가 46.9%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23.3%), “5~10년 정도”(21.9%), “3~5년 정도”(6.5%)의 순이었으며,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은 극소수(1.5%)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은 통일의 문제를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서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사회적인 혼란이 없는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표 III-4> 참조).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다수인 점은 공통되지만, 여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6.7%에 달하여 남자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에 비해 실업계가, 계층별로는 상층에 비해 중·하층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II-6> 통일의 예상시기

(단위: %)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3~5년 정도 걸릴 것이다	5~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5	6.5	21.9	46.9	23.3
성별	남자	2.3	8.0	21.8	48.4	19.5
	여자	0.8	5.0	22.0	45.6	26.7
계열	인문고	1.0	5.4	23.6	50.7	19.3
	실업고	2.6	8.8	18.1	38.6	31.9
계층	하	2.1	5.7	21.5	42.3	28.4
	중	1.4	7.5	20.3	47.5	23.3
	상	0.8	5.9	23.5	50.5	19.3

※ 통계: 성별 $\chi^2 = 23.21^{***}$, 계열 $\chi^2 = 54.84^{***}$, 계층 $\chi^2 = 15.72^*$

(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네 가지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 44.0%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에”(35.5%),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16.8%)의 순이었으며, “북한의 경제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3.6%). 통일의 당위성을 단순한 민족논리보다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의 응답률이 인문계가 47.2%에 달하여 실업계(37.2%)보다 1할 정도 높았으며, 반면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의 응답률은 실업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밖에 성별로는 남자, 계층별로는 상층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선택한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7>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경제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전 체		35.5	44.0	16.8	3.6
성 별	남자	33.9	46.1	16.3	3.7
	여자	37.0	42.1	17.3	3.6
계 열	인문고	35.8	47.2	13.7	3.3
	실업고	34.9	37.2	23.7	4.3

※ 통계: 성별 $\chi^2 = 3.03$, 계열 $\chi^2 = 31.33^{***}$

(2)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가) 북한·통일관련 정보 입수 경로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TV·라디오”를 통해서 입수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4.3%로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이어서 “학교수업(통일관련 교육)”(17.3%), “인터넷”(10.9%), “신문”(5.6%)의 순이었으며, “잡지·일반서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1.8%). TV·라디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또한 오랜 시간 접촉하는 매체이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와 더불어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보매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지역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는 “학교수업(통일관련 교육)”, 남자는 “신문”, “인터넷”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남학생들은 학교수업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북한·통일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는 “TV·라디오”, 광역시는 “학교수업(통일관련 교육)”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북한·통일관련 정보 입수 경로

(단위: %)

		학교 수업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일반서적	인터넷
전 체		17.3	64.3	5.6	1.8	10.9
성별	남자	13.6	64.5	7.1	1.6	13.1
	여자	20.7	64.2	4.3	1.9	8.9
계열	인문고	17.7	64.1	5.5	1.8	10.9
	실업고	16.5	64.9	5.9	1.7	10.9
지역	서울	16.9	63.7	8.9	1.1	9.4
	광역시	22.8	58.8	4.5	3.1	10.7
	시군부	14.4	67.7	5.0	1.3	11.7

※ 통계: 성별 $\chi^2 = 25.66^{***}$, 계열 $\chi^2 = 0.51$, 지역 $\chi^2 = 32.68^{***}$

(나)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4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정·긍정을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의 긍정응답률이 49.9%로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딱딱하고 재미 없는 주제이다”(45.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41.7%)의 긍정응답률이 4할을 상회하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3.9%로서 가장 소수였다.

<표 III-9>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태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13.0	53.1	27.5	6.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	11.4	46.8	34.7	7.0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9.2	40.9	43.9	6.0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	11.8	42.8	36.8	8.6

각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35.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남자(32.6%)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 계열별로는 실업계(38.1%)의 긍정응답률이 인문계(32.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하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0> 통일문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5.9	51.5	23.9	8.7
	여자	10.3	54.4	30.9	4.3
계열	인문고	14.1	53.9	26.5	5.5
	실업고	10.6	51.2	29.7	8.4

※ 통계: 성별 $\chi^2 = 31.30^{***}$, 계열 $\chi^2 = 10.43^*$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44.1%로서 여자(39.7%)보다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44.7%로서 인문계(40.4%)를 상회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많은 편이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11> 통일문제 “성인들의 문제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1.4	46.8	34.7	7.0
성 별	남자	11.5	44.4	34.7	9.4
	여자	11.3	49.0	34.8	4.9
계 열	인문고	12.5	47.1	34.6	5.8
	실업고	9.2	46.2	35.0	9.7

※ 통계: 성별 $\chi^2 = 14.62^{**}$, 계열 $\chi^2 = 11.70^{**}$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51.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48.1%)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 계열별로는 실업계의 긍정응답률이 55.3%에 달하여 인문계(47.3%)와 큰 격차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서울,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2> 통일문제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9.2	40.9	43.9	6.0
성별	남자	10.8	41.1	39.6	8.5
	여자	7.8	40.7	47.7	3.8
계열	인문고	10.3	42.3	42.3	5.0
	실업고	7.0	37.8	47.2	8.1

※ 통계: 성별 $\chi^2 = 26.20^{***}$, 계열 $\chi^2 = 13.87^{**}$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46.4%로서 남자(44.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계열별로는 실업계의 과반수(50.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인문계(43.0%)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중·하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3> 통일문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1.8	42.8	36.8	8.6
성별	남자	12.9	42.8	34.0	10.3
	여자	10.8	42.8	39.3	7.1
계열	인문고	13.3	43.6	36.2	6.8
	실업고	8.4	41.1	38.0	12.5

※ 통계: 성별 $\chi^2 = 9.99^*$, 계열 $\chi^2 = 22.10^{***}$

(다) 통일문제 관심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증진을 위하여 어떤 정책대안이 바람직한지를 조사하였다. 모두 5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중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이 78.7%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이어서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69.9%)의 순이었으며,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58.9%)과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58.0%)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III-14>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 방안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10.7	31.3	51.1	6.9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0.4	30.7	48.0	10.9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	8.2	21.9	50.5	19.4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	7.0	14.3	42.6	36.1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	8.9	19.6	43.8	27.7

각 정책항목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60.0%로서 남자(55.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계열별로는 인문계(59.7%)가 실업계(54.4%)를 상회하였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와 광역시,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5>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체		10.7	31.3	51.1	6.9
성별	남자	13.4	30.7	48.4	7.5
	여자	8.2	31.8	53.7	6.3
계열	인문고	9.5	30.8	51.5	8.2
	실업고	13.4	32.2	50.5	3.9

※ 통계: 성별 $\chi^2 = 13.88^{**}$, 계열 $\chi^2 = 15.72^{**}$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61.7% : 55.7%),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61.1% : 54.0%) 각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중·상층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6>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 참여 기회 제공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체		10.4	30.7	48.0	10.9
성별	남자	12.8	31.5	45.0	10.7
	여자	8.2	30.0	50.7	11.0
계열	인문고	9.5	29.4	48.7	12.4
	실업고	12.5	33.5	46.4	7.6

※ 통계: 성별 $\chi^2 = 11.85^{**}$, 계열 $\chi^2 = 13.24^{**}$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가 73.3%로서 남자(66.3%)를 크게 상회하였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각각 73.9%, 61.4%).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가 광역시·서울보다, 계층별로는 상층과 하층이 중간층에 비해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7>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 실시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체		8.2	21.9	50.5	19.4
성별	남자	10.5	23.2	47.0	19.3
	여자	6.1	20.6	53.8	19.5
계열	인문고	6.7	19.4	51.1	22.8
	실업고	11.4	27.2	49.3	12.1

※ 통계: 성별 $\chi^2 = 15.28^{**}$, 계열 $\chi^2 = 41.50^{***}$

“금강산 방문 등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
의 차이는 성·계열·지역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
인되었다. 각 하위집단별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먼저 성별로는 여자가
82.5%로서 남자(74.7%)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81.4%로서 실업계
(73.0%)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지역별로는 시군부의 긍정응답률이 80.7%
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77.7%), 서울(75.3%)의 순이었다. 계층별
로는 상층과 하층이 중간층에 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은 편
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18>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체		7.0	14.3	42.6	36.1
성별	남자	9.8	15.6	40.6	34.1
	여자	4.4	13.1	44.5	38.0
계열	인문고	5.8	12.8	41.3	40.1
	실업고	9.6	17.4	45.4	27.6
지역	서울	9.2	15.5	46.3	29.0
	광역시	7.8	14.5	40.2	37.5
	시군부	5.6	13.6	42.5	38.2

※ 통계: 성별 $\chi^2 = 22.33^{***}$, 계열 $\chi^2 = 30.14^{***}$, 지역 $\chi^2 = 13.86^*$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에 대한 하위집단
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77.9%에 달하여 남자(64.4%)를 크게 상회하였고, 계열별로는 인문계
(74.4%)가 실업계(65.0%)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광역
시,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19> 탈북 주민·청소년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단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체		8.9	19.6	43.8	27.7
성별	남자	11.8	23.8	39.0	25.4
	여자	6.2	15.8	48.1	29.8
계열	인문고	7.1	18.4	43.6	30.8
	실업고	12.7	22.3	44.0	21.0

※ 통계: 성별 $\chi^2 = 39.88^{***}$, 계열 $\chi^2 = 28.41^{***}$

(3) 통일관련 주변 정세에 대한 이해

(가) 북한의 변화 정도 평가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약간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46.6%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별로 변함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38.7%에 달한 반면, “크게 변화하였다”, “전혀 변함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모두 1할에도 못 미쳤다(각각 8.3%, 6.4%). 전체적으로 과반 수 이상의 청소년들이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55.2%, 54.6%),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56.7%에 달하는 반면, 실업계는 50.8%에 머물렀다. 이밖에 북한이 변화했다는 응답률에서 광역시가 다른 두 지역(서울·시군부)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0> 북한의 변화정도 평가

(단위: %)

		전혀 변함이 없다	별로 변함이 없다	약간 변화하였다	크게 변화하였다
전 체		6.4	38.7	46.6	8.3
성별	남자	7.7	37.1	45.5	9.7
	여자	5.2	40.2	47.6	7.0
계열	인문고	5.9	37.4	49.4	7.3
	실업고	7.6	41.6	40.5	10.3

※ 통계: 성별 $\chi^2 = 9.41^*$, 계열 $\chi^2 = 13.68^{**}$

(나) 북한 핵무기 개발 위협 평가

최근에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약간 위협적이다”가 47.1%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매우 위협적이다”(28.7%),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17.6%)의 순이었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6.6%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위협적 (“매우”+“약간”)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5.8%에 달하여 위협적이지 않다 (“전혀”+“별로”)고 응답한 청소년(24.2%)의 세 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80.9%로서 남자(70.3%)보다 1할 이상 많았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77.1% : 75.1%).

<표 III-21>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 평가

(단위: %)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약간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
전 체		6.6	17.6	47.1	28.7
성별	남자	10.2	19.6	39.8	30.5
	여자	3.3	15.8	53.7	27.2
계열	인문고	6.1	18.8	48.5	26.6
	실업고	7.7	15.1	43.8	33.3

※ 통계: 성별 $\chi^2 = 52.81^{***}$, 계열 $\chi^2 = 11.99^{**}$

(다) 대북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한 의견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 인지를 단계별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수준이 바람직 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3%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축소되 어야 한다”(27.4%), “확대되어야 한다”(16.5%)의 순이었으며 크게 축소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할 미만에 머물렀다(각각 7.8%, 5.5%). 전체적으로 현 수준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 변화할 경우 확대보다 는 축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1할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21.5%, 35.2%).

대북 지원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에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자가, 확 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 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대북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단위: %)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축소되어야 한다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	확대되어야 한다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전 체		7.8	27.4	43.3	16.0	5.5
성 별	남자	10.1	24.9	40.5	17.2	7.2
	여자	5.7	29.6	45.9	14.8	4.0
계 열	인문고	8.0	27.0	43.9	16.2	4.9
	실업고	7.4	28.2	42.1	15.5	6.8

※ 통계: 성별 $\chi^2 = 26.89^{***}$, 계열 $\chi^2 = 3.18$

(라) 통일의 장애가 되는 국가

통일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변정세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5개국 및 “잘 모르겠다”는 응답항목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미국이 69.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북한”(10.9%)과 “잘 모르겠다”(10.8%)가 1할 남짓한 수준이었으며, “일본”(5.0%), 중국(3.3%), “러시아”(0.7%)의 응답률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우리와 직접 대립하고 있는 북한보다 미국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남북분단의 주된 요인을 외세의 간섭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전쟁의 당사자였지만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근년에 미군장갑차사건,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반미감정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국가간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차 인식이 호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계열·지역·계층의 네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북한”, 여자는 “미국”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계열별로는 미국의 응답률이 인문계가 74.1%로서 실업계(58.8%)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으며, 실업계는 유보적인 태도(“잘 모르겠다”)를 나타낸 청소년이 상당수에 이르렀다(17.8%). 지역별로는 서울이 “중국” 응답률은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낸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상층은 “북한”, “미국”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중·하층은 “일본”의 응답률이 상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23> 통일에 장애가 되는 국가

(단위: %)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잘 모르겠다
전 체		10.9	69.3	5.0	3.3	0.7	10.8
성별	남자	12.2	67.0	5.6	4.9	1.0	9.5
	여자	9.8	71.4	4.5	1.9	0.4	12.1
계열	인문고	11.1	74.1	4.0	2.8	0.4	7.7
	실업고	10.4	58.8	7.3	4.4	1.3	17.8
지역	서울	11.6	69.4	5.0	5.0	1.7	7.4
	광역시	12.8	68.2	5.5	2.4	0.4	10.7
	시군부	9.6	69.8	4.8	3.1	0.5	12.3
계층	하	10.0	67.4	6.6	2.4	1.5	12.1
	중	10.1	68.4	5.3	3.5	0.6	12.0
	상	12.6	72.6	3.7	3.7	0.4	6.9

※ 통계: 성별 $\chi^2 = 20.73^{***}$, 계열 $\chi^2 = 63.45^{****}$, 지역 $\chi^2 = 19.60^*$, 계층 $\chi^2 = 20.20^*$

(마)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6.9%로서 과반수를 훨씬 상회한 반면, 약 1/4 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도 못 미쳤다(7.8%).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현행 한·미동맹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SOFA개정 및 미군기지 이전관련 보도 등을 통하여 현행 한·미동맹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자가 70.2%로서 남자(63.3%)를 상회하였으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9.1%, 6.7%).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교생의 71.9%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5할 수준의 실업계의 응답률(56.2%)과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실업계(13.9%)가 인문계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

<표 III-24>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단위: %)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재검토 되어야 한다
전 체		7.8	25.2	66.9
성별	남자	9.1	27.6	63.3
	여자	6.7	23.1	70.2
계열	인문고	5.0	23.1	71.9
	실업고	13.9	29.9	56.2

※ 통계: 성별 $\chi^2 = 9.55^{**}$, 계열 $\chi^2 = 57.26^{***}$

(바)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부분적인 철수가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8.8%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17.4%)의 세 배 수준에 달하였다. 한편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전체의 1/3 수준에 달하여(33.8%),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고교생의 과반수(50.9%)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고교생은 44.2%에 머물렀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실업계가 더 많았다.

<표 III-25> 주한미군 재배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체		48.8	33.8	17.4
성별	남자	49.1	31.9	19.1
	여자	48.5	35.6	15.9
계열	인문고	50.9	31.6	17.5
	실업고	44.2	38.7	17.1

※ 통계: 성별 $\chi^2 = 4.23$, 계열 $\chi^2 = 8.87^*$

(사) 남북한 평화공존의 저해요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6.9%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북한과 미국의 비타협적 대결”이 각각 2할 남짓한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21.4%, 20.1%), “한국의 부적절한 대북정책”의 응답률이 11.6%에 머물러 가장 소수였다. 미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하여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북 평화공존의 저해요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응답률이 인문계가 50.4%로서 실업계(39.3%)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인 반면, “북한·미국의 비타협적 대결”, “한국의 부적절한 대북정책” 등 다른 항목을 선택한 청소년은 실업계가 더 많았다. 이밖에 지역별로 서울시 다른 두 지역에 비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6> 남북한 평화공존의 저해요인

(단위: %)

		북한의 핵개발 의지	미국의 대북 강경책	북한·미국의 비타협적 대결	한국의 부적절한 대북정책
전 체		21.4	46.9	20.1	11.6
성별	남자	20.8	46.7	19.7	12.7
	여자	21.9	47.1	20.5	10.5
계열	인문고	20.2	50.4	18.7	10.8
	실업고	24.1	39.3	23.2	13.4

※ 통계: 성별 $\chi^2 = 2.20$, 계열 $\chi^2 = 18.17^{***}$

나. 북한주민 및 북한청소년관

(1) 북한주민관

(가) 북한주민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북한주민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함께 살 동포”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5.9%로서 다수였고, 이어서 “적이자 동포”(27.9%), “무관심의 대상”(12.2%) 순이었으며 “대치하는 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4.0%).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약 3할 정도가 아직도 적대적인 관개로 인식하고 있고, 아예 무관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이 1할 이상에 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주민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인문계 고교생의 59.4%가 “함께 살 동포”라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교생의 응답률(48.2%)과 큰 격차를 나타내었고, 반면에 “대치하는 적”이라는 응답률은 실업계가 인문계의 배 이상에 달하였다(6.3%, 3.0%). 대체로 인문계 고교생이 실업계에 비해 북한주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함께 살 동포”라는 응답률은 성별로는 남자, 지역별로는 서울,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7> 북한주민관

(단위: %)

		함께 살 동포	대치하는 적	적이자 동포	무관심의 대상
전 체		55.9	4.0	27.9	12.2
성별	남자	58.0	4.4	25.4	12.2
	여자	54.0	3.7	30.2	12.2
계열	인문고	59.4	3.0	26.2	11.4
	실업고	48.2	6.3	31.6	13.9

※ 통계: 성별 $\chi^2 = 5.23$, 계열 $\chi^2 = 23.90^{***}$

(나) 북한의 남한주민관 평가

앞서의 문항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북한주민은 우리(남한주민)를 어떻게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적이자 동포”라는 응답률이 38.2%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함께 살 동포”(30.6%), “대치하는 적”(18.9%)의 순이었으며 “무관심의 대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2.3%로서 가장 적었다. 앞서 문항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청소년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북한주민들이 보다 적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주민관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함께 살 동포”로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응답률이 남자가 33.9%로서 여자(27.6%)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대치하는 적”, “적이자 동포”의 응답률은 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북한주민이 우리(남한주민)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서울,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함께 살 동포”의 응답률이 높고, “대치하는 적”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8> 북한주민이 보는 남한주민

(단위: %)

		함께 살 동포	대치하는 적	적이자 동포	무관심의 대상
전 체		30.6	18.9	38.2	12.3
성별	남자	33.9	21.4	31.9	12.7
	여자	27.6	16.5	44.0	11.9
계열	인문고	29.2	19.2	39.6	12.0
	실업고	33.6	18.1	35.2	13.1

※ 통계: 성별 $\chi^2 = 27.43^{***}$, 계열 $\chi^2 = 4.82$

(다) 북한주민의 생활상 이해도 평가

자신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별로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3.6%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약간 알고 있다”(37.2%), “전혀 알지 못한다”(15.1%)의 순이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4.1%)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북한주민의 생활상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전혀”+“별로”)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할 수준에 달하였다(58.7%).

북한주민 생활상의 이해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43.5%로서 남자(38.8%)보다 높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42.2% : 39.2%).

<표 III-29> 북한주민의 생활상 이해정도

(단위: %)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약간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전 체		15.1	43.6	37.2	4.1
성별	남자	18.5	42.7	33.6	5.2
	여자	12.0	44.5	40.4	3.1
계열	인문고	12.4	45.4	38.6	3.6
	실업고	20.9	39.8	34.1	5.1

※ 통계: 성별 $\chi^2 = 22.13^{***}$, 계열 $\chi^2 = 24.83^{***}$

(2) 북한청소년관

(가)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

자신이 느끼는 북한청소년에 대한 친근감을 단계별 4점 척도를 통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50.6%), 다음으로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27.4%), “친근하게 느껴진다”(20.3%)의 순이었으며,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8%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친근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이 8할 수준에 달하여(78.0%), 북한과의 접촉·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업계 고교생의 22.2%가 북한청소년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인문계(21.9%)보다 근소하게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응답률도 실업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교생 내에서도 북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계층별로는 중·상층 청소년들이 하층 청소년에 비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30>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

(단위: %)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전 체		27.4	50.6	20.3	1.8
성별	남자	29.4	49.3	19.2	2.1
	여자	25.6	51.7	21.2	1.4
계열	인문고	25.7	52.4	20.9	1.0
	실업고	31.3	46.5	18.9	3.3

※ 통계: 성별 $\chi^2 = 4.50$, 계열 $\chi^2 = 18.53^{***}$

(나)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들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격·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모두 6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정·긍정 여부를 단계별 4점 척도에 의거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전체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표 III-31>과 같다. 6가지 항목 중에서 “근면하다”와 “인내심이 강하다”의 긍정응답률이 7할 수준에 달하여(각각 68.6%, 68.1%) 가장 높았으며, “겸손하다”에 대해서도 과반 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평화적이다”(30.3%), “합리적이다”(29.8%), “믿을 수 있다”(28.8%)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3할 안팎의 소수에 머물렀다.

<표 III-31>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전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화적이다	16.1	53.6	29.1	1.2
합리적이다	15.5	54.7	28.1	1.7
근면하다	8.9	22.5	58.8	9.8
겸손하다	9.7	33.2	52.1	5.0
믿을 수 있다	18.1	53.0	26.4	2.4
인내심이 강하다	8.4	23.5	51.7	16.4

북한청소년의 이미지에 대한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화적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 성 변인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33.4%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긍정응답률(27.6%)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2>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평화적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6.9	49.7	31.7	1.7
	여자	15.3	57.1	26.8	.8
계열	인문고	14.6	55.1	29.0	1.4
	실업고	19.3	50.4	29.4	.9

※ 통계: 성별 $\chi^2 = 11.57^{**}$, 계열 $\chi^2 = 7.26$

“합리적이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와 차이는 모든 변인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남자, 계열별로는 실업계, 지역별로는 시군부와 광역시, 계층별로는 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33>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합리적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5.7	51.5	30.8	2.0
	여자	15.4	57.6	25.6	1.5
계열	인문고	14.7	56.7	26.7	1.9
	실업고	17.3	50.5	30.9	1.3

※ 통계: 성별 $\chi^2 = 7.62$, 계열 $\chi^2 = 7.33$

“근면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7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실업계는 53.8%에 머물렀고,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75.0%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66.9%), 하층(63.5%)의 순이었다. 이밖에 성별로는 여자, 지역별로는 시군부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4>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근면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0.0	23.6	57.0	9.4
	여자	7.9	21.5	60.4	10.2
계열	인문고	6.5	18.1	63.9	11.5
	실업고	14.0	32.2	47.7	6.1
계층	하	8.0	28.5	54.3	9.2
	중	9.5	23.6	57.0	9.9
	상	8.1	16.8	65.1	9.9

※ 통계: 성별 $\chi^2 = 4.11$, 계열 $\chi^2 = 84.20^{***}$, 계층 $\chi^2 = 18.67^{**}$

“겸손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문계 고교생의 59.0%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52.8%에 머문 실업계의 긍정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성별로는 여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35>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검손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1.1	34.2	49.9	4.9
	여자	8.5	32.4	54.0	5.1
계열	인문고	7.8	33.2	53.7	5.3
	실업고	14.0	33.1	48.6	4.2
계층	하	10.1	33.5	53.4	3.0
	중	9.6	33.8	50.4	6.2
	상	9.7	31.6	53.5	5.1

※ 통계: 성별 $\chi^2 = 4.61$, 계열 $\chi^2 = 17.52^{**}$

“믿을 수 있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32.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25.3%에 머물러 남자가 상대적으로 북한청소년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계층별로는 중간층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6>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믿을 수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20.0	47.2	29.3	3.4
	여자	16.4	58.4	23.8	1.5
계열	인문고	16.4	54.3	26.8	2.5
	실업고	21.7	50.5	25.6	2.2

※ 통계: 성별 $\chi^2 = 24.84^{***}$, 계열 $\chi^2 = 7.09$

“인내심이 강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인문계 고교생의 71.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실업계의 긍정응답률(60.3%)을 1할 이상 상회하였다. 이밖에 성별로는 여자,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시군부, 계층별로는 중·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37> 북한청소년의 이미지 “인내심이 강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9.3	23.5	50.5	16.7
	여자	7.5	23.5	52.8	16.2
계열	인문고	6.5	21.8	53.8	18.0
	실업고	12.5	27.1	47.2	13.1

※ 통계: 성별 $\chi^2 = 2.17$, 계열 $\chi^2 = 29.29^{***}$

(다) 차별 경험과 북한청소년관

우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의 다양한 성격·행동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약자에 대한 차별경험이 그들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미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시론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상생활에서의 약자에 대한 차별경험 유무와 그 정도를 네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차별유형에서 경험자의 비율 중 “약한 친구를 왕따시킨 경험”이 45.2%로서 가장 많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차별한 경험”이 15.4%에 머물러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유형 이상의 차별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65.7%에 달하여 한번도 차별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34.3%)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

<표 III-38>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 %)

	전혀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약한 친구를 왕따시킨 경험	54.8	42.2	3.0
생활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차별한 경험	84.6	14.1	1.3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차별한 경험	79.5	18.2	2.4
장애인을 차별한 경험	61.4	34.3	4.3

이와 같은 일상생활 과정에서의 차별경험 유무를 독립변인(무경험 집단·경험자 집단)으로 하여 앞서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 “북한청소년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결과의 평균값(최소값 1~최대값 4)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에서는 무경험 집단의 평균값이 1.99로서 경험자 집단의 평균값(1.95)을 상회하여,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북한청소년의 이미지와 관련한 6항목의 응답결과의 평균값은 “평화적이다”의 한 항목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차별 무경험 집단의 평균값이 2.22로서 경험자집단의 평균값(2.12)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합리적이다”, “근면하다”, “겸손하다”, “믿을 수 있다”의 4개 항목에서 무경험 집단이 경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차별 경험 유무와 북한청소년관

		평균값	표준편차	
북한청소년에 대한 느낌	무경험	1.99	0.73	F=1.36
	유경험	1.95	0.75	
평화적이다	무경험	2.22	0.70	F=7.41 **
	유경험	2.12	0.69	
합리적이다	무경험	2.20	0.70	F=3.12
	유경험	2.14	0.69	
근면하다	무경험	2.70	0.75	F=0.13
	유경험	2.69	0.78	
겸손하다	무경험	2.56	0.74	F=2.02
	유경험	2.50	0.74	
믿을 수 있다	무경험	2.18	0.73	F=3.39
	유경험	2.11	0.72	
인내심이 강하다	무경험	2.75	0.82	F=0.50
	유경험	2.76	0.82	

(3) 북한 대중매체 접촉경험

(가) 북한 대중매체 접촉경험

최근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과 더불어 과거에는 일반인에게 금지되었던 북한 대중매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은 과연 북한 대중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직접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관심도 없고, 접해 본 경험도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2.6%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관심은 없지만, 접해 본 경험은 있다”(28.9%), “관심은 있지만, 접해 본 경험은 없다”(20.6%)의 순이었고, “관심도 있고, 접해 본 경험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도 못 미쳤다(8.0%).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 대중매체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청소년은 28.6%로서 소수에 불과한데, 이것은 사회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입견과 거부감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36.9%가 북한 대중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과반 수 이상이 접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 및 접촉경험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계열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북한 대중매체를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인문계가 39.4%로서 실업계(31.6%)보다 많은 반면,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실업계가 31.4%로서 인문계(27.3%)를 앞서고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은 성별로는 여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하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40>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과 접촉 경험

(단위: %)

		관심도 없고, 접해 본 경험도 없다	관심은 없지만, 접해 본 경험은 있다	관심은 있지만, 접해 본 경험은 없다	관심도 있고, 접해 본 경험도 있다
전 체		42.6	28.9	20.6	8.0
성별	남자	43.2	31.2	18.3	7.3
	여자	42.0	26.8	22.6	8.6
계열	인문고	40.8	32.0	19.9	7.4
	실업고	46.4	22.2	22.0	9.4

※ 통계: 성별 $\chi^2 = 7.68$, 계열 $\chi^2 = 17.74^{***}$

(나) 북한 대중매체 접촉에 대한 의견

북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그렇지 않다”(29.6%), “전혀 그렇지 않다”(12.6%)의 순이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6%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57.8%), 청소년들이 북한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지만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61.3%로서 남자(54.0%)보다 많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61.4%로서 실업계의 응답률(50.2%)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표 III-41> 북한 대중매체 접촉과 통일문제 관심 증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2.6	29.6	50.2	7.6
성별	남자	15.4	30.5	46.4	7.6
	여자	10.0	28.7	53.7	7.6
계열	인문고	11.2	27.4	53.7	7.7
	실업고	15.6	34.2	42.8	7.4

※ 통계: 성별 $\chi^2 = 15.04^{**}$, 계열 $\chi^2 = 20.40^{***}$

다.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

(1) 학교통일교육 방식

(가) 학교통일교육 방식

현재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이 47.8%로서 가장 다수였고, “강의식 수업”이 그 다음이었으며(34.3%), “토론·토의식 수업”(9.9%)과 “현장견학·체험학습”(8.1%)의 응답률은 1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방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계열·지역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계열별로는 “강의식 수업”의 응답률은 인문계가, “토론·토의식 수업”과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은 실업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군부는 “시청각자료 활용수업”, 광역시는 “강의식 수업”의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42> 현행 학교의 통일교육 방식

(단위: %)

		강의식 수업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	토론·토의식 수업	현장견학·체험학습
전 체		34.3	47.8	9.9	8.1
성별	남자	33.2	48.0	9.3	9.5
	여자	35.2	47.6	10.3	6.9
계열	인문고	37.6	47.7	8.2	6.5
	실업고	27.1	47.9	13.4	11.6
지역	서울	30.5	54.1	7.6	7.9
	광역시	41.3	38.5	10.2	10.0
	시군부	31.7	50.6	10.6	7.1

※ 통계: 성별 $\chi^2 = 4.16$, 계열 $\chi^2 = 32.05^{***}$, 지역 $\chi^2 = 27.86^{***}$

(나)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식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61.1%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23.5%), “토론·토의식 수업”(10.4%)이었으며, “강의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0%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바람직한 북한·통일교육 방식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층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여자가 65.5%로서 남자(56.3%)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고,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의식 수업”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III-43> 바람직한 통일교육 방식

(단위: %)

		강의식 수업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	토론·토의식 수업	현장견학·체험학습
전 체		5.0	23.5	10.4	61.1
성별	남자	6.2	25.8	11.8	56.3
	여자	3.8	21.5	9.1	65.6
계열	인문고	4.3	23.0	11.2	61.5
	실업고	6.4	24.6	8.6	60.4
계층	하	2.8	20.8	11.2	65.2
	중	7.2	24.2	9.3	59.4
	상	2.8	24.6	11.4	61.2

※ 통계: 성별 $\chi^2 = 17.00^{**}$, 계열 $\chi^2 = 5.91$, 계층 $\chi^2 = 19.59^{**}$

(2) 학교통일교육의 평가

(가) 학교통일교육의 평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5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하게 하였다.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85.7%에 달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81.4%),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75.7%),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75.5%)의 순이었으며, “교육시간이 부족하다”의 긍정응답률이 63.8%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4> 학교통일교육 평가 전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	4.9	19.6	54.2	21.3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9.3	26.9	45.0	18.8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	4.5	14.1	56.2	25.2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4.1	20.1	51.4	24.3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3.1	11.2	52.4	33.3

학교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한 각 항목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하위집단별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가 76.3%로서 남자(74.6%)보다 다소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77.0%로서 실업계(72.2%)를 상회하였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서울·광역시가 시군부에 비해,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각각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5> 통일교육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6.8	18.6	48.8	25.8
	여자	3.1	20.6	59.2	17.1
계열	인문고	4.0	18.9	53.6	23.4
	실업고	6.8	21.1	55.5	16.7

※ 통계: 성별 $\chi^2 = 35.85^{***}$, 계열 $\chi^2 = 14.19^{**}$

“교육시간이 부족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녀의 긍정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64.1% : 63.5%) “매우 그렇다”고 응답

한 청소년이 남자가 24.0%에 달하여 여자(13.9%)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긍정응답률이 68.5%로서 실업계(53.7%)를 크게 상회하였고,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69.8%로서 가장 높고 이어서 중간층(62.7%), 하층(57.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응답률이 광역시·시군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6> 통일교육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1.6	24.2	40.1	24.0
	여자	7.1	29.5	49.6	13.9
계열	인문고	7.6	23.9	46.9	21.6
	실업고	12.9	33.3	41.0	12.7
계층	하	11.9	30.5	43.1	14.5
	중	9.5	27.8	44.4	18.3
	상	7.2	23.0	47.0	22.8

※ 통계: 성별 $\chi^2 = 45.14^{***}$, 계열 $\chi^2 = 41.38^{***}$, 계층 $\chi^2 = 17.17^{**}$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계층의 세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83.5%로서 남자(79.1%)보다 많았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84.0%로서 실업계(76.0%)를 크게 상회하였다. 계층별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상층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I-47> 통일교육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5.7	15.2	49.4	29.7
	여자	3.4	13.1	62.5	21.0
계열	인문고	3.2	12.9	55.7	28.3
	실업고	7.3	16.7	57.2	18.8
계층	하	6.3	12.3	59.8	21.5
	중	4.4	15.2	56.9	23.5
	상	3.3	12.3	53.6	30.8

※ 통계: 성별 $\chi^2 = 31.83^{***}$, 계열 $\chi^2 = 30.81^{***}$, 계층 $\chi^2 = 16.02^*$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남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77.1% : 74.2%),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긍정응답률이 77.1%로서 실업계(70.2%)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 밖에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8> 통일교육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6.0	19.9	45.9	28.3
	여자	2.4	20.4	56.5	20.6
계열	인문고	3.6	18.1	52.0	26.3
	실업고	5.3	24.5	50.0	20.2

※ 통계: 성별 $\chi^2 = 31.61^{***}$, 계열 $\chi^2 = 15.67^{**}$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다(각각 87.9% : 83.5%, 86.6%, 83.9%).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9> 통일교육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4.8	11.7	44.7	38.8
	여자	1.4	10.8	59.7	28.2
계열	인문고	2.4	11.0	50.4	36.2
	실업고	4.5	11.6	56.7	27.2

※ 통계: 성별 $\chi^2 = 48.60^{***}$, 계열 $\chi^2 = 17.03^{**}$

(나) 학교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을 비교해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여(각각 52.7%, 51.0%)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42.2%),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40.1%),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이해”(39.8%)의 순이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긍정응답률이 33.7%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50> 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	15.6	42.1	39.3	2.9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	15.4	44.5	37.9	2.2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	14.2	34.8	46.0	5.0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17.2	49.1	31.3	2.4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13.3	34.0	45.9	6.8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이해	16.5	43.7	36.1	3.7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가 43.6%로서 여자(41.6%)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하층이 각각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응답률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1> 통일교육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9.1	37.4	40.1	3.5
	여자	12.5	46.5	38.6	2.4
계열	인문고	16.4	40.3	40.4	2.9
	실업고	13.9	46.0	37.1	3.0

※ 통계: 성별 $\chi^2 = 21.52^{***}$, 계열 $\chi^2 = 5.22$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의 41.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여자(38.7%)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하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2> 통일교육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 별	남자	18.8	39.5	38.5	3.1
	여자	12.3	49.1	37.3	1.4
계 열	인문고	16.4	42.5	39.0	2.1
	실업고	13.4	48.7	35.5	2.5

※ 통계: 성별 $\chi^2 = 25.89^{***}$, 계열 $\chi^2 = 6.53$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에서도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52.1%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50.0%)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계열별로는 인문계,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3> 통일교육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6.7	33.3	44.1	5.9
	여자	11.8	36.1	47.8	4.3
계열	인문고	14.6	32.8	47.3	5.3
	실업고	13.2	39.1	43.2	4.5

※ 통계: 성별 $\chi^2 = 11.35^*$, 계열 $\chi^2 = 6.34$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가 36.6%로서 여자(31.0%)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4> 통일교육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20.8	42.6	33.1	3.5
	여자	13.9	55.1	29.6	1.4
계열	인문고	17.8	47.3	32.6	2.3
	실업고	15.8	52.9	28.6	2.6

※ 통계: 성별 $\chi^2 = 33.85^{***}$, 계열 $\chi^2 = 5.13$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53.5%로서 남자(51.8%)보다 다소 높았으며,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긍정응답률이 55.5%에 달하여 실업계(46.5%)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시군부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 이어서

광역시, 서울의 순이었으며, 계층별로는 상층이 중·하층에 비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5>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6.5	31.7	43.3	8.5
	여자	10.4	36.1	48.3	5.2
계열	인문고	13.6	30.9	47.7	7.8
	실업고	12.8	40.7	42.0	4.5

※ 통계: 성별 $\chi^2 = 22.63^{***}$, 계열 $\chi^2 = 18.88^{***}$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42.0%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응답률(37.8%)을 상회하였고, 계열별로는 인문계의 긍정응답률이 42.1%로서 실업계(34.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상층의 긍정응답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56> 통일교육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자	19.9	38.1	37.4	4.6
	여자	13.3	48.9	34.9	2.9
계열	인문고	17.3	40.6	38.1	4.0
	실업고	14.9	50.3	31.6	3.2

※ 통계: 성별 $\chi^2 = 26.04^{***}$, 계열 $\chi^2 = 13.80^{**}$

(다) 학교 북한교육의 북한 실상 반영 여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과연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55.8%),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21.3%), “그렇다고 생각한다”(19.2%)의 응답률이 2할 안팎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7%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77.1%에 달하여 긍정응답률(22.9%)의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녀 모두 7할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특히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의 응답률이 남자가 25.4%로서 여자(17.5%)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학교 북한교육의 북한 실상 반영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전 체		21.3	55.8	19.2	3.7
성별	남자	25.4	50.7	19.7	4.2
	여자	17.5	60.4	18.8	3.3
계열	인문고	20.6	57.8	18.4	3.2
	실업고	22.7	51.3	21.2	4.9

※ 통계: 성별 $\chi^2 = 20.82^{***}$, 계열 $\chi^2 = 7.72$

(라)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평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평가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이 “유익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고(49.4%), 다음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다”(29.2%), “유익하다”(19.4%)의 순이었으며, “매우 유익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로서 극소수에 머물

렸다. 전체적으로 유의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 수준에 머물러(21.4%),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현행 학교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계열의 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전혀 유의하지 않다”의 응답률이 남자가 32.8%로서 여자(29.5%)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계열별로는 인문계가 실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의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표 III-58>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평가

(단위: %)

		전혀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전 체		29.2	49.4	19.4	2.0
성별	남자	32.8	45.4	19.2	2.6
	여자	25.8	53.1	19.7	1.4
계열	인문고	29.5	49.7	19.5	1.2
	실업고	28.5	48.7	19.2	3.6

※ 통계: 성별 $\chi^2 = 15.20^{**}$, 계열 $\chi^2 = 10.41^*$

(3) 학교 외 통일·북한교육 경험

(가) 학교 외 기관 통일교육 이수경험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4%에 머물러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통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지역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서울·시군부가 각각 89.1%, 87.7%에 달하는 반면, 광역시는 79.3%에 불과하여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이수 경험

(단위: %)

		있다	없다
전 체		14.4	85.6
성별	남자	13.5	86.5
	여자	15.3	84.7
계열	인문고	15.4	84.6
	실업고	12.4	87.6
지역	서울	10.9	89.1
	광역시	20.7	79.3
	시군부	12.3	87.7

※ 통계: 성별 $\chi^2 = 1.05$, 계열 $\chi^2 = 2.68$, 지역 $\chi^2 = 22.66^{***}$

(나) 미경험자의 통일교육 참여의사

앞서 문항에서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통일·북한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다”(36.1%), “전혀 그렇지 않다”(15.9%)의 순이었고,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0%로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으로서(42.1%), 과반 수 이상이 통일·북한관련 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 참여의사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 결과는 성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44.3%가 교육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39.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계열별로는 인문계, 지역별로는 광역시, 계층별로는 중간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다소 많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60> 통일교육 참여 의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9	42.0	36.1	6.0
성별	남자	20.4	40.0	32.7	6.9
	여자	11.6	43.9	39.4	5.1
계열	인문고	14.1	43.4	36.4	6.2
	실업고	19.5	39.3	35.6	5.6
지역	서울	15.9	41.4	37.6	5.1

※ 통계: 성별 $\chi^2 = 25.96^{***}$, 계열 $\chi^2 = 7.71$

(다) 학교 외 통일교육 주관기관

학교 외 타기관의 북한·통일관련 참여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였다.

먼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한 교육에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정부·공공기관”의 응답률이 41.8%로서 가장 많았고, “기타”(24.0%)와 “청소년단체”(21.6%)가 2할 남짓한 수준이었고, “일반 시민단체”의 응답률이 12.5%로서 가장 낮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1> 자신이 참여한 통일교육 주관기관

	빈도 (명)	비율 (%)
전 체	208	100.0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45	21.6
일반 시민단체(YMCA, YWCA, 흥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26	12.5
정부·공공기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원, 시·도교육청 등)	87	41.8
기 타	50	24.0

교육의 내용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 유익했다고 생각하는지 단계별 4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익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7.1%로서 가장 많았고, “유익하지 않았다”가 41.8%로서 그 다음이었으며,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와 “매우 유익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에도 못 미치는 소수였다.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평가하는 청소년이 절반 정도로서(50.0%), 교육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2> 학교 외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평가

	빈도(명)	비율(%)
전 체	208	100.0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17	8.2
유익하지 않았다	87	41.8
유익했다	98	47.1
매우 유익했다	6	2.9

청소년들이 어떤 계기로 해당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학교·선생님의 추천”이 60.2%로서 가장 다수였고, 이어서 “청소년단체의 추천”(17.0%), “스스로 판단해서”(11.2%)라는 응답이 1할을 넘었으며, “부모님·가족의 권유” 또는 “친구·친지의 권유”로 참가했다는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각각 6.8%, 4.9%).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통일·북한관련 교육이 대부분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자원해서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63> 학교 외 통일교육 참여 계기

	빈도(명)	비율(%)
전 체	206	100.0
학교·선생님의 추천	124	60.2
청소년단체의 추천	35	17.0
부모님·가족의 권유	14	6.8
친구·친지 권유	10	4.9
스스로 판단해서	23	11.2

학교 외 기관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시청각자료 활용 교육”이 절반 정도로서 가장 많았고(49.8%), 이어서 “강의식 교육”(21.3%), “초청인사 특강·강연”(14.0%), “현장견학·체험학습”(10.1%)의 순이었으며, “토론·토의식 교육”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4.8%).

<표 III-64>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방식

	빈도(명)	비율(%)
전 체	207	100.0
강의식 교육	44	21.3
시청각자료 활용 교육	103	49.8
토론·토의식 교육	10	4.8
현장견학·체험학습	21	10.1
초청인사 특강·강연	29	14.0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반나절 이하”였다는 응답이 75.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루 종일”(13.5%), “2~3일 정도”(7.7%)의 순이었으며, “4~5일 정도”,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에 머물렀다(각각 1.4%, 2.4%). 학교 밖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북한관련 교육이 대부분 하루 이내의 단기간 교육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65> 학교 외 기관의 통일교육 일정

	빈도(명)	비율(%)
전 체	208	100.0
반나절 이하	156	75.0
하루 종일	28	13.5
2~3일 정도	16	7.7
4~5일 정도	3	1.4
일주일 또는 그 이상	5	2.4

교육 참여경험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33.7%), “전혀 그렇다”(22.9%)의 순이었으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4%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43.4%에 머물러 과반수에도 못 미쳤다.

<표 III-66> 학교 외 통일교육 재참여 의사

	빈도(명)	비율(%)
전 체	205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47	22.9
그렇지 않다	69	33.7
그렇다	84	41.0
매우 그렇다	5	2.4

3. 조사결과 요약

가. 북한·통일관

청소년들의 과반 수 이상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고(42.6%), 일상생활에서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이 7할을 상회하였다(70.4%). 대화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10.7%), 부모나 학교선생님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으로서는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는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59.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분단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할 수준

에 달하였다(21.3%). 분단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그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46.1%)이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23.3%)의 두 배 수준에 달하였다.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6.9%에 달하는 반면, 5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1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44.0%),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를 주로 입수하는 주된 경로는 TV·라디오(64.3%)였으며, 인터넷(10.0%)의 응답률이 신문(5.6%)이나 잡지·일반서적(1.8%)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여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와 더불어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보매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45.4%)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응답률은 3할 수준에 머물러(33.9%),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서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78.7%)과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의 응답률이 각각 7할을 상회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서적이거나 영상, 강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체험보다는 북한 현지방문이나 인적 교류를 통한 직접적인 북한체험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인하여 북한이 변화하

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접하고 있지만(54.9%),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에 대해서는 75.8%가 위협적이라고 응답하여,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다수였고(43.3%), 확대보다는 축소를 원하는 청소년이 1할 이상 많았다(각각 21.5%, 35.2%).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로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69.3%), 다음이 “북한”(10.9%)이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할 미만이었다.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6.9%에 달하여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7.8%)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부분적인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1/3 수준이었고(33.8%), 오히려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도 17.4%에 이르러 전체 청소년의 과반수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6.9%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북한의 핵개발 의지”(21.4%), “한국의 부적절한 대북정책”(11.6%)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물렀다.

미국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 한국사회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북한주민·북한청소년관

북한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함께 살 동포”라는 의견이 55.9%로서 과반수를 접하였고, “적이자 동포”라는 생각하는 청소년은 소수인 반

면(27.9%), 북한주민은 우리(남한주민)를 어떻게 인식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이자 동포”라는 응답률이 38.2%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함께 살 동포”(30.6%), “대치하는 적”(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북한주민들이 보다 적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할 수준에 달하였다(58.7%).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할 남짓한 반면, 전체의 절반이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고(50.6%), 1/4 이상이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27.4%)고 응답하였다. 북한과의 접촉·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북한청소년에 대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를 모두 6가지의 성격·행동 특성을 제시하여 조사한 결과, “근면하다”와 “인내심이 강하다”의 긍정응답률이 7할 수준에 달하여(각각 68.6%, 68.1%) 가장 높았으며, “검손하다”에 대해서도 과반 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평화적이다”(30.3%), “합리적이다”(29.8%), “믿을 수 있다”(28.8%)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은 3할 안팎의 소수에 머물렀다.

북한 대중매체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할 미만의 소수에 머물렀고(28.6%), 실제로 북한 대중매체에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6.9%에 불과하였다.

북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상회하여(57.8%), 북한 대중매체에 접촉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통일·북한관련 교육경험

현재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이 47.8%로서 가장 다수였고, “강의식 수업”이 그 다음이었으며(34.3%), “토론·토의식 수업”(9.9%)과 “현장견학·체험학습”(8.1%)의 응답률은 1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바람직한 북한·통일관련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61.1%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23.5%), “토론·토의식 수업”(10.4%)이었으며, “강의식 수업”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5.0%에 불과하여 가장 적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북한·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희망과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5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하게 한 결과 “학생들의 관심 부족”의 응답률이 85.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학습자료·교재의 미흡”(81.4%), “선생님의 전문성 부족”(75.7%),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75.5%), “교육시간이 부족하다”(6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 걸쳐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전반적으로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1/5 수준에 머물렀다(21.4%).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모두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로 긍정응답률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가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여(각각 52.7%, 51.0%)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음으로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이해”(42.2%),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40.1%),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이해”(39.8%)의 순이었으

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의 긍정응답률이 33.7%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77.1%),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북한의 실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4%에 불과하여 학교 이외 기관에서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통일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외 기관에서의 통일교육 이수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으로서(42.1%), 과반 수 이상이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참여한 학교 외 북한·통일관련 교육의 주관기관은 “정부·공공기관”이 다수를 차지하였고(41.8%), 참여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학교·선생님이나 청소년단체의 추천(각각 60.2%, 17.0%)으로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은 소수에 머물렀다(11.2%). 학교 외 기관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은 주로 “시청각자료 활용 교육”(49.8%), “강의식 교육”(21.3%)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교에서의 교육방식과 유사하였고, 교육기간은 대부분 “반나절 이하”(75.0%) 또는 “하루” 정도(13.5%)로서 단기간 교육에 편중되어 있었다.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 정도(50.0%)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43.4%).

4.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북한·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으로서(42.6%)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통일무관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험·경험학습을 도입하는 등 지식전달 및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 점차 탈정치화·탈이데올로기화 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북한·통일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그간의 통일교육은 노력에 비하여 그 성과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지향 교육은 무엇보다도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어야 한다.

나.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가 44.0%로 가장 많았다. 과거와 달리 통일의 당위성을 단순한 민족논리보다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을 단순히 한 민족, 한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보다는 분단 상태의 지속과 통일국가 형성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강점과 약점의 비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이 기초가 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 중·장기적 비전을 갖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통일문제를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서 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사회적인 혼란이 없는 점진적인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청소년층의 이러한 의식은 최근 들어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즉, 통일문제가 우리사회의 절대적 명제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서독의 사례를 통하여 급진적 통일의 문제점을 목도하였고, 통일문제가 대입시를 비롯한 여가 생활보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주제라는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사안으로 부각시키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통일지향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 실현 가능한 통일교육의 도구 개발보다는 점진적이지만 피교육 대상자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의 개발이 더 중요해 보인다.

라. TV,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층의 북한·통일관련 정보 입수 경로로 TV·라디오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또한 오랜 시간 접촉하는 매체이기 때문인 듯하다. 또한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전통적인 인쇄매체의 응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와 더불어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정보매체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 다

양한 통일교육 방법이 개발·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학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 중심의 지식전달 교육을 탈피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주요 공간, 방법 등과 관련한 새로운 추진 전략이 포함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45.4%),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41.7%),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33.9%)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주제의 교육이 교실 속에서 강의 위주로 진행될 때 더욱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통일교육의 추진 방법에 대한 질문 결과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78.7%),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69.9%) 순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통일문제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바. 통일문제는 국내문제이면서 국제적 수준의 정치·군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통일과정에서 남북 당사자간의 협의·합의 등은 중시하고 있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국가로 미국을 지적하고 있는 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10.9%)보다도 미국

(69.3%)을 더 큰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66.9%)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근거에는 미군장갑차사건, 이라크 파병문제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반미감정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감성보다는 이성을 갖고 북한·통일문제를 조망할 때 미국의 역할은 결코 등한시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국내 환경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도 중요하다는 이중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사. 공공-민간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보다 사회통일교육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일교육에 참가한 청소년은 14.4%에 불과하고, 주관기관 역시 민간기관(12.5%)보다 “정부·공공기관”(41.8%)이 월등히 앞서고 있지만 대체로 사회통일교육의 참가 경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통일교육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선생님의 추천”(60.2%)을 통해서 참가하고 있어,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통일교육 역시 대부분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학교 단위의 참가가 제한된다면 청소년 대상의 사회통일교육은 더욱 미진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와 사회통일 교육기관, 그리고 공공-민간 사회통일교육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 평화·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긍·부정적 시각 형성과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를 왕따시켜 본 경험, 약자를 괴롭혀본 경험 등은 서로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청소년들의 일상생활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북한·통일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반드시, 북한사회 및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이해 교육만이 긍정적 북한·통일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또 다른 통일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은 통일지향 교육을 논의하는 것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IV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

1.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가. 통일교육의 목표

(1) 2004 통일교육의 목표

(가) 통일교육의 목표와 실제

현재 2004년도 통일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⁸ 통일교육의 목표는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자유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안보관 정립,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 등이다.

여기서 통일교육의 실천과제는 ‘객관적 북한이해를 통한 남북관계 이해 능력 제고’, ‘평화 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극복’,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원칙과 내용에 초점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²⁸ 통일부, 『2004통일교육지침서』 (2003), pp. 3~9.

<표 IV-1>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교통일교육의 원칙

학교 통일 교육의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고취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 배양	
학교 통일 교육의 내용	통일관 - 통일의 당위성 -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 ○ 평화정착의 중요성 ○ 교류 협력의 필요성	북한관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 분야별 북한실태 및 동향에 대한 지식 - 민족공동체 의식 - 남북공조의 의의
		평화관 - 국가안보의 중요성 - 평화적 통일 의식 - 동북아 공존공영 및 한미공조의 의의
		이념관 - 보편적 가치를 통한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 - 자유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 - 국민적 합의의 의의

전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원칙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 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관’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인식하는 길은 2가지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급한 것은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지를 수업을 통해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관계 및 변화에 대해 그때그때 현안대로 인식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표면적인 북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남북한 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북한관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분야별 북한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지식, 민족 공동체 의식, 남북 공조의 의의를 아는 것이다.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실현의지의 함양’은 ‘새로운 민족 구성원에 대

한 인식 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적 합의와 실천 인식’을 통해 의미 있는 통일교육의 미래적 지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통일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의 통일 환경과 통일 정책은 현재 불투명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남한 시민, 북한 동포, 해외 동포 등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민족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평화관’은 통일교육의 평화적 지향을 함양하는 인식의 강화를 요구한다. 평화적 인식 강화는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안보 의식을 뛰어 넘어 보다 한 차원 높은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편협한 안보의식은 너무도 보수적이며 수구적인 인식으로 팽배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태도는 남북한 갈등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평화적 남북 변화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한 대치의 상황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 우리 한민족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평화관을 함양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군 중심적 인식에 대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상황 인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은 현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미적 인식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통해 통일 문제 접근을 노력함과 동시에 그 변화가 지나친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은 전통적인 한미공조에 대해 새로운 정립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올바른 평화 통일관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념관’은 ‘자유 민주주의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의 학교통일교육의 원칙을 향해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실천의 생활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실천적인 평화 공간으로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및 참여 의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하여 평화의지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 사회에서의 조그만 민주주의 의식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와 갈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의의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반목 그리고 경쟁의 그늘 아래 경쟁적 사회를 구성하던 대중 사회에서 벗어나 사회적 혼돈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이 갖는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면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 남북한 공동의 시민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관’,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을 잘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이 바람직한 통일관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안보관과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려는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다. 즉, 통일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점차로 희박해지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 관계에서의 갈등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나) 통일교육의 목표 수행을 위한 과정 수행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이해는 평화정착의 중요성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동향을 잘 인식하여 통일교육의 진척을 탄력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은 학제적 접근을 통해 중점적 목표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전개할 필요가 있다.

<표 IV-2>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 중점적 목표

이념관	이념관	이념관
북한관	북한관	
평화관		북한관
		평화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선 학교통일교육은 그 내용의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에 대한 비증을 초·중·고등학교 간에 그 학교급 특성상 비증을 달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평화관 실천’은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참여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북한관 실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객관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또한 고등학생들에게는 통일의 미래 지향적인 ‘안보관 의지의 함양’을 강화한다. 이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은 건전한 안보관에서 비롯되며 민족 이해와 화합 차원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다.

나. 대상별 통일교육 표준 교재 개발

유, 초등학교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일례로 학생 스스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는 평화적 입장으로 거듭나야 했다. 이에 통일교육 표준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화한다.

첫째, 학교, 학급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화 실천 사례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교 공간은 평화를 실천하는 장소이다. 학교통일교육은 학교에서의 자율적 의사소통, 집단 따돌림(왕따) 및 인권 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

해 유,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기초적 평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학생들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일례로 자유와 평등, 인권을 강조하는 평화적 입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통일교육 표준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화한다.

통일된 남북한 시민들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민주 시민 의식 및 실천 강화를 위한 내용 개발에 힘쓴다.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상당한 남북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바뀔 만큼 우리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북한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교육은 새로움의 시도나 변화에만 치중하는 것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그 자체가 기존에서의 변화와 지속적인 면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중학교 통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통해 자유, 평등, 인권을 구현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민주 시민상을 제시한다.

셋째, 고등학생들은 통일 지향적, 민족 통합적 지향의 관점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현실적 기반에 둔 미래적 전망의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바람직한 민족 공동체 실현의지를 함양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북한 인식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과 더불어 객관적인 비판을 시도한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강대국의 정책을 민족 통합의 상승적인 기초로 만드는 작업을 전개하여 남남갈등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물론 새로운 국민 통합적 입장에서 강구한다.

남북한간의 평화와 협력의 자세 및 통일 실현의지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과거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적으로는 부적응 및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민족적 통합으로의 진척에 중요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 인식 및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는 국민 참여시대에 요구되는 민족통합에서의 부

적응 요인과 지체 현상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와 협력을 건설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 가능한 남북 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체로 국내적 상황을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민족 통합적 남북관계의 진척은 역동적인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족 내부의 여러 이견들의 논의 속에서 국민 참여를 통한 통합방안을 전개하는 것이다.

다.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목표 및 변화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통일관련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표 IV-3>에 서와 같다.

<표 IV-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교육 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러한 과정적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야 할 통일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민족공동체의 기초를 지향하는 통일관

통일의 준비와 진척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남북한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통일논의는 일단은 분단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 당국에 의한 경제적 의미이든, 문화적 의미로 민족 공동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남북한 민족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의식적인 구호나 정략보다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일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교류가 조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통일지향의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교실에서도 민족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모호한 갈등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 방안은 거시적인 통일교육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족 평화 지향적인 새로운 체제로의 각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족동질성 지향의 북한관

통일은 진정한 의미의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변화의 기초를 교육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는 민족 통합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저항적 세력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 분위기가 건전하게 조성되고 용인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통합교육은 민족내부 속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은 민족 전체적으로 갈등적인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민족통합교육의 지향은 민족사이 속에서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 보다 충분한 국제환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의 민족통합교육은 스펀디가 말한 ‘창조적 파괴’나 민족 갱신의 인식이 새롭게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3) 평화와 안보를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평화관

그 동안의 통일노력은 ‘북한의 침략의도에 대항하려는 국방력의 강화’를 강화하는 안보와 통일이 연계된 힘에 근거한 안보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지향은 피상적으로 볼 때 민족통합의 입장에서 분단의 현실성을 직시하는 데에는 주효하지만,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즉, 그 동안의 안보강화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주적(主敵)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에서 국민적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를 통한 국가와 시민사회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수동적인 자세를 배양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냉엄한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통일을 분단이 극복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으며, 통일 이후의 민족 통합에 대해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즉, 민족통합을 위한 안보는 스스로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만을 겨냥한 안보론을 부각하는 안보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즉, 평화를 근거로 하는 평화지향적 안보교육이다.

그러한 교육내용은 한국사회의 ‘진정한 통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하였다. 결국 통일 이후 통합의 당위성은 통일정책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정부의 진정한 대화 자세노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보다 주체적이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의 인식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 또는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인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쌍방의 문제로 보이게 하

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내용은 평화 지향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민주적 실천과 인간적 자본주의의 이념관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열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시작도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덧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통일 기피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희망하게 될 수도 있다.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도 그 불이익과 희생은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영원한 이익과 발전에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에게 공동체주의 이론에 입각한 통일관을 꾸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남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

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²⁹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국민공통 기본교과에 반영된 통일교육 요소

통일교육은 통일 문제를 학생 스스로 내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통일교육의 단초를 여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가 평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경쟁도 갈등도 평화의 의미에서 보는 것이다. 것처럼 통일 문제는 건강한 미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그러한 생각을 스스로 갖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현행 통일교육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주의 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총론적인 입장은 구체성을 띠는 교과서의 모습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행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사회, 도덕, 윤리, 국사 등으로 다양하게 통일교육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남북한 교류의 변화와 진척,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양하는 데에는 상당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논의 수준이 마련되면서 구체적으로 교과서 내용에서 강조할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학생, 공동체, 가치가 이전의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재사고(Rethinking), 재구성(Restructuring) 그리고 재충전(Revitalizing)의 과

²⁹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2000년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와의 협력하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통일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도 갈등 해결과 평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통일 교육은 통일 환경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통해 통일교육 내용을 파악하기로 하겠다. 남북 분단 상황의 단순한 사고는 급진전하게 복합적인 체계의 질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재사고적 인식과 재구성의 실천 그리고 재충전의 성과를 인식하는 노력이 학교통일교육의 실제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총론이나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통일교육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도덕, 국어, 사회, 국사, 지리, 정치, 사회문화 등에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일정 정도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0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은 분명하게 국민기본공통교과 10개 과목³⁰을 중심으로 한 교과활동을 바탕으로 한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학교통일교육은 각 교과에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상당히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입장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전개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실시나 재량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상당한 의미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에 따라 수준별 교육과정에 알맞은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교과서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범교과의 운영은 기초적인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을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관계자의 노력이 요청된다.

7차 교육과정의 개편은 이전의 학교통일교육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총론 상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과 실질적인 통일교육 내용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³⁰ 10개 국민공통 기본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이다. 이 과목들은 초등 1학년(국어, 수학) 또는 3학년(이외의 과목)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전문 조항에도 있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교육과정 총론에 중시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의심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의 통일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했다.

전반적인 교육내용의 축소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긴급히 요구되는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양적 축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각 교과 내용 강화가 요청된다. 이에 따른 방법은 국민 공통기본교과에서의 일반선택과 심화과정이 편성될 수 있는 바, 그에 따른 통일교육의 내용이 심도 있게 개선될 수 있는 조치가 요청된다.³¹

이제 학교통일교육은 각 교과 특성에 알맞은 교육을 전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북한이나 통일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교과에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여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0년부터 적용될 7차 교육과정은 분명하게 국민기본공통교과 10개 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과활동을 바탕으로 한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도덕, 일반사회·국사·지리를 망라한 사회과 그리고 국어 등에 반영되어 있다.

(1) 도덕·윤리과

그 동안 도덕·윤리과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이나 대북 안보관에 바탕을 둔 북한 이해에 강조점을 두었다. 이러한 내용구성은 6차 교육과정을 통해 보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³¹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은 의미있는 계열성과 범위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경우도 각 교과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교과의 집필진과 통일교육 관계자들의 협의회가 조성되면서 교과 내용이 편성되는 과정이 꼭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되었다. 이러한 내용구성은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며, 그 이해 정도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 IV-4> 6, 7차 교육과정의 도덕·윤리와 통일교육 내용 비교

학교급	학년	통일교육 관련 내용 비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 생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애국가에 대한 바른 자세 가지기 ·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기 바르게 달기 · 애국가 바르게 부르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긍지를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기르기 · 해외동포들의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궁화 사랑하기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알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 사랑하기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알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기 ·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문화 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 평화 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기 · 다가올 통일에 대비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중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민족의 의미 파악 ·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 · 국가,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 	(없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현실과 통일 과제 · 통일의 필요성, 북한의 정치, 경제, 언어, 문화현실 · 남북한의 통일정책,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 발전 ·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 변명과 통일국가의 실현방안 · 민족 공동체의 위상을 높이며,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길 	(없음)	
고등학교	전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 통일과업의 달성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굳은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남북한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민족 공동체의 변명과 통일 한국의 모습 	

<표 IV-5> 6,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통일교육 내용 시수 비교

구 분		초 등						중 학교			고 등 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바른생활· 도덕과목시수	6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68	34	34	34
	7차 교육과정	60	68	34	34	34	34	68	68	34	34	(심화 과정)	
통일교육 내용의 시수	6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12	12	12	0	0	20
	7차 교육과정	10	15	8	8	8	8	0	12	0	17		

<표 IV-4>와 <표 IV-5>에서 보듯이, 실질적으로 6차와 비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의미가 도덕과 교육과정을 비교해 볼 때 상당 수준으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 상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과는 달리 자유 민주주의 정신의 배양,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의 원칙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주축 교과인 도덕·윤리 과에서의 통일교육의 위상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의 도덕과 경우에는 6차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30%정도 축소되어 운영된다. 이로 인하여 도덕과는 이전의 내용 범위와 계열성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 축소로 인하여 안보교육의 내용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안보교육으로 의미 있는 변화로 정리되기 전에 대폭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2) 국어과

국어과에서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언어,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보강이 요구된다. 현재 국어과는 통일관련 내용으로 학생들의 통일염원의 글이나 남한의 문학가들이나 언어학자들의 북한의 말과 글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북한에

서 사용되는 언어의 이해보다는 통일의 당위적인 내용으로 드러나 있어서, 학생들이 북한 말이나 글과 남한의 말과 글의 동질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북한의 소설이나 시, 희곡을 그대로 다루면서 북한의 저변에 깔린 사상이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학생들이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 이후에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 목표로 전개되지는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국어과의 경우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영역으로 분책된 교재를 쓰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관련할 수 있는 것은 읽기 교재에만 해당되고 있다.³² 통일교육에 대한 국어과 교육과정 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통일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서 국어과의 경우는 통일문제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접근보다 다루기 좋은 언어적, 문학적, 감정 순화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가 잘 반영되는 것이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엿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요구된다. 국어과에 있어서 통일교육적 지향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국어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우리말과 글에서의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³³ 이전의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은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을 도모하는 의도로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민족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질적인 점에서 오는 경쟁이나 대립의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어과는 국어의 이질화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는 의도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수준별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별책으로 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교과서에서는 통일관련 내용을 글의 소재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

³² 한국교육개발원 (1997), pp. 98~99.

³³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97-61, p. 99.

인 낱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는 남북한의 말과 글을 비교하여 알게 하고,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남북한 전래동화나 구전을 발굴하여 북한 말과 글의 표현과 남한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동의 문학 속에서 통일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언어나 소설을 통한 통일문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북한의 청소년기나 주민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나 수필을 부분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탈북자나 해외동포의 글을 신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내용 보강도 요구된다.

셋째, 통일교육 내용으로 간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단원에서는 통일과 민족동질성의 의미를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가족과 친구간의 갈등에서 남북한 갈등을 빚대어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고양할 수도 있다. 또한 통일교육 내용에는 북한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소설이나 글이나 문법을 객관적으로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차이점을 알게 한다. 그리고 남북한 문법의 차이를 알게 한다. 그리고 분단 이후 북한 문학과 국어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3) 사회과

7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이전보다 일반사회, 국사, 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사회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인간과 공간(지리 중심적 이해), 인간과 시간(역사 중심적 이해), 인간과 사회(일반사회 중심적 이해)로 구분하여 나타난다. 따라서 통일교육내용의 반영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새로운 지평을 가지고 21세기 통일과 미래를 이루어 나가는데 전환기적 사고가 요구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정의 편성으로 일반사회, 국사, 지리의 내용 속에서의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미래적 전망을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과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 것이다.

〈표 IV-6〉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통일교육 내용반영 방안

학년	내용 체계	통일교육 반영 방안	
3	인간과 공간	고장의 중심지와 주민생활모습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
	인간과 시간	고장의 문화적 전통	○북한의 전통생활 풍습
	인간과 사회	고장의 발전을 위한 노력	○북한 인민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향토사랑에 관한 일상생활상 소개
4	인간과 공간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	○북한의 자연 환경
	인간과 시간	옛 도읍지 문화재의 가치	○개성과 평양의 소개 ○북한의 문화재
	인간과 사회	취미와 여가 생활	○북한학생의 취미와 여가 생활
5	인간과 공간	자연환경과 주민생활과 관계	○북한의 자연 환경과 주민생활상
	인간과 시간	조상들의 공동체 의식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확인
	인간과 사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북한의 경제상황과 경제생활
6	인간과 공간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나라의 소개와 남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평화애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인간과 시간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북한 정권의 수립과 이후 변화를 소개
	인간과 사회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평화통일과 민족의 미래	○시민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통일의 역군이 됨을 강조함.
7	인간과 공간	북부지방의 생활	○북한의 행정구역과 생활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함.
	인간과 시간	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변화	○남북한 사회의 변화 비교
	인간과 사회	지역과 사회탐구	○남북한의 사회상 비교
8	인간과 공간	현대 세계의 전개	○냉전과 남북한 갈등의 폐해를 일깨워 줌.
	인간과 시간	(국사) 삼국의 성립과 발전 통일신라와 발해 고려의 성립과 발전	○백제와 고구려의 자주정신을 통해 자주 국방의 의미를 배운다. ○삼국 통일과정을 통해 신라의 통일과 오늘날의 민족 통일의 의미를파악한다. ○후삼국을 통일하는 고려의 통일을 통해 오늘날의 민족 통일의 의미파악
	인간과 사회	현대사회와 시민	○남한의 시민과 북한의 주민의 정치상황 비교
9	인간과 공간	인구성장과 도시의 발달 지구촌 사회와 한국	○북한의 도시 변화와 특징 파악 ○분단 이후 남북한 변화와 그에 대한 비교
	인간과 시간	(국사)대한민국의 발전	○북한 사회의 변화
	인간과 사회	시장 경제의 이해	○북한 경제의 진단과 전망
10	인간과 공간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생활공간과 지역 구조의 변화	○국토와 통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통일국토의 합리적 이용전망
	인간과 시간	사회변동과 미래사회(국사)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과 확산유도 ○북한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형성
	인간과 사회	공동체 생활과 사회발전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강화함

<표 IV-6>과 같이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는 통일교육과 관련성을 두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의 사회과는 북한의 인민학생의 사회생활이나 주민생활상이 반영되어야 한다. 6차의 경우 4학년에서는 개마고원, 백두산, 금강산의 위치,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과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학년에서는 통일이 실현되면 고속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금강산, 백두산 관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학년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 경과, 피해 등을 토대로 하여 자주 국방의 필요성, 북한 위협에 대응 방법, 남북 협력의 중요성 및 통일 후의 사회 발전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아직도 현실감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과는 보다 많은 내용을 통해 북한의 초등학교의 사회생활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 사회과는 6차 교육과정에서 반영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의 부분을 유지하면서 현황의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 비교가 객관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사회과는 5차 교육과정부터 일반사회, 지리, 세계사, 국사를 망라하여 통합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각각 영역이 통일교육과 관련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에 미약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지리과의 경우는 6차 교육과정을 통해 ‘IV. 북부 지방의 생활’이 별도의 대단원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일면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에서 통일과 북한 이해에 적극적인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고등학교 사회과는 민주화 이후에 나타난 올바른 북한 이해의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이전보다 6차의 경우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나 북한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은 이념교육이나 정신교육과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통일문제를 알게 하여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확립하도록 하는 데 주효할 것이다.

³⁴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CR 97-61, p. 105.

넷째, 사회과에서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보강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의 각 도나 직할시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한 민족으로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것은 북한이 분단 이후 이루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리,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회 교과서에서 북한의 현대사를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광목하게 중등 지리과에서 북한의 지리에 관련된 내용이 보강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접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현대사, 사회·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통합적 역사관, 사회관을 갖도록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고등학교 일반 선택 및 심화 선택 과목에서의 통일관련 내용 강화

제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구현’이라는 대원칙하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세계 시민으로 협동하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하여 그 구성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에서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 질적인 관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교과 내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 IV-7>에서 교과 내용의 심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표 IV-7> 일반선택과 심화선택 과목에서의 통일교육 방안

선택 분류	과 목	통일교육 내용의 활성화 방안
일반 선택 (24 학점 이상)	국어 생활(4)	북한의 말과 글의 이해
	시민 윤리(4)	북한의 사회에 대한 이해 민족통합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구성
	인간 사회와 환경(4)	북한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주민 생활에 대한 이해
	생활과 과학(4)	북한의 과학 기술과 생활에 대한 이해
	정보 사회와 컴퓨터(4)	북한의 정보 수준과 컴퓨터의 활용에 관한 이해
	체육과 건강(4)	북한의 체조에 대한 이해와 체육활동에 대한 이해
	음악과 건강(4)	북한 음악의 이해와 비판적 인식
	미술과 생활(4)	북한 미술의 감상이나 특징에 대한 이해
	독일어(1)	독일의 통일에 관한 내용과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내용
	교련(6)	국가 안전 및 북한의 예방 의학에 대한 이해
	철학(4)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육학(4)	북한의 교육 실태에 대한 이해
	생활 경제(4)	북한의 경제에 대한 이해
	심화 선택 (12 학점 이하)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윤리와 사상(4)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여 북한 주민의 사고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통 윤리(4)		민족의 통합을 강조한 원효 사상이나 민족 종교에 대한 소개
한국 지리(8)		북부지방에 대한 심층적 이해
경제 지리(6)		북한의 경제와 지역에 관한 심층적 이해
한국 근현대사(8)		북한의 현대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 민족 분단의 의미에 대한 재조명 남북한 분단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
법과 사회(6)		북한의 형벌의 실태와 비판적 인식
정치(8)		북한의 심층적인 정치실태에 대한 이해
경제(8)		북한의 심층적인 경제현실에 대한 이해
농업과학(6)		북한의 농업 수준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
공업 기술(6)		북한의 공업 기술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기업 경영(6)		북한의 자본주의 수용에 관한 이해
해양 과학(6)		북한의 수산업과 수역에 의미에 관한 이해
가정 과학(6)		북한의 가정생활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
영어II(8)		북한의 영어 수준과 영어의 실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독일어II(6)		동서독 통일 이후에 대한 이해
중국어II(6)		중국과 대만에 관한 이해
러시아어II(6)	러시아의 자본주의화 이후의 사회에 대한 이해	

2.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가.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과 학생들의 인식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태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그 근거는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관, 평화관, 이념관에 있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갖는 교사들의 입장에 기원된다. 실질적으로 교사의 성향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과 성격은 다양하다.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당혹한 교육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이 북한 핵 문제와 통일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면, 많은 교사들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어느 특정한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다. 급변하고 있는 통일교육 환경으로 인해 통일교육 이념과 가치관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가를 놓고 일선 교사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³⁵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문제에 당혹해 하는 교사의 통일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민족 통일에 대한 확인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교육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은 교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2004년 서울교육청 산하 서울시 교육과학원 연구회의 하나인 서울 초·중등 통일교육연구회에서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입장이 나타난다.

첫째, 통일교육은 남북간의 화해 협력이 진척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나 대미 정책에 대한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인식을 학생들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은 점차적으로 북한 인식에 대한 올바른 경로로 지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현실성에 근거한 방향을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³⁵ 함인희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2002년 통일부 용역 과제 (2002), p. 270.

셋째, 통일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적 인식의 견해 차이를 재조명하며 각각의 입장이 교육 현장에서 수렴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설문에 의하면 특히 교사 세대간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자인 교사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통일교육 접근에서의 장단점과 다른 이견에 대해 남들과 논의하는 풍토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방안에는 극단적인 자기주장보다는 더불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하는 실천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수렴할 수 있는 학교 사회의 잠재적 역량이나 실제적 역량을 신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의 실시는 바로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름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현재의 갈등은 과거의 위기와 분쟁의 소산이며 현재의 갈등 해소 노력은 앞으로 미래의 난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나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거나 수행되지 않는 것에 상심할 필요는 없다. 통일문제는 남북한 문제, 주변국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내부 상황의 다양한 변수로 그려져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년, 수십년이 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을 겪으며 통일교육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³⁶

통일교육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반공 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체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민주화의 노력과 경제적 발전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 대학을 망라한 학교기관에서 실시되는 것이 학교통일교육인 것이다. 즉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

36 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서울: 인간사랑, 2001), pp. 32~45.

향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교육³⁷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오늘날 분단 현실의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통일 사회의 전망과 대비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민족 통합을 이루는 인식과 정서 그리고 실천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나 교과 내용에서 민족 공동체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이 밀도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교과 통합적, 가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통일교육의 목표에 합당한 교육과정이 「바른 생활」과 「도덕」, 「윤리」와 같은 특정 교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가져오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기존의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식의 지극히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또, 그 내용이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와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단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의 대상이나 실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학교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냉담한 입장이 학교 곳곳에서 퍼져 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37 이돈희 외, 『학교통일교육자료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96-41 (1996), p. 15.

정서는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무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 이는 그동안 학교통일교육이 교육현장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적 인식을 심화하는 데 한계성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학교통일교육은 남북통일의 당위에서부터 통일교육의 실천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내용의 수정과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단위학교에서 그 위상을 정립할 시기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표의 시도를 통해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목표가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참다운 민족 화합과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게 함은 물론 통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도록 하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교 현장은 남북통일 문제를 막연하고도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틀로는 학교통일교육의 결실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학교통일교육에서 다양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학습 내용에서 수용하는 가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나. 과외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그러한 목표의 시도를 통해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정도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각 급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바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그 동안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교육의 내용에서 나타난 확실한 반공 의지나 안보 의식을 강화는 방법으로의 우월한 입장에서의 대북한 관계를 조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와는 반대로 분단구조를 극복하는 데 남북한 이해나 변화를 요구한다. 즉 통일교육에 대해 역동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인 경향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담당하는 교사상의 2가지 유형에 기인된다. 전자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들이며 후자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교사들이다. 이들 간은 통일교육의 목표의 차이를 보인다. 배우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성향 차이에서 오는 통일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현 교과목표 중에서 남한의 통일정책이나 전반적인 통일접근이 무조건 옳고 북한의 정책이나 실상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방식을 택하거나 그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거나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우월적 논리나 열등적 논리는 민족 동질성 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질화를 증폭하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기를 원한다. 이는 반세기에 걸쳐 누적된 남북한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민족 화합과 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은 통일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는데 기여한다.

학교 현장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막연하고도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틀로는 학교통일교육의 결실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학교통일교육에서 다양한 통일교육의 목표를 반영한 학습

내용에서 수용하는 가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적극적인 의미의 학생 자치를 강화하여 학급회의나 학생회의 통일교육에 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화와 토론이 학급과 교내에서 성숙할 수 있는 포용적 방향에서 기초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통일교육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조화와 갈등, 사랑과 증오, 전쟁과 평화, 환경보호와 개발 등에 대한 비판적 사고 과정의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통일관련 학생 과외 활동을 담당할 교사들을 위한 현장 체험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특별활동을 전개할 각종 자료의 보급이나 연수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 관련 학생 활동은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일례로 들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태에서 통일 퀴즈 대회, 통일 가요제, 통일 축제, 통일 문예대회, 통일캠프를 실시하여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준다. 그 이유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과 범교과적인 적용과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실태

일반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한 통일교육은 대학현장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갖는다.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실제 사례 연구는 각 대학에서 통일 관련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에서는 통일 철학의 기본인식이 뒷받침될 수 있는 통일교육의 통합적인 교육내용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³⁸ 그렇기에 명확한 통일 교육적 접근은 대학에 최소한의 통일교육 내용을 이수할 수 있는 단위 수준을

³⁸ 차우규,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사회과 교육』, 제42권 1호 (2003.3), pp. 207~226에 의하면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 및 교대에서 실질적으로 통일교육 및 북한 관련 과목이 2~3학점 정도의 교양 선택으로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거나 아예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학 현장에서는 교수들의 성향에 따라 통일교육이 인식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³⁹

이에 대학에서는 우리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수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과목 개설이 우선된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⁴⁰ 학교통일교육은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하는 교수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진척을 위한 중요한 통일교육에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제 통일교육은 현 상황에서의 평화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이해의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통일교육 교재의 확충과 수용적 자세는 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최소한 통일 의식의 인식 공유를 도모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대학생들을 통일역군인 세대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교원양성대학의 통일교육

특히 통일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화의 노력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³⁹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북한 이해교육을 꺼려하는 것은 그 자료의 신빙성에 염려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저축 여부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사진을 보더라도 북한의 선전용으로만 인식하려는 경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 우위에 입각한 사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9년에 발표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대한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교육연찬이 필요하다.

⁴⁰ 통일부, 『2004년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2003).

초·중고생을 육성하는 교원 양성 대학의 통일교육은 사회 속의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로의 수렴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 대학의 통일교육은 통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관을 심어 주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의식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노력으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는 분명 교원 양성 대학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강화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 양성 대학은 통일교육, 북한 이해 교육, 안보교육에 대해 필수적으로 연구하는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2)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통일교육은 학생 자치 활동과 연계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임의로 실시되는 자치 활동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통일 문제에 대한 충분히 검증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학생 자치 활동에서 통합적이며 비판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설명을 시도하여야 한다.

둘째, 소위 민족 공조와 민족자결과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노력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는 한편 땅굴전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 강화하는 방안이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연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공동체교육, 안보교육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곱째 통일교육에 있어서 임의적 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의 실천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설정하는 정도에 대한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일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자치 단체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를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방안의 실천

가. 표준 통일교육과정안 마련

앞에서 전개될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관은 실질적인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평화 통일의 의의와 민족 통합의 실천적인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일교육적 평화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념적 정착을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변화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통일교육은 지침에 의해 총론 체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의 성향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대북관에 있어서도 전형적으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나 전형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측면으로 대별된다. 이 사이의 근본적인 입장 확대나 입장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보다 표준적인 통일교육과정안으로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의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현장에

서 이루어지는 사태가 보다 분명한 한계와 대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표준 통일교육과정안 마련은 현재 논의되는 통일교육 지침 체계 재정립에 대한 검토의 추이와 관련 맺을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은 통일 이후 사회의 주역 세대인 학생, 청소년들의 통일관을 확립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통일 의지가 결여되면 중국에는 반일적인 정서로 학생들이 고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활용되는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세안인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은 북한관에 있어서 북한 이해와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이중적인 인식의 효용성이나 국내외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 청소년들의 북한관은 통일문제의 국내외적인 상황인식, 북한의 변화와 현실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나 남남갈등의 갈등 요소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은 비판적 북한 인식으로의 확산이나 낙관적 북한 인식으로의 확산에서 오는 갈등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은 평화관에 있어서 보편적이며 실천 가능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평화관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노력과 동시에 전쟁을 대비하는 안보적 성격도 포함하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은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국내외적 현실 속에서 적극적인 안보 인식의 강화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거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변화가 힘의 논리에 의한 입장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표준 통일교육과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간 존엄,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기회의 평등을 인정받는 건전한 자유 민주 사회와 경제적 부와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관을 담고 있

⁴¹ 김창환, “통일교육 지침 총론 및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통일부, 『2003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2004.1), pp. 213~228.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국가와 건전한 자본주의사회로의 통일 국가 건설의 이념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이념형으로 남북한을 통일로 가는 입장은 일방적인 흡수 병합한다는 입장과는 다른 다원적인 사고, 균형적인 시각, 관용적 태도를 학생들이 가정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내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적 통일교육과정안으로의 강조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 통일문제나 북한이해가 학교 사회의 갈등 요소를 포용하는 문제와 상이하지 않아야 하고, 금기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교육과정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강의전개안 마련

현재 범교과로 실시되는 학교통일교육은 일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교과를 신설하여 초·중·고에서 실시하지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기존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개선하지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강의전개안 강화 및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교재 마련 등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통일교육의 교양을 강화할 목적성을 갖는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 속에서 통일교육 강의전개안은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의 교과 신설이라는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개선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통일교육 강의전개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각각 교과의 교사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접근의 용이성이 보장된다면, 대대적인 통일교과의 신설과 같은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 강의전개안으로 교사가 재활용하여 자료 활용 및 각 수준에 알맞은 교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교육 강의전개안은 통일문제를 일상화하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각 급 학교의 통일문화, 행사 개최 지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로의 전파를 일촉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단위학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통일문화를 설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각 학교들의 문화 행사에 적용가능한 통일문화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강의전개안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일관, 평화관, 북한관, 이념관의 구체적 실천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은 교실 현장에서의 문제인 자율적 의사소통, 왕따 및 인권 문제의 적극적인 개선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통일문제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과 그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념적 사고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의 전형과 민족의 통합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과 통일교육은 사회 속의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은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의 대화와 문제 해결의 의견 수렴의 공간을 조성하는 기초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 환경조성

통일교육은 어느 교육에 못지않게 교수자 즉,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통일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통일교육의 교육적 환경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교사들의 의식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 유발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 개선이 요구된다. 분명히 통일교육은 현장성에 있는 통일교육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의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교사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강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자들은 통일교육 교수활동에 대한 행정적·예산 지원방안,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자료의 특화 및 연계화 방안, 통일교육 컨설팅제도의 시범적 운영,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학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 교육을 일상화하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각 급 학교의 통일문화·행사 개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 특정 고등학교에 중심되어 전개되는 통일교육은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로의 전파를 일축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단위학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통일문화를 설정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각 학교들의 문화 행사에 적용 가능한 통일문화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은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 교수활동에 대한 행정적·예산 지원방안으로 학교의 담임 조·종례 및 훈화시간을 이용한 ‘최소 통일교육’시간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학교,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의 특화 및 연계화를 교과별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 일회성 행사로서의 통일문제나 평화문제 그리고 국가 보훈 문제를 관심두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과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통일관에 대한 표준안을 설정하여 남북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대비를 각 급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도 북한관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 현실 속에서 통일교육은 새로움의 시도나 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관과 안보적 설정의 면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통일관, 민족 통합을 전제로 하는 올바른 북한관, 평화와 번영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평화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간적 자본주의의 이념관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4.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실제적 교수기법 적용

가. 영화텍스트 읽기를 통한 통일교육 교수법

(1) 이론적 배경

반세기에 이른 분단 상황아래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어린이들이 만났을 때, 도처에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목표는 남북한 상호간의 문화가 어떻게, 왜 같고 다른지를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제고되고 있으나 오랫동안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탓에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아직도 북한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개방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교사의 입장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 관련 수업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지루하고 재미 없는 시간으로 존재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이질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며, 상호 이해의 수용적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법이 필요하다. 컴퓨터와 TV 등 오락성이 강한 매체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당연한 내용일지라도 지나치게 진지하고 진부한 수업은 오히려 그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친밀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의 대중매체(TV, 라디오, 영화, 신문, 만화)중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만화 영화를 활용한 북한문화 이해교수 학습 방법

(가) 도입 배경

북한 관련 컷 만화나 북한의 중앙 TV에서 제작한 만화영화를 학습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분단이후 달라진 북한의 언어, 예절, 풍속, 교육 등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북한에 대한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감을 극복하여 실질적 민족통일을 이룬다.

(나) 수업의 실제

영역	남북 동질성 회복	학습 주제	만화를 통한 북한 문화이해하기	
학습 목표	·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를 통해 달라진 북한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람들이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만화의 특징 1 -북한 만화의 특징 2 ·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 만화영화 제목과 내용 알아보기(지난 시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충이가 준 약, 소년장수, 영리한 너구리, 향기골에 온 감자, 호랑이와 세친구, 빨간 개미가 날라 온 꿀 		7'	· 사진자료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 만화 영화 한편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한 너구리”- · 북한 만화를 통해 북한 문화 이해 활동하기 (선택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극(주요 인물들을 설정하여 인상에 남는 장면을 역할극으로 꾸며본다.) -미니북 만들기 -만화주인공에게 편지쓰기 · 선택 활동한 결과물 발표하기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만화 http://www.bh1052.com.ne.kr · 모둠별로 한가지씩 활동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심화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만화 영화를 본 소감 말하기 · 북한 만화와 우리만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 해보기 		8'	· 북한만화와 우리 만화에 나타난 언어나 예절, 풍속 등의 기준을 교사가 제시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다) 수업 아이디어

북한 사람들이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알기

- 주로 우리 역사나 동물들을 주제로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좋아하며 손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컴퓨터로 합성한 영상물보다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어서 북한 사람들은 만화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두 일을 멈추고 만화영화를 본다고 한다.

-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영화에 대해 알아보기

소년장수

- 93년까지 총 35부까지 방영 (현재 50부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
- 1편에 약 25~30분 정도 분량
- 오랑캐가 침입해 온 시기, 15세의 소년이 무술과 재주를 익혀 임금이 인정하는 장수가 되어 오랑캐와 싸워 물리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주제

영리한 너구리

-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짧은 너구리가 생김새는 웃기지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
- 토끼와 달리기 경주 중 높은 막대기의 높이를 재어 오는 경기에서 토끼는 줄자를 가지고 높은 막대기에 기어올랐지만, 너구리는 삼각자, 컴퍼스, 직선 자를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먼저 높이를 재어 돌아와서 경기에서 승리함.
-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써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줌.

- 우리나라에 소개된 북한의 만화영화 알기

- 제1편 : 향기골에 온 감자

- 제2편 : 호랑이와 세 친구
- 제3편 : 령(영)리한 너구리
- 제4편 : 빨간 개미가 날라 온 꿀

(라) 기대효과

-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만화를 수업매체로 활용함으로써
- 만화속에 드러나는 북한 억양, 관심사, 표현방법, 사고유형 등의 차이점은 흥미를 유발시켜 참여도를 높일 것이다.
 - 많은 차이점 가운데에서도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북한에 대한 친근함을 가지고 동질성을 찾아갈 것이다.
 - 만화에 대한 관심으로 긍정적인 통일의식의 변화와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급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한 평화 실천 교육 프로그램

(1)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상당히 정태적이다. 이에 대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실 속에서 평화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북한의 모습과 사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학습 목표

1. 통일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다.
2. 통일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통일과 나의 삶

- 중국, 러시아를 거쳐 유럽 여행을
 - 부산에서 런던까지 한번에 가자.
 - 시베리아 흰 눈을 넘어
- 중국, 러시아에서 직접 외국어를
 - 외국어 배우는 데에도 경제적으로
 - 직접 중국인과 러시아인을 만나서 배우자.
- 새로 생긴 다양한 직업을
 - 유럽 횡단 관광가이드: 매우 건강해야 함.
 - 시베리아 민족의 활동 영역을 찾아서

2. 통일의 미래 전망

- 나아지는 점
 - 통일 한국의 국제적 위상
 - 통일 한국의 경제적 성장
 - 민족 주체성 확립

○보완해야 할 점

- 통일 한국의 사회적 갈등 수습
- 남북한 정치, 경제, 교육제도의 통합
- 50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온 정전상태가 평화 상태로 전환되는 것
- 한반도 평화가 안보·남북관계·대외관계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3.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

- 남북관계 개선 및 신뢰 회복
-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 한반도의 긴장 완화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각각의 사진

평가

1. 우리 민족이 서로 신뢰하는 길로 타당하지 않는 방법은?

- ① 북한이 무리한 핵 개발을 포기한다.
- ② 북한의 번영을 추구하는 방법을 주변 국가들이 모색한다.
- ③ 남북한간의 민족공조를 지상 목표로 한다.
- ④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정답: ③

근거: 남북한간 서로 신뢰하는 민족공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민족공조만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반영하면서 남북한간의 신뢰를 우리 내부의 합의를 얻어가며 차근차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평화와 번영 5 행시

()학년 ()반 ()번 이름 ()

◇ 남북한 하나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5행시를 지어 발표해 봅시다.

평
화
와
번
영

정리

1. 한반도 평화의 길은 남북한과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베이징 6자 회담)
2. 북한은 주변 정세에 더욱 민감해지면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진: 북한 동포들의 삶을 담은 사진)
3.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에서는 통일 문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자기주장 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심분 이해하면서 포용력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상숙한 외교력을 통해 주변 국가나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뚜렷한 평화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를 들려 준다.
자유의 그 날까지

울릉중학교

임지혜

푸른 하늘...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저 새들처럼
자유로웠으면 만날 수 있을 텐데

높은 하늘...
두둥실 보고픈 이 다 만나는 구름처럼
떠다닐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한 핏줄 한 겨레
단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나 들을까
소리쳐 불러 보지만
무정한 메아리만 돌아올 뿐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며
하루하루 애만 태우는
입기만 한 38선

통일 될 그 날까지
우리 두 손 잡으며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날 하염없이 기다리겠노라고...

(2) 통일로 향하는 평화의 이미지 자료

(가) 그림1

(출처: 남북은 한가족이다 광주 산수초 4-2 김수정)



(나) 통일로 가는 길 사진 자료

석별의 정을 나누는 남북한 노동자(인터넷 평화학교)





북한 청소년 (인터넷 평화학교)

(다) 통일 전망대



<http://www.tongiltour.co.kr/frame1.htm> 제공
고성 통일전망대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함.
전망대에선 금강산, 해금강을 볼 수 있다고 함.

(라)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통해 통일의 미래와 현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오두산 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에 관한 영화와 북한의 의복이나 생활용품을 볼 수 있다.



<http://kr.search.yahoo.com/search?p=%C5%EB%C0%CF%C0%FC%B8%C1%B4%EB> 제공

(마) 통일 미래로의 희망을 담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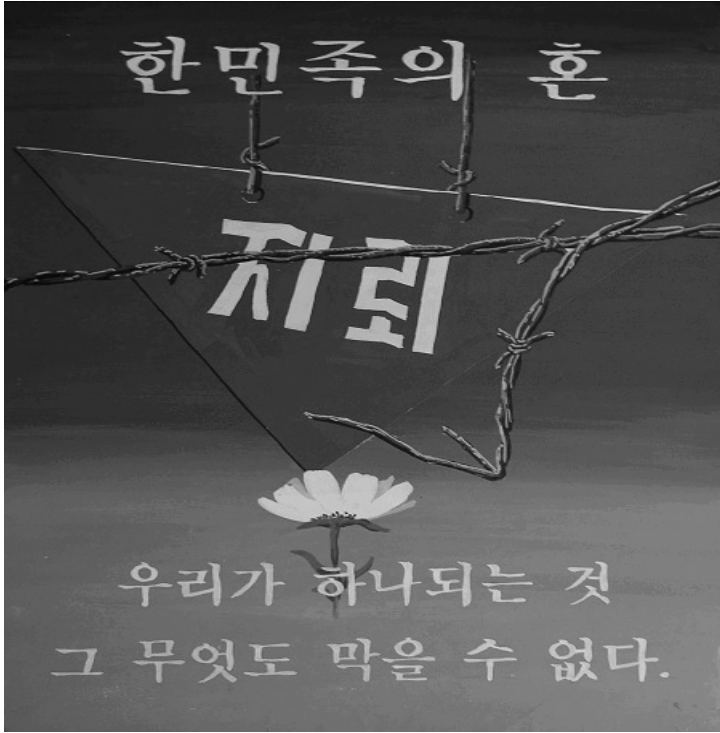
<http://search.empas.com/search/imgdir.html?q=%C3%BB%BC%D2%B3%E2&qn=&f=V&m=B&e=20&c=&w=52>

우리의 단합된 모습들



남북한이 함께 하는 음악회(인터넷 평화학교 자료 399, p.103. 중 3)

(바) 통일을 그리고 생각하는 자료



금당중학교3 박슬기(인터넷 평화학교)

우리 청소년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 찾기를 모색하여야 한다.

통일로 가는 길은 학생들의 통일관에 대해 보편적인 입장에서 궁리하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들



사대부고 한아름

다. 대립과 화합으로의 조성을 위한 교수-학습 실현

(1) 이론적 배경

과거의 통일교육은 남북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상황과 맞물려 적과 동지가 선명한 즉, 가치기준이 명백한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더 많은 만남과 다가서기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은 만남과 다가서기, 그리고 이해와 화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른 분단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분단으로 인한 서로에 대해 깊은 불신을 안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과 북의 정치적, 제도적, 법적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남북사이에 형성되어온 대립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해를 일구어가는 통일로 가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2) 대립과 화해를 조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가) 도입배경

주변국가들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불신과 대립을 지양하고 화해·협력시대에 따른 통일인식을 바로 한다.

주 제	남북관계의 변화	대 상	고학년 (40분)
관련교과	도덕, 국어	준비물	학습지
수업모형	개념 수업 모형		
학습목표	우리 주변 국가들의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나) 학습 전개 과정

단 계	주요학습내용	교수-학습 활동	비 고
도 입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생각을 발표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모습알기 · 제네바 합의서의 내용 · 현재의 남북관계 모습알기 · 화해 정책 · 화해정책에 대한 자기생각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대 이후의 국제질서 변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제네바 합의서의 주요내용 · 현재의 남북관계의 모습을 알아본다. · 학습지를 활용하여 화해 정책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는 화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 ① · 학습지 ②
정 리	· 느낀 점 발표하기	· 여러 어린이의 발표를 듣고 난 후의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다) 수업 아이디어

- 남북정상회담 내용 사진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장면을 본다.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포옹하는 장면
 -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하는 장면
- 국제 질서의 변화 모습
1990년대 들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며, 국제 질서가 경제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변화한다.
-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구소련과 국교 맺음(90.09)
 - 중국과 국교 맺음(92.08)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신뢰를 쌓으며, 화해와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1991년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제네바 합의서

-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이 맺은 협정으로 북한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연간 50만 톤의 중유 공급을 받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

· 현재의 남북 관계 모습

대립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 대립과 갈등 관계 : 무장 잠수정 침투 사건, 서해 교전 사태 등
- 화해와 협력 관계 : 경제 교류 확대, 금강산 관광 등

· 화해정책 생각해 보기

학습지를 활용하여 화해정책을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는 화해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라) 기대효과

국제질서의 변화된 모습과 현재의 남북 관계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이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현재 남북관계의 모습이 대립에서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가 화해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교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교수 학습의 실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작업으로 전개되는 작업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평화, 통일 그리고 인권을 학급에서 조성하지 않고서는 통일교육의 외침이 허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일의지가 학급에서 서로 협동하며 평화적 실천 그리고 그 동안의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고양하는 방법으로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통일교육은 학급의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적이며 현실적인 내용

을 심화, 이해, 반성, 절충하는 목표, 내용과 교육 학습의 실천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민족 통일의 목적과 내용을 수용하며, 늘 일상 생활을 하는 학생 속에서 서로 화합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행동 실천을 통해 점차적인 통일의식 고양의 재구성이 시도되어야 한다. 아직은 갈등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통일 교육의 활성화는 주체적인 통일교육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민족 통합의 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5. 대학 통일교육의 실험적 수업모델 개발

가. 교양 「통일교육」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추진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이해 및 정의 그리고 실천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 교양 「통일교육」의 전국적인 단위의 교과목 개설은 당연한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통일문제를 접목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당위로서 통일교육은 중요한 일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학 통일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편향적 실천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나 우익이든 좌익 편향적인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협소한 이데올로기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전향적이며 현실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현황은 분명 남북한간에 놓여 있는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분단의 표본들이다. 이러한 분열적 요소를 통합적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은 반분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은 새로운 국민 통합적 시대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기이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⁴² 학교통일교육은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⁴² 통일부, “2004년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2003).

하는 교사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진척을 위한 중요한 통일교육에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무력 도발의 불용,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와 교류 협력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주장을 실천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양 「통일교육」은 현 상황에서의 평화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이해의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전반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에 통일교육은 올바른 학교 현황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실천이아말로 통일역군인 주도적 신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 남북한 사회 문화 통합을 위한 학생 중심 모델 제시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다르게 된다. 지금의 학교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 보관 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 자료들이 활용되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수들의 자율적 수업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전개되었던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는 남북한에 존재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의와 민족 통합의 실천적인 과정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적 내용 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화의 노력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인한다.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대하는 새로운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속의 대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은 국민적인 의견 수렴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교육부와 통일부에 대한 통일교육 교육과정 심의 위원회나 교양 「통일교육」교재 집필 위원회를 통일교육 관련자와 논의를 강화하는 협의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속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접근을 일정정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민족 통합을 위한 사회 문화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북한 사회의 이해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 통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대학의 교과목 편성에 알맞게 시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평화 및 인권에 대한 평화 실천 교육 프로그램

대학에서의 통일교육은 보다 우리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⁴³ 이에 대학 통일교육은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하는 교수들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진척을 위한 중요한 통일교육에 보다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제 통일교육은 현 상황에서의 평화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이해의 기준이 올바르게 정립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화된 통일교육 교재의 확충과 수용적 자세는 학생들에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최소한 통일 의식의 인식 공유를 도모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올바른 통일관 이해를 바탕으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작업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실천이야말로 통일역군인 대학생 세대를 키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⁴³ 통일부, “2004년도 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2003).

일례로 미군의 용산 기지 철수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는 일부 국민들에게 민족 화합의 이야기는 공염불이다. 그러나 그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 근원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불신은 불신을 갖는 자의 몫만이 아니라, 바로 북한 스스로 신뢰를 쌓아가는 길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애정 없이 민족화합을 주장하는 것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대북 불신 계층의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화해의 길을 경험적으로 진척시키면서 통일교육은 강화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분명한 것은 통일교육에 성심을 다하는 교사들이 자신이 가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성향 보다 민족 동질성을 위한 길 그 안에는 우리가 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반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회는 늘 혼란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위기를 늘 맞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교가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통일교육이 나오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은 외쳐야 한다. 앞으로 혁신적인 통일교육의 실시보다는 이전의 통일교육을 재정리하고 과학적으로 보급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통일, 북한, 평화, 이념 화합 조성을 위한 교수 지침서 개발

통일교육의 중요한 접근은 통일교육의 통합성 강화를 위한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통일관, 북한관, 평화관, 이념관이 보편타당성으로 지향하는 목적과 내용으로 구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혼란한 통일관, 북한관,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에 대한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인 내용성 확보를 위한 선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내용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양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 교양 「통일교육」은 남북한 모든 분야의 차이를 다른 사회체제를 살아서 생기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과 현실적 고려를 신축성 있게 다루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 교양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분단현실과 변화적 요소 그리고 동북아의 정세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 교양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경향에 있어서 보다 보편타당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적 질서를 함양하는 내용으로의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정리는 아래와 표로 정리될 수 있다.

<표 IV-8> 대학 교양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지향

대전제	원칙	내용	내용의 목적
보편적 인식과 특수적 인식을 통합 및 함양하는 통일관 배양	이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동성 -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 - 국민적 합의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적 삶의 자세 - 삶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의 다양한 사회와 문화의 이해 - 인간의 모습을 한 사회 정의 실천
	북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 분야별 북한실태 및 동향에 대한 지식 - 민족공동체 의식 - 남북공조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인식 - 올바른 통일 역사 의식 -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 - 민족 공동체의 번영
	평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중요성 - 북한의 군사 - 한미공조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평화 - 안보의 실천 - 대학 및 사회 환경에서의 평화 - 새로운 안보교육의 지향 - 세계 시민적 활동

V

사회통일교육의 체계화 방안

1. 사회통일교육 실태와 개선방향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구소련의 해체, 독일통일의 실현, 중국의 시장경제 확산 등으로 인해 냉전체제가 종식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국가간 경계를 넘어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체제경쟁으로 인한 국력의 소모가 크며, 민족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세대·계층·지역 이념 등의 차이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독일통일 이후 통일비용과 통일후 유증을 우려하여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기피 현상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⁴⁴

이제 사회통일교육도 우리 내부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남북간 평화와 번영을 통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21세기에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통일교육 자체가 무관심과 냉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통일교육은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통일환경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기초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출발점부터 재검토하는 한편, 이상적인 대안의 추구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가. 사회통일교육의 개념과 의의

정부는 국제질서의 개편, 북한내부의 어려움 지속, 남북관계의 진전 등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1999년 통일

⁴⁴ 이장희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부, 2001), pp. 125~134.

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⁴⁵을 의미한다. 또한 이 법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러한 통일교육은 크게 보아,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통일교육의 범주는 초·중등·대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제외하고 각급 사회교육기관, 민간단체, 민방위교육, 언론기관, 군부대 등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어⁴⁶ 그 속성상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통일교육도 언론사가 운영하는 각종 교육센터를 통한 직접적인 교육과 보도를 통한 간접 통일교육으로 나눌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의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⁴⁸

첫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회인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각급 학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통일교육은 남북간 평화번영시대의 주역인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45 통일부,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양동문화사, 2003), pp. 156~158

46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수탁연구 CR-99-12 (1999), pp. 87~204.

47 이장희, 『사회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 (서울: 통일교육원, 2001), pp. 14~20.

48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아이플랜, 2000), pp. 3~5.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환경은 그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달리 일반 사회인은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사회통일교육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체제 차원의 통합과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의 통합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일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사회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사회통일교육은 ①‘사실상의 통일’ 지향, ②적극적 ‘평화 만들기’와 포괄적 안보관의 수용, ③사회문화 영역의 중시, ④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⁴⁹

또한 사회통일교육의 방법도 ①사실에 기초한 북한 이해, ②쟁점과 사례 중심의 접근, ③교육환경과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법 적용, ④교육종료 후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관심 촉구, ⑤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다각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회통일교육 실태

현재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⁵⁰

첫째,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이나 각 시·도의 교육연수원에서는 통일관련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이며 문제점이 적지 않다.

49 위의 책, pp. 6~14.

50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협동연구총서 03-05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51~60.

이는 교육의 기본방향이나 목표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며, 과목 설치가 통일을 염두에 두는 합목적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내용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토대로 하는 체제나 이념, 통일정책 내지 남북간 현안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통합의 측면에 치중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의 삶과 관련되는 삶의 통합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한 제목하에 관련 전문가를 통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대부분이며,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교재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울러 연수방법도 수강자의 요구나 관심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부분 교수요원 중심의 일방적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간 배당도 대부분 1~2시간 정도이므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통일관련 연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나 시청각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된다 해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회교육기관은 통일부 허가법인을 포함하여 약 2,000여 기관에 이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80개, 교원연수원 95개, 공공단체 소속 교육기관도 1,8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⁵¹ 그러나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통일교육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민여론 형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교육연수기관은 2003년 12월 현재 769개이며, 공공산업교육연수원, 금융계연수원, 일반기업체연수원, 리조트형 연수시설로 구분되는데,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의 경우를 보면, 직무위주의 전문 지식을 중심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관련 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²

또한 통일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반기업체 연수원이

⁵¹ 위의 책, pp. 49~51.

⁵²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나 리조트형 연수시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산업교육 연수기관에서는 직무 위주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교육 연수기관에서는 통일이후의 산업환경 변화를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반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은 중심이 없으며, 오히려 일반사회인들을 혼란케 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표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남북나눔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중앙대 민족통합교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아·태평화재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 강좌를 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내용면에서 대상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강당을 이용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의 강좌 진행이 어렵다. 또한 통일교육의 특성상 북한사회에 대한 소개나 과거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영상자료가 많이 요구되나 연구단체나 방송사, 정부기관과의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의식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표준적인 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2~3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명인사 초청을 통해 통일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시민사회단체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단체의 재정상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일부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은 호국수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호국수련활동은 사관학교 및 부대 명예입소 훈련, 땅굴 및 부대 견학, 통일대행진, 기타 휴양소 시설 이용 등의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룬다. 이중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흥사단 등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청소년단체가 갖는 문제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한 단속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성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과 시설 부족, 통일교육을 위한 주무부서의 혼재, 실제적인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자료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미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언론기관의 통일교육은 영향력이 매우 큰데 비해, 대북한 보도 등에서 편파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⁵³

다. 사회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사회통일교육 실태를 종합 정리해 본다면, 비체계성, 다양성, 분절성, 현장성, 영세성으로 집약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통일교육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통일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목적성의 확립이다.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⁵⁵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적대감과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되살려 화합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일교육에서는 무엇보다도 분단이후 누적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사회통일교육의 기반

53 이장희, 『사회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 p. 20.

54 위의 책, p. 20.

55 위의 책, p. 21.

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평화교육이라 함은 분단체제에서 길들여진 인간의 사고나 행동양식, 예컨대 반평화적 폭력문화, 상대방에 대한 물 이해와 왕따문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⁵⁶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삶과 양식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정치교육을 의미한다. 사실 통일의 제반과정이나 절차가 민족전체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볼 때, 국민들의 의사결정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균형성의 추구이다. 기존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관련 교육의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체계통합 측면이나 정치적 내지 제도적 측면에 치우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추상적 측면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적응하는 실제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간 갈등과 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적합성의 추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시책 과목에 따라 획일적으로 과목을 설치하거나 내용을 구성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사회교육기관의 특성과 교육과정에 있어 시간배당 문제, 그리고 교육공간 확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정부만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권적 정치교육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지원과 자료제공, 최종 감독을 맡는 대신

56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1), pp. 173~189.

에,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민간단체가 사회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민간기관이 사회통일교육을 주도할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비체계성 및 한시성, 교육시설의 영세성이 우려되는 바, 상호 협의와 정보공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다양성의 추구이다. 기존의 특화되지 못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의 흥미나 재미 또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직업별, 세대별 및 성별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대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회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뱅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 및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관련 현장연수 사례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교육내용을 체계화한 교육자료집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자료집은 기존의 이론적 성향을 다분히 띠는 학술적 논문집과는 차별화된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성의 추구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주로 수강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교사 등 직장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수기관의 연구과정보장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론적 측면과 각론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에 상응하는 교육목표 및 내용을 구성하여 교육할 경우, 일종의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요소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객관적 접근과 열린 교육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설정된 목표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론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주입식 학습이나 완성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자율적 사고에 의한 의사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열린 교육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일곱째,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관련 교육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기본방향 내지 목표는 어느 정도 일관성과 체계성을 지

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수강자들이 성인이라는 점, 정규적 교육과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학교통일교육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2. 사회통일교육 추진체계의 재정립방안

가. 사회통일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

(1) 사회통일교육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관련 법령 및 제도는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그 내용과 폭이 확대되어 왔다. 정부 수립 초기에는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남북관계를 규율해 왔으나,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어 북한을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대북한 관계 및 통일관련 법령이 시대상황과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제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보아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⁵⁷ 즉 기본적으로는 북한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 관계와 동반자적 관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관련 법령의 이중성은 북한과 통일문제를 주로 다루는 통일교육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의 통일교육은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 「정부조직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나,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었다.⁵⁸

이에 따라 1999년 8월 6일자로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통일교육활동을 촉진·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⁵⁹ 이 법의 규정

57 통일연구원,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연구』, 협동연구총서 03-04(2003), pp. 7~31.

58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협동연구총서 03-05(2003), pp. 32~35.

59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30년사: 통일교육의 발자취 1972-2002』 (2002),

중 사회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제3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제4조), 통일교육위원회의 설치(제5조), 정부의 임무(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제7조), 통일교육 수강의 요청(제9조), 통일교육협의회 설립(제10조), 고발(제11조) 등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 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 교재의 개발·보급 등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교육기관에 통일교육과정을 요청하거나, 통일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지원법은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사회교육기관의 책임과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제도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이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회통일교육을 강제로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 실시기준이나 지침이 모호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한 이후 지난 5년여 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 법의 내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⁶⁰

첫째, 통일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인력’, ‘통일교육단체’, ‘통일교육시설’ 등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의 적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대상은 전체 국민인데도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실시여부가 지역, 대상별로 차이가 큼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편차가 크며, 결국에는 남남갈등과 사회적 갈등의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pp. 39~40.

⁶⁰ 통일연구원,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p. 15

않고 있으며, 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통일교육 실시에 대한 강제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통일교육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는 대신에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서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통일교육과목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통일부를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노동부 등의 각 부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①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②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하여 설치한 교원연수기관, ③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공공연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회교육기관은 통일부 허가법인을 포함하여 약 2,000여 기관에 이른다.⁶¹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사회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정별 통일교육시간을 명시하여 ①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②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2시간 이상, ③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3시간 이상 등 통일교육 시간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실태를 보면, 공무원 교육원과 교원연수원 정도에서만 소양과목의 일환으로 통일관련 과목이 1~2시간 설치되어 있으며, 정부시책을 강의식,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⁶²

61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p. 49~51.

62 위의 책, pp. 51~60.

한편,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은 공공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을 갖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시를 위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여전히 체제 혹은 이념 중심의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교육기관별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결국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에 비해 통일된 교육내용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일교육 주체들간 역할분담이나, 업무협의,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란소지가 우려된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교육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예컨대 현재 통일부가 개발·배포한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사회통일교육지침서의 준수 여부는 각 기관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진 상태이다. 또한 이의 준수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의 총체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통일교육 관련 법령의 재정립과 함께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 사회통일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통일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있어 일차적으로는 헌법의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 간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물론 두 조항이 상충·배치되지 않는다는 헌법학적 해석이 유력하지만, 이 헌법조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과도 관계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이상, 헌법과 통일관련 법령의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의 통

일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동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2004년 정기국회를 통해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사항은 통일교육의 내용 규정, 교육시설의 이용 협조,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근거 등이지만, 여전히 유관부처와의 협의문제 등으로 인해 미진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법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³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에 ‘통일교육’ 이외에도 ‘통일교육전문인력’, ‘통일교육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육법과의 유기적 관련을 맺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부처간의 유기적 연관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⁶⁴

둘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센터’로 지정하는 통일교육단체나 통일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각종 사회통일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의 교과과정에 있어 통일교육 반영시간이 너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인 통일교육 반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관련 교육기관의 협조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통일교육을 반영한다”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부장관

63 통일연구원,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p. 25.

64 허종렬,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과 운용 검토,” 『새교육』 (2000), p. 105 참조
이장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아시아사회과학원, 2003), pp. 59~77.

은 통일교육 수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넷째, 민간 통일교육단체의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의 기능이 지나치게 협소한데,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지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과 간행물 발간, 위임업무만 담당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을 실시하거나 통일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밖에도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통일교육 실시자의 신고절차 법제화 및 현황 파악, 통일교육 강사제 도입, 통일교육자료 검증제 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밖에도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법(제1조)이 그 목적을 홍익인간의 이념에 둔 것은 남북간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상징성이 있으나, 교육법 자체에 통일문제나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미비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일반법인 교육법에서 홍익인간 이념과 통일교육을 연계시켜 좀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⁶⁵ 또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도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방송법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의 방송시간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법 등 사회교육기관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65 정상돈 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통일교육협의회 부설 통일교육연구소(편), 2002), pp. 12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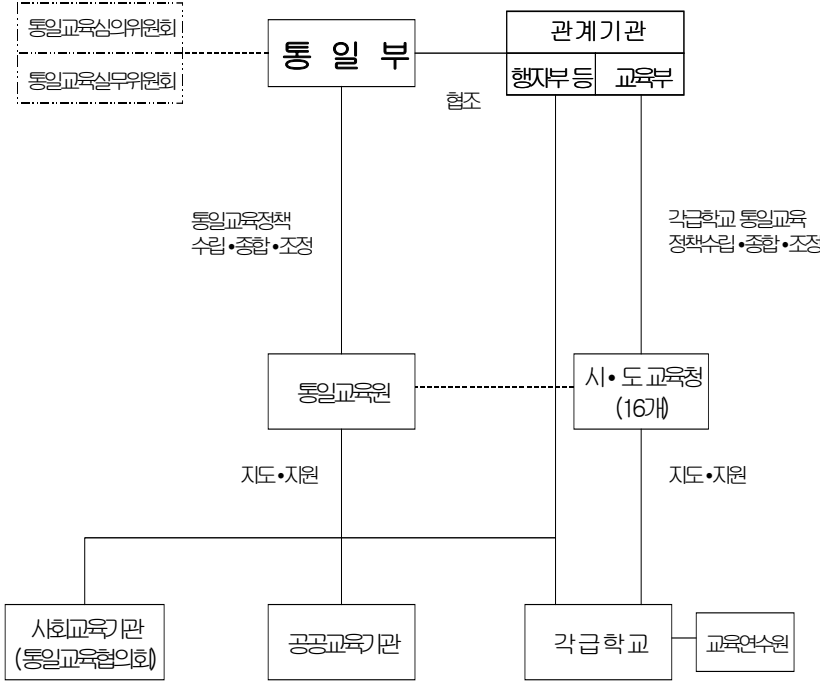
나. 통일교육 지원체계의 개선

정부는 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이를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유관부처 차관급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너무 정부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각계 대표를 늘림으로써 통일교육의 중립성과 국민합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심의위원 중 당연직을 줄이는 대신에 국회의장의 추천을 9인으로 늘리며, 통일교육협의회, 교원단체(교총 및 전교조), 민간통일교육단체의 대표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⁶⁶ 통일관련 유관부처의 실·국장들은 통일교육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실무위원의 숫자도 대폭 늘리되, 학교교육, 사회교육, 특성화교육 등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⁶⁶ 박영규 외,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협동연구총서 03-08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67.

<그림 V-1> 통일교육 추진체계



다.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계성을 높이도록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화 해나가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조정 및 협조를 이루며, 정책개발 및 재정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사회교육기관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강자와 교육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태의 분석을 통해 관련되는 지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아울러 민간교육단체나 청소년단체 등은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삼는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통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홍보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일교육 관련 연구기관은 정책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교재와 교육기법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언론매체는 교육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종합적 지원센터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교육의 방향·목표·내용을 정립하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모를 하며, 교재개발 및 지원, 교육기관의 조정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으로써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협조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⁶⁷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역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민간 통일교육 실시자에 대한 시설과 자료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민간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위한 공간은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문화시설(시·군·구민회관, 복지회관, 문화원,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민간 사회교육기관들이 통일교육지원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이해」를 초·중등학생용, 대학생용, 성인용 등으로 대상에 맞게 다양한 자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 사회교육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교과목이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원 주도하에 각종 사회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공모, 선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67 고정식 외,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방안』 (서울: 통일부, 2003), pp. 285~296.

3. 실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실천방안

가. 실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일교육 방향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서로 자신들의 이념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비판하고, 각기 자신들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흑백논리적 편향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민족의 재통합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이질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⁶⁸

그러나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교육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아직도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화해·평화와 같은 상호 접근을 도와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높아지고 있다.⁶⁹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치체제나 이념 교육에서 벗어나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교육의 주체도 정부와 민간의 협조 및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의 추진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통일문제를 보는 관점이 장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실사구시적 접근이 제기되는가 하면,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통합, 사실상의 통일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통일에 앞서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를 통한 상당기간의 공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데 기인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패러다임의 구체적 모습이나 실천방안이

68 위의 책, pp. 20~24.

69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pp. 35~42.

모색단계에 그쳐 오히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혼란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예컨대 ‘평화’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평화교육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갈등해결이나 구조적 폭력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데다 아직도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나 방법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계화된 평화교육이 시도되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⁷⁰ 그런 의미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잘 정립할 필요가 없다.

나.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매우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교육은 구분이 불분명하며, 학년 개념도 없는데다 등록과 탈퇴가 용이하며, 교사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인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⁷¹

더욱이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도감독이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체육부, 재정경제부 등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 귀속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어떤 기관은 통일교육에서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어떤 기관은 민족화해와 민족동질성 증대에 최우선적 비중을 둘 수 있다.

이처럼 사회교육기관마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 점은 통일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나, 기본적인 통일교육의 기준이나 내용이 일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거나, 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되며, 개인적·파당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3조).

70 정현백 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총서 2002-03 (서울: 통일교육원, 2002), pp. 1~5.

71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p. 84~86.

독일통일전 서독에서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통일교육기관이 존재하였으며,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이 통일교육에도 반영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연방정부는 통일교육을 일정한 방향을 갖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방 내무성 산하에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통일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통일준비 및 통일과정에서 독일인들의 정치교육과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통일이후에도 구동독지역 정치교육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⁷²

이런 점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중심체로서의 통일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고려할 때,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교육 주무기관인 통일교육원은 전 국민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다양한 통일교육기관들을 지도감독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남북의 통일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통일관련 영역, 예를 들면 현재의 남남갈등, 민족통합, 사회통합, 통일무관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하여 통일교육원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일교육 주무기관으로서의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기획하며, 통일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유관부처는 물론이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대상에 있어 여론주도층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국제적 유관인사, 재외동포까지도 대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특별히 공무원, 언론방송인, 교원, 통일교육담당자를 주요 대상으로 특

⁷²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 2002), pp. 183~188.

별 관리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의 기존 주요 통일교육대상이었던 공무원, 교사, 통일교육 담당자외에도 방송언론인, 특성화 대상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반도 통일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해외 언론인,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국거주 외교관, 외국기업 종사자, 외국기관·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주한 외국근로자, 재외동포 지도자, 해외입양아, 해외 한글학교 및 한인학교 교사 등도 교육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통일문제에 가장 소극적이거나 우려할 가능성이 있는 노조단체, 교원단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셋째, 사회통일교육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수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특성화된 연수 프로그램, 다양한 도서와 잡지 등 간행물 발간사업, 시청각 매체 개발, 경연대회, 전시회, 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또한 독일은 일반도서와 정기 간행물 등 다양한 간행물을 통해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독일은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우리도 통일교육용 청소년 달력을 만들어 배포한다면, 청소년의 무관심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특히 앞으로 통일교육원은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청각 매체를 폭넓게 개발하는 등 통일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 즉응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국·내외 영화 가운데 통일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방영토록 방송국 등에 지원하며, 이념성이 적은 북한 영화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원 산하에 통일방송국을 설치하여 북한관련 방송매체의 표본을 제시하는 동시에 통일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넷째, 디지털시대에 맞추어 통일교육원의 조직과 활동방향도 사이버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단순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 보다는 가칭 ‘사이버통일대학원’을 설치하여 통일교육의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원격교육 연수원의 인가(2003.12)를 계기로 삼아 사이버교육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원격교육 강좌를 개설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60시간 온라인강좌를 개설하거나, 개성공단 근로자 교육용 사이버강좌를 유관부처, 개성공단지원단, 개성공단관리기관 등과 공동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에 첨단교육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센터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통일교육 직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강사, 희망사항 등을 점검하는 기존의 방식외에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교육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사회통일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교재내용, 강사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설 정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승인심사를 통해 정치교육기관으로 승인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통일교육협의회, 대학통일문제연구소, 민간 통일교육단체 등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쟁, 심사, 평가라는 과정을 통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통일교육 교재나 영상매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다.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이제 통일교육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의 다양성을 통일교육의 이름아래 폭넓게 수용해야만 통일교육의 본래적 의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방향은 과거의 안보와 체제우위 모형에서 남북한의 평화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모형으로 변해야 한다.⁷³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화해·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식의 기초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남북한의 공존을 통한 상호 번영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교육목표에 있어서는 정치, 제도적 통합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민족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은 이미 남북간에 존재하는 이질화, 차별, 경제적 격차, 이념갈등, 불평등 상태 등을 뛰어넘어 남북한 주민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내지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⁷⁴

교육주체의 면에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즉 정부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기준, 관련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민간단체는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다양한 통일교육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도 남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교를 통한 상호 이해, 다양성에 기초한 개방적 토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통한 효율적 통일교육을 지향한다. 사실 통일교육이란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 문화가 우리와 다르며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접촉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73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99-12, (한국교육개발원, 1999) pp. 207~210.

74 한만길, “민간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0), pp. 34~36.

라.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양성 및 교육기관·단체별 특성화 교육자료 지원

이러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통일교육’을 위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⁷⁵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특히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 통일교육을 특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역할 분담과 함께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단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자료의 공유 및 교과목과 콘텐츠의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전문인력의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일교육의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강사요원이나 강의과목, 강의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기존 강사요원이나, 사회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방향과 교수기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한 강사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에 걸맞는 다양한 교재지원과 함께 강의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2000년 이후 매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행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하여 통일교육을 내용적인 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독에서도 통일을 이루기 10여 년 전인 1978년에 ‘학교통일교육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정치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⁷⁶ 그 동안 통일교육기본지침서가 통일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많

75 이장희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통일부, 2001), p. 160.

은 순기능을 수행한 점도 있으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교과서적 안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별로 지침다운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⁷⁷

따라서 앞으로 발간되는 사회통일교육 지침서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지침서는 국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쟁점 또는 이슈들을 국민들에게 명확하면서도 개관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교육자들이 수업을 전개할 때 쟁점이 되는 통일교육 관련 질문들에 대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 군, 언론 등 사회통일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는 담당자와 실무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야 한다.⁷⁸

그런 취지에서 2000년에 통일교육원이 발간·배포한 ‘사회통일교육지침서’⁷⁹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국제정세, 남북관계, 북한실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연후에 ‘2004 통일문답’ 등을 활용하여 쟁점사항이나 해설부분을 추가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중 주제별 프로그램은 쟁점에 포함시키되,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여 대상(교사, 공무원, 민방위, 평통위원 등)별로 별도로 분리 발간해야 한다.

마. 사이버통일교육 강화

사이버교육은 원격교육 형태의 하나로서 기업환경의 변화와 인터넷의

76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 개선 연구,”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2003), pp. 34~38.

77 위의 논문, pp. 35~36

78 오기성 외, 『통일교육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부, 2003), pp. 74~81.

79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2000).

대중화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 기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현재와 같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대안적 교육체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⁸⁰

부처별 사이버 교육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⁸¹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대학을 설립하였는데, 2001년 현재 65개 대학은 부설 혹은 단독대학으로 운영하며, 순수한 사이버대학도 9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에 의한 원격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근로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전문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대상의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하였고,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대상 인터넷 통신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체계를 운영하며, 법무부는 재소 대상의 원격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통일교육원은 2003년 12월을 기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원으로 인가받아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30시간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 민간 기업체와 민간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고가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사이버교육을 선보이고 있으며,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이버교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사이버교육 체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채 교재나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웹에 옮겨 담는 등 기존 인쇄매체의 형태를 답습하거나, 집체교육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점, 자율적 학습형태라는 점, 학습과 생업의 병행 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⁸⁰ 이수경, “우리나라 사이버교육의 현황과 통일교육원의 발전과제,” (2004), p. 1.

⁸¹ 위의 논문, pp. 10~13.

개별적인 의사소통은 물론 많은 구성원들이 한꺼번에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를 통해 문자정보 뿐만 아니라 화상정보와 음성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의 텍스트와 정보를 거의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교육의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은 기존 교육방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습자의 총체적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통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콘텐츠와 전문가를 상호 교류하면서 교육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통일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사이버교육과까지 설치(2004.3)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에서는 사이버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더욱더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통일교육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콘텐츠의 설계, 개발, 운영, 평가를 선도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대상자별로 다양한 콘텐츠와 특성화를 유도하며, 사이버통일교육에 대한 홍보와 연계체제 구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바. 지역별,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북한문제의 특성상 각 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와 가정, 언론에서의 통일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주민들의 생활영역 내에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문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추진할 경우, 정치교육센터는 이에 대한 시설과 재정을 비롯하여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⁸² 우리나라도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민간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과도 관계있

⁸² 한만길, “민간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pp. 51~53.

듯이 지역통일센터를 지정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 12개의 통일관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를 묶어 지역중심체로 육성하며, 더 나아가 읍·면·동 사무소가 점차 주민자치조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를 통일교육의 지역거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단체들간 정보·자료의 공유, 교과목과 콘텐츠의 교환, 협력체제 구축 등도 지원해야 한다.

사. 통일후 사회통합 교육 및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통일교육은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한간 통합과정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정치·제도적 통일은 행정적·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지역 주민간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령유일지배체제에 길들여진 북한주민들은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남한주민들과 다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이 남한주도하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저항과 거부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간 현격한 소득격차는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자아내게 할 수 있으며,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반면 남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적을지라도 마찬가지로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통일환경의 변화 및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이미 통일을 향하는 머나먼 대장정은 시작되었으나, 우리의 준비태세나 태도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통일의 당위성은 차치하고라도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 등을 우려하여 통일할 필요가 없다거나 통일무관심층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회통일교육부터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후를 감안

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통일의 부정적 측면인 과도한 통일비용 및 사회불안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신하여 한반도 통일이 장기적으로 경제부흥을 가져오며, 우리사회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한편, 청소년세대를 위한 도전의 장을 마련해줄 것임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현실에 대한 정보자료의 개방 확대·대북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국내정치 이용금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회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접촉·협력의 확대, 남북주민간 만남의 장 및 공동문화행사 등을 통한 상호 이해와 민족동질성의 회복·발전, 남북화합을 위한 특별행사 개최 등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⁸³

특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600만 명의 재외동포는 통일을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일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주민간 갈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1999년에 발사된 무궁화 3호 등 각종 위성을 통해 한민족 동질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이용하여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거나, 북한주민에게 메시지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교육 방송의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손질하며, 남북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영화·문학·스포츠 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⁸³ 황병덕,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pp. 87~92.

4. 소결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과 반미여론의 고조, 중국의 동북 공정과 탈북자 증가에 따른 한·중간 긴장고조, 일본의 독도·동해 분쟁과 군사력 증강, 러시아와의 대륙철도 연결 논의 등 한반도 주변의 통일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또한 북한내부의 변화와 후계자문제 대두,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육로관광 확대 등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전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문제가 논의·담론의 단계에서 현실의 문제, 실제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로운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정립과 실천방안이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현재 학생과 국민들은 북한사회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과연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분단상황에서 상호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교육을 지속해왔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한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은 그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통일교육 주무기관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이념·계층·지역·세대 등에 따라 북한관과 통일관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층을 중심으로 통일무관심 현상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량이며, 이는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과 지지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문제를 합리적, 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와주는 학교통일교육에 이어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통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이 무시되거나 폄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정기국회를 통해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하여 지방에 대한 통일교육이 활성화 되며, 민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사이버통일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한편, 참여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혁신적 발상이 필요한 시대가 되는데,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볼 때, 이제 사회통일교육의 개선에는 모든 단체, 국민들이 동참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사회통일의 기반이 확충되리라 믿는다.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비롯한 통일관련 법령을 보다 폭넓게 실효성 있게 개정하면서, 통일교육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대상의 다양화·특성화 노력, 각종 정보자료의 시의적절한 개발·보급·사이버교육 확대 등을 주도하며, 민간과의 역할분담과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VI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1. 통일인프라의 필요성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남북관계는 대립구조에서 화해협력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으로 이와 같은 기본구조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개선과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혹은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정책의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남남 갈등, 통일기반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부적 장애요인들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변화에 따라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는 지형을 초래했다. 정부 역시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냉전적 사고로 평가절하 함으로써 비판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경직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냉전구조 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와 아울러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타협적 구도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는 소수정권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구조 형성은 대북정책 추진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통일문제에 대해 야당과 협력구도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정쟁화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여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의 마련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 합의 기반구축에 상대적으로 소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노정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의 추진구도 역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문제들로 영향

을 받고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돌파구의 마련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 대북정책 추진의 합의기반 구축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남한내부의 갈등요소들이 증폭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한에 공히 존재하는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근본적 제약요인인 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내적인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없이 남북관계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의 냉전적 대립은 남북양자에 냉전적 질서와 제도를 형성시켰으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다. 남한사회의 보안법 논쟁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대내적 합의기반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한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내적 인프라구축이라는 문제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더불어 대내적 통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남한사회 내부의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역량의 강화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는 통일인프라 구축이라는 문제로 개념화될 수 있다.

통일인프라 구축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뒷받침할 남한사회 내부의 역량강화와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되는 통일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일대비능력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다. 통일인프라는 대북정책 추진 및 통일과정으로의 이행을 위한 제반 차원의 국내적 기반조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통일교육분야의 통일인프라 역시 새로운 변화와 현 단계의 특성을 반영한 맥락에서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 선발인원에 대한 직접방북교육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은 학교교육

및 취약한 국민교육체제, 교육전문가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남북관계개선과 통일교육수요의 급증상황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립적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반공교육의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새로운 통일교육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향성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추진할 추진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교육분야의 인프라는 국민적 합의 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직접교육의 기능을 확대·발전시키고,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및 통일교육관련 종합지원시스템의 가동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종합시스템의 개념으로 현 학교 및 대국민 통일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통합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통일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통일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사전대비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통일인프라 구축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가.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 근대화의 정상화 지향

분단은 남북한에 상이한 체제를 형성시켰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와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폐쇄적인 명령경제를 운용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강압적인 타율적 통제를 가하여 개인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집단적 특성을 강조했다. 분단으로 인한 상호 적대적 관계는 남한사회의 전개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안보와 체제경쟁에서의 승리가 사활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2차적인 의미를 지녔다. 이는 개발독재형 산업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사회주의권의 전반적 와해와 북한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증대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과정은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아울러 본격화된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참여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유람선이 오가고,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 남한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변화는 이에 맞는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요구하는 관성을 지니며, 이는 종종 과거의 질서와 충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역사의 평범한 상식이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냉전적 패러다임 속에서 안주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의 구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냉전 체제에서 그 기원이 형성된 남한사회의 통일교육 역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는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남북한은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해 왔다. 극단적 대립구도 속에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타협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긍정은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상황에서 남한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반공이라는 구호속에서 이루어지는 남한의 통일교육은 ‘공존’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정신무장에 가까웠다. 문제는 항상 ‘적’으로서의 북한이었으며, 우리 스스로는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 튼튼한 정신무장을 해야만 했다. 이는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 대립과 이후의 북한과 체제경쟁을 벌여야 했던 남한 사회가 당면했던 상황적 조건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적 상황에서의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해 생성된 ‘내 안의 장애’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성찰적일 수 없었다. 분단과 남북

한간의 극단적 대립은 남북한 모두의 발전과 근대화에 일정한 장애로 작용했다. 기아상황에까지 다다른 사회주의 북한의 현실과, 냉전문화의 벽에 의해 양극화하고 있는 남한사회의 오늘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통일교육은 분단의 왜곡을 교정하고 민족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한 ‘발전의 기형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화과정을 거쳐 왔다. 근대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주체적으로 세속의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신의 가치에서 해방되어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신의 가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간적 가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인간적 가치를 두고 사람들은 조화로운 합일의 추구보다는 종종 어느 한편으로 경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대화의 여정이 둘로 나뉘어져 진행되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유를 사회주의는 평등을 자신들의 근대화의 여정에 있어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다. 그리고 두 체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간의 조화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한 반쪽의 가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두 체제간의 냉전적 대립은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외적인 기제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해 왔다.

현실 사회주의는 이미 체제로서 생명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근대화를 완성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실패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굳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논리를 들지 않더라도 근대의 의미를 인정하는 진영에서도 ‘성찰적 근대화’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적 근대화 역시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발견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로운 합일을 통한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왔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되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의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은 자유를 만끽해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상이한 테마를 주제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상이한 ‘근대인’을 탄생시키게 되는 태생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는 단순한 상호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근대화의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의 문제는 단절된 교류와 접촉의 재개라는 단기적 수단을 넘어 분단으로 인해 이질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간의 통합과, 이를 통한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은 체제간의 적대적 공존관계와 각각의 체제 내에 상이한 이질적 요소를 증가시킨다. 이는 흔히 말하는 냉전문화로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이질화의 해소와 사회문화적 통합상태 달성은 남북 양자관계차원의 교류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남북 화해무드와 아울러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해 남한사회내부의 남남갈등구조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상은 이와 같은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형성해온 냉전문화의 해소 및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내적기반, 즉 대내적 인프라의 구축이 없이 사회문화적 통합

상태의 달성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남북통일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미래지향적·확대 발전적 관점의 적용이다. 분단은 남북한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화를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이전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민족동질성회복’은 근대화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미래적·과정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실패한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불완전한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새로운 형태의 발전적 목표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흡수와 재편이 아닌 남북한사회 자체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과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기본적 방향성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분단상황은 남한사회의 근대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냉전문화로 생활세계에서 재생산되어온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체노력이 없이 근대화의 정상성 회복과 시민사회의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확대된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냉전으로 인한 근대화의 비정상성을 해소하고, 정상성을 회복하는 중요 방법론으로서 통일교육이 확대,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시민사회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과 상이한 인성체계를 형성시켰으며, 따라서 사회적 단위로서 북한 주민들의 가치체계는 남한주민들의 그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념적 차원에서 남한은 시장체제에 기초한 개인주의, 진취성, 경쟁, 그리고 자율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를 선호하고 협동과 단결을 중요시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수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남한주민들은 개방적인 자세를 선호하고 사교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개인적 권리를 중요시 여긴다. 또한 남한주민들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중심적인 판단기준은 합리성이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폐쇄성을 중요한 사회적 특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인들의 권리는 무시될 수 있으며, 조직의 원리에 충실하며 무조건적인 복종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선호되는 가치의 우선순위도 남북한 주민들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남한주민들이 선호하는 가치의 우선순위는 가족관계, 삶의 편리성, 자유, 타인의 인정 그리고 국가의 안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국가의 발전이 가장 중요시되며 평등주의가 그 뒤를 잇는다. 편안한 삶과 가족관계는 그 다음의 선호가치이며 자유는 선호되는 가치에 있어서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시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적 가치와 당의 사상통제, 그리고 유일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신민’들의 형성이 있었을 뿐이다. 통일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회주의형 인성은 민주주의 시민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의 진정한 사회통합의 달성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시민성의 강화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그 동안 전체주의체제에서 타율적으로 강요되었던 특성들은 재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특성들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통일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성의 강화가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남한 근대화화의 모순은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따르지 못했던 남한사회의 시민성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시민성의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형성으로 귀결된다.

시민사회교육은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행위주체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통일이후 북한주민들도 사회주의의 전통주의적 특성에서 벗어나 시장체제의 근대성과 적응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교육의 강화는 장기적인 통일교육의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현 통일교육의 기본골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교육이 보다 거시적인 시민사회교육의 하부 구조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통일을 분단으로 인한 근대화의 왜곡을 극복하는 정상성의 회복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통일교육은 시민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독일의 대시민 정치교육체계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통합 지향형 통일교육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 원인은 상호 대립적인 폐쇄적 분단구조에 있으며, 이는 남북주민간의 장기적인 교류와 접촉의 단절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고립은 결과적으로 상이한 생활세계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질화의 극복은 이와 같은 단절과 고립의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립과 단절로 인해 발생한 이질화는 단기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해소되기 어려우며 반대로 상호 몰이해로 인한 긴장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안점은 차이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조적인 속성들은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구조적인 특성들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한다. 그 이유는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구성을 장기간 유지해 왔으며,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남북한간 통합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북한사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특수한 경험을 재생산해온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북한사회의 구조적인 결과물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며, 일정 정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형성한 부정적 특성들은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상이한 체제로의 변화는 적응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은 북한이 남한과 다른 사회적 과정을 경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냉전 논리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단기적인 청산의식은 사회적 단위로서의 북한 주민들에게 고유한 또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남북한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만들게 된다. 남북한의 진정한 통합은 제도적인 외형상의 통합을 넘어서 사회의 내재적인 동질성을 회복하는 단계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다양한 분열적 요소를 잠재시킨 겉으로의 통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보다 여건이 좋았던 독일의 경우도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사회적 거리감이 사회통합에 있어서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호간 차이를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전체주의적 영향들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과 이를 위해 일정정도의 사회적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적 거리감과 그릇된 편견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⁸⁴ 남한 사회내부의 보혁간의 대립이 갈등구조로 증폭되는 현실에서 남북한간 차이의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차이의 인정과 관용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은 통일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 양자적 관점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내부의 갈등구조 해소를 포함하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포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⁸⁴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반편견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4).

(4) 냉전문화 해체를 지향하는 통일교육

분단구조는 이에 상응하는 내적 문화를 형성한다. 남한사회의 냉전문화는 분단으로 인한 비정상적 분단문화체계로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남북한간의 대립구조의 내적인 표현형태가 냉전문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기 냉전문화는 반공과 레드컴플렉스의 형태를 지녔으며, 탈냉전기라 할 수 있는 현재 보혁갈등, 혹은 남남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냉전문화가 남북한간의 분단과 대립이라는 장기적인 형성과정을 거쳤으며, 따라서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의 해소를 위한 내적인 노력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남남갈등의 소지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하는 현상은 냉전문화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상존상황에서 남북관계진전에 대응하여 대내적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양상보다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비타협적 구도로 사회가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남갈등이 형성되는 지형이 초래되었다. 이는 냉전구조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 즉 타협적 구도를 설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성찰적 통일교육을 통해 그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와 정상문화로의 회귀는 통일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보혁간의 차이와 편가르기가 아니라 보혁간의 정상적인 공존관계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진사회에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문화의 해체방식 역시 흑백논리차원의 청산방식이 아닌 공존의 논리 속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대화조차 거부하는 보혁간 갈등구조의 해소는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이나, 대북포용정책의 방향성이 옳다는 전제 속에서 비판적 평가를 수구적 발상으로 치부하는 태도 역시 해소

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남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한 대북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관계개선에 수반되는 사회문화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남북관계발전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와 상충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대내적 냉전구조 및 냉전문화청산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금기영역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 남북관계 발전시 나타날 사회적 갈등 및 남남갈등을 중화시키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통일교육’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보수, 진보간의 ‘합의를 위한 의사소통구조’를 구현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지형과 사회적 인내의 형성을 위한 기초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대립적 대화단절의 상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두 세력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와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열린공간’을 제도화하여 갈등을 중화하고, 합의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열린공간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나. 통일인프라 구축 추진전략: 탈냉전형 통일교육지원체제의 구축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의 해체는 한국사회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제도와 문화의 관성은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적 패러다임속에서 기원을 형성하고 있는 통일교육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관성간의 마찰이 나타나고 있다.

현 통일교육체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냉전체제하의 통일교육은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의 성격을 지향하기 보다는 국민윤리차원의 이념교육의 특성을 지녔다. 통일교육차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반공 및 안보교육이라는 국가적 캠페인의 하부구조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자율적 프로그램이 마련될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일교육은 국가안보라는 상위체계를 위한 하부구조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안보교육체계의 일부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통일교육은 안보교육과 소수선발인원에 대한 방북교육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체제는 냉전의 해체와 남북화해시대의 도래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안보교육체제의 관성과 함께 통합되지 않은 학교교육 및 취약한 국민교육체제, 교육전문가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점이 그것이며, 이는 남북관계개선과 통일교육수요의 급증상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기반 및 통일역량의 현실화라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및 지원체계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비단 학교교육과 시민사회 교육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 문화 등 냉전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특히 통일교육을 시민교육차원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상황적 조건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학교통일교육 지원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성의 제시와 이를 토대로 한 교재개발,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통일전문교육 실시 등 보다 체계화된 통일교육지원시스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안보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현장교육도 점차 통일을 대비하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시민 통일교육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관련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통일교육을 위한 종합시스템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통일교육원을 직접교육기관에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각 지역에 통일교육지원센터 등을 설립, 통일교육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통일정책대학원의 설립 등 통일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는 사전대비체제의 강화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의 소외계층에 대한 통일정책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은 대체로 통일문제 인식에 있어서 남성 계층보다 보수적이고 낮은 관심도를 나타내지만, 청소년 계층보다는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계층의 특성을 감안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종교 단체, 학부모단체, 여성단체, 지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업주부들을 위한 여성들의 사이버통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여성통일 전문가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통일의식의 약화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통일의식의 현실화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청소년층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청소년의 통일의식 약화는 통일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직접적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소년들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는 적극적

통일교육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높은 인터넷매체 활용도를 고려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전용 포털사이트에 통일코너 등 간접적 교육효과를 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단체를 통한 특성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은 통일관련 단체에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단체의 교육프로그램에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의 방송프로그램들은 ‘보는 프로그램’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참여형 통일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토록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주입식 학교통일교육체계를 개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수요자중심의 통일교육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단기 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전략

가. 통일교육강령의 제정

통일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떠난 민족공동의 문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적 사안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생활세계에서의 변화에서부터 체제의 근간이 바뀌는 복합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통일은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남북관계 변화과정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남한사회내의 갈등구조, 즉 보혁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남갈등의 심화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청산되지 않은 냉전문화와 개인과 집단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문제 및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끊임없는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증

명하고 있다. 여야간의 대립은 사실상 국민여론이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상이한 정책과 대립구도는 역으로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통일정책의 변화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바, 통일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교육 역시 이와 같은 합의의 중요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이 개인이나 집단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추진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통일교육강령의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교육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강령의 제정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는 ‘최소주의적 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추구하는 합리적 통일관의 정립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분단으로 인해 남북 모두 천문화적인 분단비용의 지출을 강요받고 있으며, 국력의 낭비와 아울러 한민족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통일교육을 통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사회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 분단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인 통일사회의 모습을 미리 상정할 수 없으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고 있는바,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이 가능한 원리라는 점에서 남북한 체제를 떠나 보편적 가치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이 정파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추진체계의 기반위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모적 정책구도에서 통일 교육을 분리시켜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남북문제와 아울러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내적 갈등구조의 해소를 지향해야 한다. 남북한사회의 대립구조가 각각의 사회의 근대화과정에 왜곡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바,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냉전구조의 영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이 분단과 냉전문화를 해소하고 통일문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이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60여 년간을 지속한 대립구조와 이질성을 일거에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남북한 사이에는 신뢰를 통한 평화공존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 화해협력의 증진과 평화공존의 단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평화공존없이 평화통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으로서의 지향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1996년 통일교육의 법적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시 이후 공청회와 국회의 심의 등 2년 반의 과정을 거쳐 1999년 제정, 시행되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에 기초, 통일교육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탄생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와 탈냉전적 국제정세의 등장, 그리고 북한 체제에의 위기심화로 인해 통일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현가능한 현실로 인지되기 시작함으로써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현실적 인식을

유도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상황에서 국가주도의 반공주의적 통일교육이라는 정형화된 틀이 효용성을 점차 상실하기 시작함으로써 민관의 협력 하에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통일교육지원법의 탄생배경이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될수록 심화되고 있는 보혁갈등과 남남갈등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통일관의 확립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등 법의 시행은 타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 법의 시행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능력 제고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었는가 라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의 시행이후 개정을 통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통일교육 단체나 실무자들에 대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통일교육 수강자에 대한 혜택의 확대를 통한 교육의 활성화와 냉전적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지원법은 정부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 고쳐, 지원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선방향에는 ‘통일교육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법제도화’, ‘11조 고발조항 등의 통일교육에 걸림돌이 되는 냉전적 법령 개정’, ‘통일교육 대중화를 위한 “통일교육현장” 제정’, ‘통일교육 실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법적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⁸⁵

통일교육법과 아울러 현 통일교육지침의 경우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⁸⁵ 이장희, “통일교육 활성화를 법제도 개선방안,”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2003)

현 통일교육지침서는 지침이라기보다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이해를 위한 교과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바, 내용 체계의 혼재 등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대북인식의 변화 및 남남갈등 부각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런 쟁점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지침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 지침서의 교육과정의 성격이 부족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발된 지침을 통해 통일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의 주관적 취향과 의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 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주로 남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지향했다면, 향후 남북한 주민 모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⁶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행정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실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나 사회통일교육을 우선하는 정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부 산하기구를 범중앙기구로 격상시켜야 하며, 재정의 취약성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다. 학교-사회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통일교육은 정형화된 틀에 의해 규정된 학교통일교육이외에 통일교육의 주체와 수요자에 맞게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사회통일교육이 있다.⁸⁷ 사회통일교육은 통일 및 통일이후의 통합과정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교이외의 생활공간에서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통일교육은 정해진 교과서와 시간, 제한된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과는 달리 소재,

⁸⁶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개선연구,” 이장희 외,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⁸⁷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00), pp. 84~94.

시간, 학습공간 등에 있어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의 연계는 통일교육의 지속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학교통일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통일교육과의 연계는 통일교육시설, 장비, 인력의 공유 등을 포함하는 하드웨어 차원과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학교통일교육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 공공단체 통일교육과정에 대한 통일교육교사들의 연수 및 참여, 사회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학교통일교육에의 참여 등은 가능한 협력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통일관련 교사들에 대한 사회통일교육기회의 확대는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적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진행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교사들의 참여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와 아울러 일부 실시되고 있는 사회체험 프로그램을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에 대한 학점인정의 경우 등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교사들과 통일교육관련 단체간의 협력관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⁸⁸

그러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연계에 있어서 몇 가지 사회통일교육의 문제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⁸⁹ 우선 특화된 전문적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가진 사회통일교육주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주체들의 영세성과 전문성결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프로그램이나, 일회

⁸⁸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00), p. 84.

⁸⁹ 위의 책.

성에 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들이 대체로 교육내용이 이념, 체제, 제도 등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통일교육의 복합성에 비추어 미흡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학교통일교육과의 연계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테크놀로지 활용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이용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이자 정보획득매체로서 일상생활의 일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방송은 가장 중요한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획득매체로서 위상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방식과 더불어 방송과 인터넷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획득 매체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TV(69.9%)이며, 그 다음이 신문(17.5%)으로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TV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반인과 386세대의 경우는 신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획득 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46.3%가 가장 높게, ‘신뢰하는 편’이 41.1%, ‘매우 신뢰한다’가 5.3%, ‘불신하는 편이다’가 5.4%, ‘매우 불신한다’가 0.3%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획득매체로서 방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⁹⁰ 우선 통일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통일교육방송이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과 통일교육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⁹⁰ 이우승 외,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외식제고방안 연구,” 2001년 통일부용역과제, p. 9.

것이다. 학교나 사회단체 중심의 통일교육은 교육대상의 제한성과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바, 방송과의 연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방송제작자, 교육담당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네트워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일관련 방송국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최대의 과제인 통일은 남남 갈등의 극복과 남북의 이질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남남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와 아울러 남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국에 거주하는 한민족간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이 중요하며, 이 경우 방송매체를 이용한 통일커뮤니케이션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통일관련 방송국 설립의 경우 방송을 통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아울러 통일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⁹¹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정부와 통일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간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관련 지식 및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협력방안의 확대는 영세한 한국 시민사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정부와 통일관련 단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상호협력과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연계시킬 경우 각 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통일관련 시민운동 및 통일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활용은 학생과 주부와 같이 통일교육에 관한 접근가능성이 제한된 층들에게 통일교육기회의 확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단체의 경우 대체로 정보제공과 게시판 메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관련정보의 수준과 양은 충분치 못한 편이다. 특히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정보화지원센터 구축, 통일관련 공동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통일포럼

91 위의 논문, p. 128~131.

구축, 메일링 리스트 구축 등이 요구된다.⁹² 따라서 향후 정보공유 노력의 확대, 그리고 통일교육성격의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교육 추진

독일통일에서 나타나는 사회통합의 어려움과 복잡성에 비추어 통일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개념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과정에 시민사회교육체제 및 평생교육원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체제는 학교통일교육대상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히 통일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통일교육의 장으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속 발전 가능한 평생교육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통일관련 단체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통일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통일교육을 주관하는 시민단체의 전문성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의 생활영역 내에서 사회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시간과 장소의 편의성의 문제이다. 독일의 시민정치교육센터인 Volks Hoch Schule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한 좋은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주민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기본적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행정기관(동, 면사무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⁹³ 또한 구민문화센터와

⁹² 윤성이,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2001년 통일부용역과제 pp. 128~131.

⁹³ 이근철, 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월드, 2000), p. 346.

같은 자치단체의 문화교육시설을 활용한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설들을 활용하여 시민민주주의와 시민통일 교육을 확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같은 시민정치교육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자체차원의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개념이 적용된 특화된 교재, 관련자료, 정보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제공 및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중앙정부, 전문가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4.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가. 사회통합 통일교육의 필요성

남북 관계의 변화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남한의 통일교육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통합 교육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남한 주민의 북한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과 북한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북한 방문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 교사, 교수, 역사학자, 노동계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북한 방문과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도 남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정보 확대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입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남북한 관계발전과 교류협력의 확대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중장기 사회통합과 관련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남한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북한 방문자가 크게 늘어나고, 북한 사회를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

이 대폭 증가하며, 북한 관련 정보가 뉴스,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완전히 개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남한 주민 중 북한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발전을 전제로 하여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남북한 교류협력의 진전은 북한사회내의 남한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여, 이로 인하여 북한주민의 남한사회 입국자 수가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은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개편 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는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적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은 대량탈북자의 발생시 전면적인 사회적 훈련과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전체의 사회통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위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은 최소한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원에서의 초기 교육과정을 거치고 퇴원한 이후의 사회통합 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설립목적과 기관의 활동방식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단체를 네트워크화하며, 통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회통합 교육이 실생활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들에 대한 정보, 경험, 사회통합 교육의 실험 내용, 개별 프로그램의 운영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단기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중장기적인 사회통합 교육의 진행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른 통일이후의 전개상황에 대응하는 데에도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이전 동서독간 오랜 기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하여 상호간의 문화와 사회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장기간 사회통합의 문제를 경험하였는데,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독일보다 힘든 사회통합의 과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통일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경험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주민의 시민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은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인프라

(1) 하나원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입국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6년 12월 15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착 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정착 지원 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을 개원하였다. 이 시설은 단순한 숙소로서가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은 2004년 상반기 기준 총 5,170명으로 최근 들어 대량입국 상황이 진행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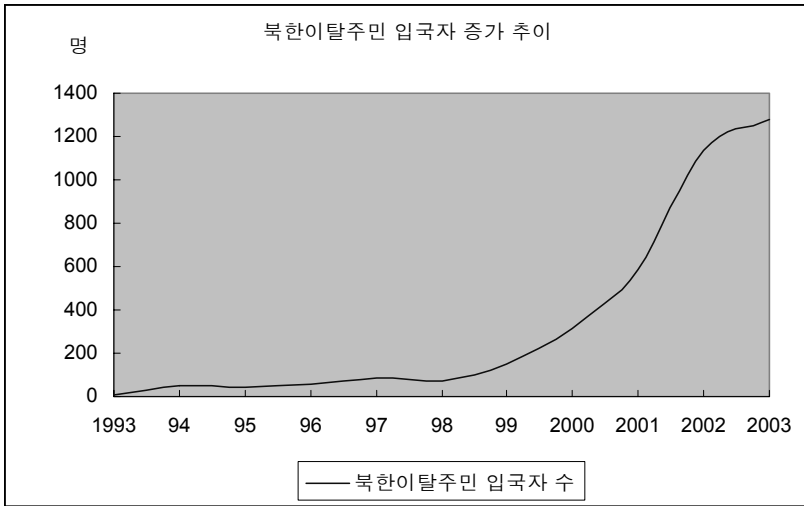
<표 VI-1> 연도별 교육생 현황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총계
입소	61명	297명	572명	1,139명	1,281명	760	5,170명

하나원 교육 훈련의 기본 방향은 사회 적응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회 정착과 취업에 필요한 진로 및 직업 지도 강화, 교육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매체 및 교수법 개발, 교육 훈련 분위기 쇄신을 위한 교육생 생활 관리 강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 적응 능력 배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사회 분야별 개관’, ‘법과 시민 생활’ 등 교육을 통해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나아가 ‘남한 언어 적응’, ‘대중 매체 특성’, ‘지리 및 지역 생활 이해’와 함께 건전한 시민 양성을 위해 ‘생활 경제’, ‘생활 법률’, ‘생활 예절’, ‘생활 안전’, ‘가정 관리’, ‘건강 생활’, ‘이성과 결혼’ 등의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관련 지식의 습득 이외에 우리사회 정착 의지 함양을 위해 ‘저명인사·정착성공 탈북자·보호담당관 특강’도 실시된다.

<그림 VI-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현장 학습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시설 탐방, 시장 구매 활동 체험의 현장 학습 이외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대중교통, 관공서·은행 이용방법 등의 현장학습도 실시된다. 양로원·고아원·농촌일손 돕기·거리청소 등 봉사활동과 삶의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예절을 체득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외부 ‘예절 학교’에 입소 교육도 실시한다.

진로 지도 및 일상생활 기능 습득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원의 짧은 교육 기간(2개월)을 감안, 기초 직업 훈련보다는 퇴소 후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능 중심 교육을 통해 건전한 ‘현대 생활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또한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 지도를 위해 ‘직업탐색’, ‘사전 직업체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직업 훈련 현장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기능 실습을 위해 ‘전산 교육’, ‘운전 교육’, ‘의·식생활 교육’과 취업이 용이한 ‘간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 지도 강화는 생활 관리 규정의 공정한 적용을 통한 법·질서 준수

의식의 함양 차원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교육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교육생의 규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습적인 생활 불량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물 파손, 폭행 등 인성 불량자 및 중대한 생활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차 지원금을 삭감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교육 대상의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는 성인반, 여성반, 청소년 및 초등 유아반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육 중점은 다음의 표에 요약되어 있다.

앞으로 하나원은 사회 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현장 학습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든가 인근 직업 훈련 기관 및 기업체와 연계, 기초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진입 초기의 애로 사항을 완화한다든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흥미를 유발하고 능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원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일부 차원에서 향후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까지를 염두에 두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차 시설은 또 다른 형태의 수용소일 뿐이며, 격리된 상태에서의 적응 교육이란 실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편의 위주의 관리일 뿐이라는 일각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 이탈 주민 적응 교육은 현재까지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⁴ 자유를 찾아 남한 사람들에게 또 다시 집단생활을 시키는 것으로 인해 일부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밑거름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편이다. 또 하나원 건립 초기 지역 주민의 우려와 부정적 인식도 많이 불식되었다.

94 독고순 외, 『중장기 통일교육원 발전방안』 (서울: 통일교육원, 2003).

<표 VI-2> 계층별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프로그램 내용
성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성수련교육, 예절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체와 연계한 근로현장학습 등을 편성·운영하여 심신안정과 기초직업교육을 강화
여성반 (성남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편입시 취업에 필요한 가정보건, 제과·제빵, 피부미용, 요리·봉제 등 기초직업교육 실시 ▪ ‘언어예절’, ‘식사예절’, ‘가정생활’, ‘건강한 성’, ‘이웃과 어울리기’ 등 바람직한 여성상을 목표로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반 및 초등·유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반의 경우 「연극」, 「역할극」, 「전국순회 현장학습」을 통한 심성순화 등의 특별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적령아동은 인근 삼죽초등학교 (교육부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에 편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수업은 남한 학생과 합반 - 오후 수업은 탈북학생대상 개인특성별 특별교육 ▪ 4~7세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반 편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이하 영·유아를 위해 놀이방 별도 설치운영

하지만 현재 하나원 운영에는 몇 가지 제한점도 있다. 먼저 지역적으로는 하나원이 인근 도시나 농촌으로부터 너무 격리된 외진 곳에 있어서, 남한 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반사회나 견학 학습, 자원 봉사자의 참여 등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 주민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남한 사회에 대한 소개와 교육에 있어 현장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초기의 목표와 달리 실제적인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북한 이탈 주민의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 방법이나 내용 측면에서는 성별, 연령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⁹⁵ 남한 사회에 관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일천하기는 마찬가지로 하더라도, 직업, 학력 등에 따라 학습 능력이나 태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목표나 기대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95 위의 책.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와 분석이 부족하므로 아직은 강사나 자원봉사자 개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이탈주민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특성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단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들의 생활환경과 능력 정도, 사고방식과 문화 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적응 과정에 대한 개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도 개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유할 장도 없다. 또 하나원에서의 교육 효과를 측정하거나 피드백 할 수 있는 채널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개선에도 제약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응 교육의 효과를 피드백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민간부문의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와 사례

(가) 민간부문의 통일교육 인프라 현황

1994년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남한 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운동들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민간 부문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는 한쪽과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 온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한쪽이 서로 상승 작용을 하며 운동을 키워 오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북한 식량 지원과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띄우면서 민간 차원의 활동을 넓혀 가고 있다. 북한 내 식량난의 극심함, 북한 주민 생활상의 비참함, 10~20만에 달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 등은 주로 이들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표면화되었으며, 국제 NGO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나 세계적 인권 전문가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참담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재외 탈북자의 난민 지위 인정과 인권 보호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지원과 관심도 많이 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은 종교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대학이나 여성 단체 등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정부의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물질적 지원은 큰 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업 훈련이나 결혼 상담 등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하나원을 수료하게 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고, 초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결연 단체에서 기초적인 생활 용품들을 협조해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탈북자에 대한 일회성 지원과 종교적 차원의 선교, 상담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을 갖추어 심층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기관과 달리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탈북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자원 활동가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동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1990년대 말경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일부의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와 실무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교육은 「북한이탈주민지원민간단체협의회」의 운영을 맡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선한사람들, 중앙대부설 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한국이웃사랑회(굿네이버스), YWCA 등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 관리자와 자원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는 민간의 탈북자 지원 활동의 수준과 역량을 제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⁹⁶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 복지관들이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무연고 청소년 탈북자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들과의 공동생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꽃지모, 늘푸른 학교, 늘푸른 청소년 상담원, 돈보스고 훈련원, 마자렐로센터 등의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단체와 시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탈북자동지회를 비롯한 기 정착한 탈북자 단체들의 신입 탈북자들에 대한 상담과 결연 등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종교 단체의 물질적 지원이 북한 이탈 주민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종교 단체를 통해 그들의 연결망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시혜성으로 끝나고 말아, 경제적 자립이나 혹은 성공적인 정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대 심리마저 부추긴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북한인권단체에서도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을 토요일마다 방문하여 청소년 등 교육생에게 인성과 감성 및 관계형성 등의 부분을 중점으로 개발시켜주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익히고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재외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문제에 특히 관심과 활동이 많은 북한 인권 시민 연합에서는 자원 봉사자들이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의 학습 과외 지도와 하나원 방문 등을 통하여 북한 이탈 주민과 교류하고 있다. 또 자원 봉사자 70여명이 북한 이탈 주민을 맨투맨(man to man)으로 3~4명씩 담당하여 취업 동향을 파악하고 이탈 주민 후원회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정부의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⁹⁷

하지만 현재 다수의 단체들이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단체들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한 상

96 윤여상, “탈북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 실태,” 『자유공론』 (2002).

97 윤여상, <<http://www.ilovemonority.com>>.

<표 VI-3>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현황

단 체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가양7복지관	사회배출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감리교 서부연합회	사회배출자	결연사업
극동방송	사회배출자	기초생활품
남북나눔운동	사회배출자, 국외 탈북자	결연, 해외체류자 지원
드레마을	사회배출자, 국외 탈북자	결연, 해외체류자 지원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지원, 교육, 결연, 상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사회배출자, 국외탈북자	능력향상교육, 생계지원, 자립결연, 관리봉사자교육
북한인권시민연합	하나원 교육생, 사회배출자 및 국외 탈북자	상담, 학습지도, 1:1결연 기초생활품 및 의료지원
사랑의전화재단(가양동)	사회배출자	체제적응교육, 복지
새마을운동이북5도지부	사회배출자	결연, 자선음악회, 장학지원
순복음교회(선한사람들)	사회배출자	결연, 생활보조금 지원
생명의 전화	사회배출자	상담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직업재활지원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사회배출자	상담서비스
영락교회(북한선교회)	수도권거주 사회배출자	생활상담, 신앙결연
이북5도민연합회	사회배출자	장학지원
이주난민선교회	사회배출자	자매결연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사회배출자	불우자 지원
좋은벗들	하나원 교육생, 사회배출자, 국외 탈북자	해외체류자지원, 생활체험, 심성수련프로그램
천주교민족화해운동본부	하나원교육생, 배출자	종교활동, 청소년프로그램
청년여성문화원	사회배출자	결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회배출자	바자회, 등 적응프로그램
통일민족건국회	사회배출자	영농정착지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회배출 여성	결연
하나로교육복지연구원	사회배출자	상담지원, 컴퓨터 교육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국외 탈북자, 사회배출자	해외체류자지원, 결연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배출자	사회복지사업
한국이웃사랑회(굿네이버스)	사회배출자	결연, 교육지원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하나원교육생, 배출자	심성수련프로그램, 상담
한국자유총연맹	사회배출자	위로행사, 마라톤, 바자회
한국 YMCA	사회배출자	결연사업, 지원활동
한민족복지재단(고향마을)	정착촌 참여자	시범농장운영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사회배출자	명절위로행사
한적(여성자문위원회)	수도권거주 사회배출자	위로행사
행주치마운동본부	사회배출자	지원봉사
희년상담소	사회배출자	해외체류자 지원, 상담

자료: 윤여상, <<http://www.iloveminority.com>>.

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다수 민간단체의 활동 참여는 탈북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측면도 있다.

(나) 민간부분 사회통합 교육 사례⁹⁸

A. 선한사람들

(사)선한사람들은 1999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생계비 및 정서적 지원사업을 실시해오다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2년 2월 기존의 체계에서 학교의 형태로 전환하여 굿피플대학을 설립하였다. 굿피플대학은 정서적인 고통을 겪고,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체계의 구조 차이로 갈등하며, 자본주의적 경쟁체계 속에서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민간차원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2002년 1기생 약 40명이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2003년 1월에 졸업하였고, 2기생 50명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다.

굿피플대학에서는 입학에 일정한 자격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남한에 입국한 1~3년이 경과한 30~40대로써 창업의지가 분명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굿피플대학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집중적인 전일교육과 매주 한번의 지역단위의 소그룹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금융, 재테크, 카드 등 실제 경제 활동을 위한 경제교육과 전인적인 회복을 위하여 자아정체성 확립, 대인관계 능력 배양, 건강한 가정 세우기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굿피플대학은 취업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취업교육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소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창업이론 강

⁹⁸ 윤여상, <<http://www.iloveminority.com>>.

의와 현장탐방, 창업시뮬레이션을 통한 소자본 창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성공적인 사업체와의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기술을 배우는 아르바이트에서 정식 취업으로, 취업을 통한 경험과 자금확보를 통해 창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자립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시켜 주기 위해 인성교육, 생활상식을 포함한 지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 등 전인적 종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외플래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실제적인 생활상식 강의, 사례 및 경험담 제공, 자유토론, 소그룹활동(Case study 활용), 현장탐방, 전담교육기관 선정 운영 (상담 및 취업, 창업분야), 전임실장을 통한 개별 적용 교육, 적성검사 및 현장 아르바이트, 창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서보고서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B. 탈북자 동지회

탈북자 동지회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로 1998년 12월 18일에 발기인 모임을 갖고 1999년 1월 26일에 통일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탈북자 동지회는 국내외 탈북자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북한과는 많이 다른 남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탈북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문화 행사를 통해 고향을 떠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해외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탈북자 동지회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과 「탈북자정착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남한 주민들, 즉, 북한 독재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

보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알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에 공개강연과 계간지 발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탈북자 동지회의 조직은 회장단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었는데, 사무국의 경우 동지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집행, 지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과 대외사업을 하는 대외협력부,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총무 조직을 가지고 있다.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는 탈북자 동지회의 전반 사업을 지도 총괄하고 있다.

C.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 인권운동가, 지식인, 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오직 휴머니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각 국의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함께 하여 활발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이탈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북한이탈주민 무료진료 알선과 나누어 쓰기 운동을 전개하던 중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1999년 3월부터 북한이탈주민돕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과 탈북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하여 북한이탈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학습 지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한겨레 계절학교와 하나되는 나들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훈련하는 자원봉사자 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어린이,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매주 1회 2시간~3시간 이상 실시한다.

둘째, 하나원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경기도 안성 소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토요

일마다 방문하여 교육생(아동·청소년)에게 인성과 감성 및 관계형성 등의 부분을 중점으로 계발시켜주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익히고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13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이다.

셋째, 일반 가정집을 소개하여 홈스테이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나원에 있는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들의 가정에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남한 가정 문화를 익히며, 또래집단과의 공감대 형성을 돕고 있다.

넷째, 다양한 외출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순조롭게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 생활지도를 받고 있는 탈북 아동·청소년 연소자가 함께 한 달에 한번씩,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놀이동산 등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계절학교를 운영하여 북한청소년들의 진학을 돕고 있다. 남한에서의 교과과정 및 내용의 차이, 용어차이 그리고 문화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고입·대입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기초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산업체 견학, 사적지 탐방 등을 실시하고자 개설했다. 나아가 탈북 청소년으로 하여금 남한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통일 이후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D. 하늘꿈 학교

현재 하늘꿈 학교는 운영위원과 후원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전체 운영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꿈 학교는 정식교사 4인, 교과목담당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의 수업진행을 하고 있다. 이외에 상담, 건강관리, 주말교육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행정업무, 사무업무 등을 교사들이 병행하고 있고, 기숙형이기 때문에 24시간 학생들과 함께 교사가 생활하면서 엄마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학업에 필요한 교사 수는 적어도 정규교사 10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 학교는

4명의 교사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데 자원활동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늘꿈 학교는 고려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북한이탈 청소년들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이런 점은 다른 장소에서는 찾기 힘든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된다.

하늘꿈 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중입, 고입, 대입의 세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아이들은 많은 나이에 비해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을 공부해야하는 학생이 다반수여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증을 받는 것이 시급한 형편이다. 따라서 하늘꿈 학교는 일반 한국학교처럼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하지 못하고 각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하여 검정고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검정고시 중심의 수업은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맞는 특성화교육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교육부 인정의 학교는 각각의 정식과정을 이수해야하고 반드시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초, 중, 고등의 졸업증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학교에 입학한 북한청소년들 대부분도 그들에 맞지 않는 수업과 또래들의 문화적 충격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이탈현상이 잦게 일어나고 있다.

다.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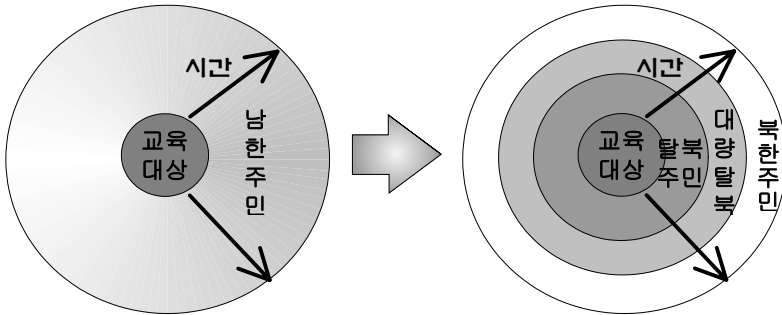
(1) 사회통합 교육의 중장기적 추진 필요성

통일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은 궁극적으로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에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완성, 안정적 국가 통합 여건 보장을 위해 통일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 혼란 방지, 통일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 차원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사회 통합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남북한 주민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 교육은 통일 과정의 진전에 따라 몇 단계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단계는 현재와 같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은 점차 확대되나 큰 틀이 바뀌는 변화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는 교류 협력 단계이다. 이 기간에 북한 이탈 주민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통일 논의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한동안 더욱 증폭되다가 조정, 수렴되어 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1단계에서의 사회통합 교육은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남한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적응 교육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물론 남한 주민이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가도록 남한 주민에 대한 민주 시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2> 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 교육 대상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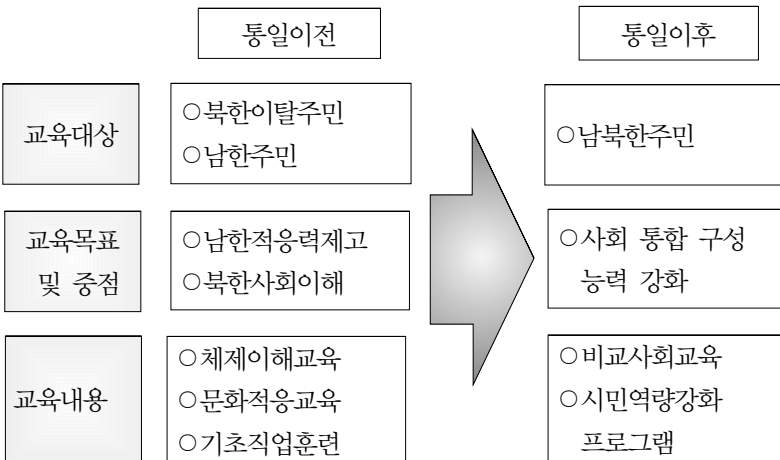


2단계는 예비 통합기로 명명할 수 있는 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논의가 진전되면서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 혹은 북한주민의 대량 탈북으로 인하여 남한내 북한주민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단계에는 북한이탈 주민이 대량으로 발생되어 이들의 적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교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기초적인 생활 안내 차원에서 긴박하고 압축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1단계의 북한 이탈주민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단체

의 연계성 강화, 역할 분담의 극대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단계는 통일 이후의 기간으로서 장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직후의 상황과 안정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직후의 기간에는 남북한 재외공관이 통폐합되고 북한 지역 사회 간접 시설 투자가 활성화되고 남한 기업의 북한 지역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북한 지역 경제 재건으로 분주한 시기로서 통합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돌과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 시기에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생소한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민주 시민 교육과 함께 체제 적응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서 통일 직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힘으로써 안정적 국가 통합, 사회 통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일정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쌓아가며, 남한 지역 주민과 대등하게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사회를 구성해 가는 시기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I-3> 사회통합 교육 진행도



(2)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

(가) 하나원의 초기 사회통합 교육과 프로그램의 심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은 사회통합의 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하나원에서의 사회통합 교육은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과정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이 2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퇴원이후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하여 익혀야 할 생활방면의 내용을 빠르게 습득시켜야 하는 이유가 크고, 나이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이 남한사회 적응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정신적, 사상적, 이론적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⁹⁹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완전한 적응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체계에 대한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 교육의 수준과 단계를 체계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별, 성별, 특성별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원의 사회통합 교육은 민주시민사회를 이해하는 교과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남한사회의 구성원리가 되는 선거과정, 정치과정,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상기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에 대한 내용이 어렵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 성별, 연령, 경험 등 다양한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전달과 이해가 어렵다는 현실로 인하여 남한사회의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즉, 은행에서의 통장만들기, 은행 거래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시장경험, 물건거래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한사회의 적응은 남한사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생활방면의 경제적 적응, 심리적, 법률적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교육은 여전히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⁹⁹ 이상만,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 통일부, 2004).

최근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리를 통하여 교육의 특화를 진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여성 홀로 남한에 입국한 경우 이들을 모아서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남한사회 초기 적응교육의 성과와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⁰⁰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교육은 공통적인 내용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여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함으로써 가족단위와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집단 교육에 비하여 교육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적용되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과 조직, 인력의 지원을 통하여 차별화, 특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사회 초기 생활적응 교육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통합 교육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과 북한이탈과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구성 원리와 과정,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 정치과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개발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강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통합 교육을 학력별, 인식수준별로 분류할 경우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해당 교사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위하여 특정교사에게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수준은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남한사회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수가 5천명을 넘어섬으로써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북한 체제의 변화 등에 따라서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남한 입국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통합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¹⁰⁰ 이새롬,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조기정착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자료 (2003).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 사회통합에 성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경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이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며, 지원책도 집중되어야 한다. 초기에 성공적인 사회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실패하여 문제가 누적될 때 그 해결비용과 재교육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은 사회통합 교육 수준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초기의 남한사회 생활적응은 이루어질지라도 북한주민의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남한사회 적응은 중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경제생활에는 적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⁰¹ 따라서 대규모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사회통합 교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회통합에 대한 방향과 방법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 누계가 적어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한 약 3만 명을 넘기 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하고, 집중적인 사회통합 교육의 진행을 통하여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 메커니즘과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존재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질 경우 후유증은 먼 훗날 나타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한 통일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 체류기간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하고, 그에 따라 하나원 교육기간도 차별화하여야 한다. 북한을 떠나서 중국 등 제3국 체류기간이 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하나원 수용과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현재의 2개월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을 이탈한지 1년 미만 기간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경우는

¹⁰¹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01).

하나원 체류 및 교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크다. 중국 등에서 3년이상 머물렀을 경우 이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이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남한사회 작동원리와 유사한 사회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남한사회 작동원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과 남한사회 입국 기간이 짧은 탈북자의 경우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이 상대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원 교육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원 수용기간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은 초기, 중기, 장기로 분리되어 확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생활적응 교육과 최소화된 남한사회 이해교육, 중기에는 직업교육과 중간수준의 민주시민 교육, 장기에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경제적으로 적응한다고 할지라도, 경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몰이해, 왕따 등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원은 2달간의 제한된 기간의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인력과 예산, 조직을 가지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생활 적응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나원의 수용시설을 확충한 것은 바람직하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즉, 사회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하나원에서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는데 대한 반대와 의견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원에서의 생활교육과 사회통합 교육 기간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관련되어 교육수강 그룹을 가족별, 성별,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은 성별적인 차이만을 고려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기준에 의한 차별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은 북한 이탈 청소년 교육기관의 마련과 직업교육기관의 설립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하나원 교육이후 남한사회에 그대로 적응한다는 것이 어렵고,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과정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준비 중에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도 일반학교의 교과과정 운영과 차이를 두어서 남한사회 이해를 위한 사회과목 등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하나원의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향후 운영되는 청소년 학교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과 연장선 상에서 짜여지고, 공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별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특성화와 교육 인프라의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시민사회 교육이나 자유민주주의 교육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하여는 남한사회 생활적응을 위한 직업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수준, 전문대 이상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이 경제적, 비경제적 차원에서 성공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여론 주도세력으로 중장기적인 남북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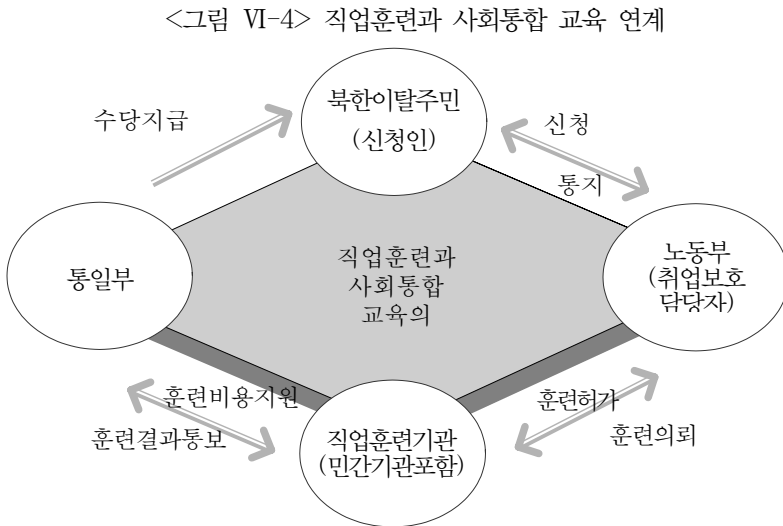
넷째, 하나원의 프로그램과 시설을 외부 시설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통합시키는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나원이 서울 등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의 시간과 교통수단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메울 수 있는 교육 시설 및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 하나의 예로 하나원 프로그램의 연계시설에는 원격 사이버 교육을 위한 첨단시설이 상호간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와 연계되고, 통일교육원의 사회통합 교육이 강화되어 하나원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경우 상호간 연계인프라의 설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와 하나원, 사이버 대학과 하나원, 혹은 일반 대학과 하나원, 기업연수원과 하나원의 연계 시스템의 구축도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해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통합 교육 기관의 연계성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사회정착과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방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동 과정에서 남한의 시민사회 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정착과정의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의 결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은 초보적으로 통일부와 노동부의 연계성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⁰²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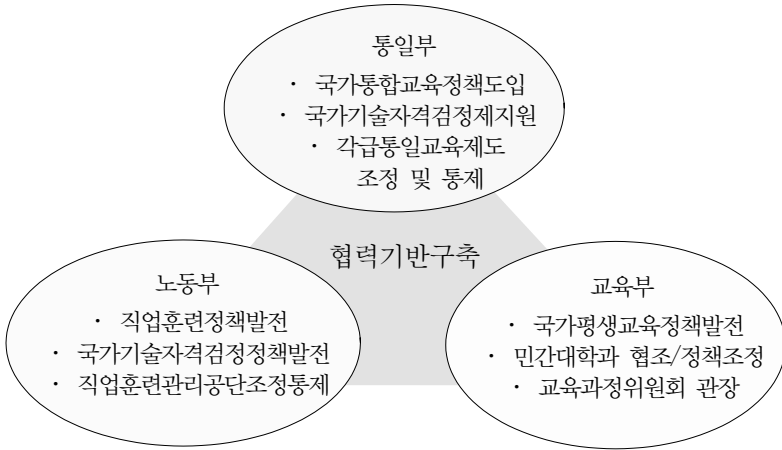
¹⁰² 통일부,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3).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편의를 고려, 가능한 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³

직업훈련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고 장차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직업교육의 진행은 아직 초보적 상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통일교육을 통한 시민교육, 직업교육 등 종합적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연계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과 연계되어야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할 정부 부처로는 통일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될 때 안착된다고 볼 때,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직업의식과 능력 또는 기술을 보유하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랜 동안 생활해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낯한 사회의 문화와 요구 수준에 부합되도록 교육·훈련하는 일은 단지 직업적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현재 연계되어 있는 통일부와 노동부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적 측면 뿐 아니라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부와도 연계하여, 특히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체계 기반을 구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연구 기관, 대학간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 교육 여건이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3 위의 책.

<그림 VI-5> 관련 부처간 협력 기반 구축



(다) 사회통합관련 중장기 교육 체계 구축

50여년 이상의 분단 상황과 그간의 교류 없음으로 인해 대부분 북한 지역의 성인들은 의식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통일 사회에 대한 적응은 성인의 경우 더욱 더디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성인들의 재사회화를 유도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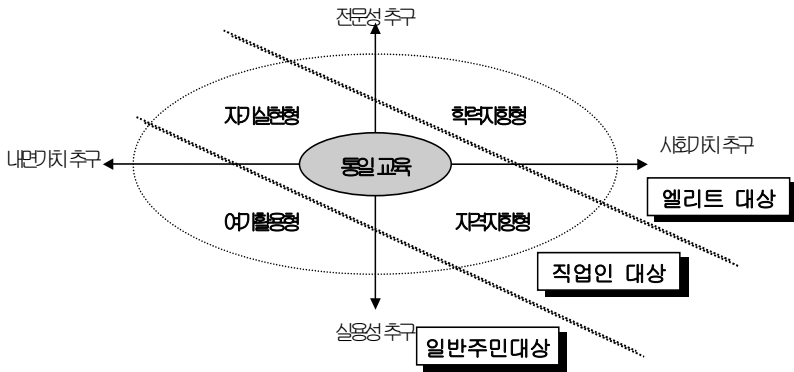
기본 원칙은 자율적 교육 여건 조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회 제공, 그리고 행정 타부처와 민간기구·기관의 제공 프로그램 최대 활용, 평생 교육 체계의 지원과 총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이 될 것이다.

평생 교육은 교육 대상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점 영역을 차등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문성과 실용성, 내면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두 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 대상을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내면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교육을, 직업인을 대상으로는 자격 지향적 교육이면서 동시에 자아실현형 교육을, 그

¹⁰⁴ 독고순, 『중장기 통일교육원 발전방안』.

리고 엘리트 층을 대상으로는 학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원격통일교육시스템, 인터넷 통일방송시스템, 위성통일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VI-6> 통일교육 체제 통합 모형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체제와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의 연계강화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초보적 단계의 사회통합 교육이 끝나고 하나원을 떠나게 되면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 대한 정부의 도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니터링도 북한이탈 주민 신변보호 차원의 접촉 등 개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며,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유할 장은 종교조직 등 일부만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하나원에서의 남한사회 적응 교육 효과를 측정하거나 피드백 할 수 있는 채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개선에도 제약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원을 나온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체제와 사회통합 교육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대규모로 확대될 경우에 대비한 사회통합 교육과 그 이후 관리체제의 강화, 또 하나원에서의 초기 사회통합 교육과 이후 적응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초기, 중기, 장기적인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여가는 종합

적 연계시스템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¹⁰⁵

일단 여기서는 먼저 하나원 교육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접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사회통합 교육 인프라의 구축보완 되어야 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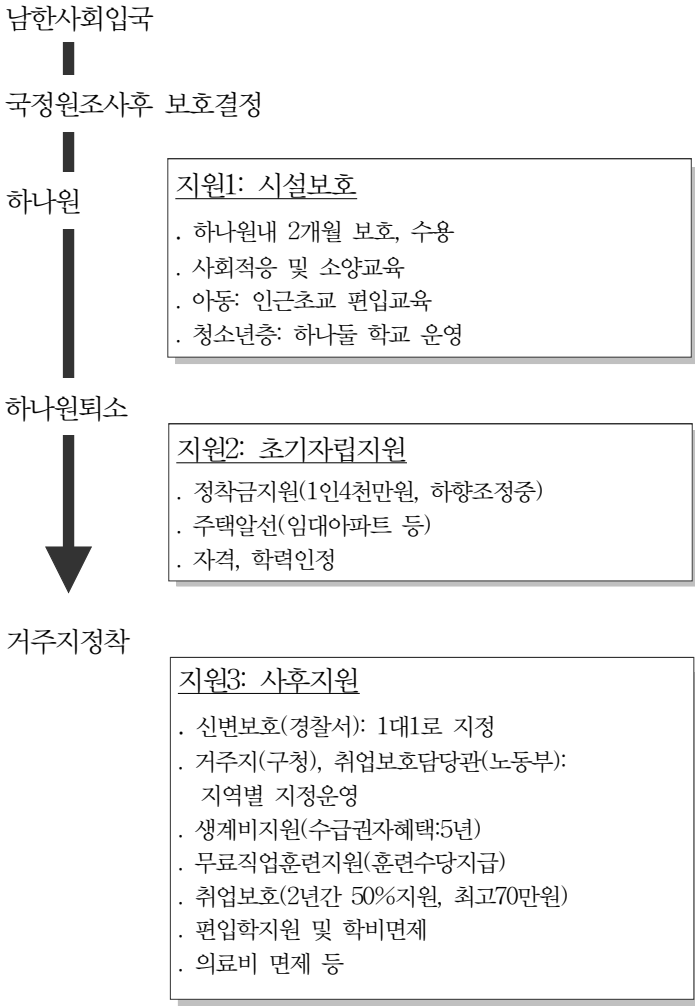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보호, 초기 자립지원, 사후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조사과정을 거친 이후 보호결정을 한 후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기관과 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과 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속에는 사회통합 교육이 매우 단기적으로 진행되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과목이 강의위주로 짜여져 있다. 이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살펴보다더라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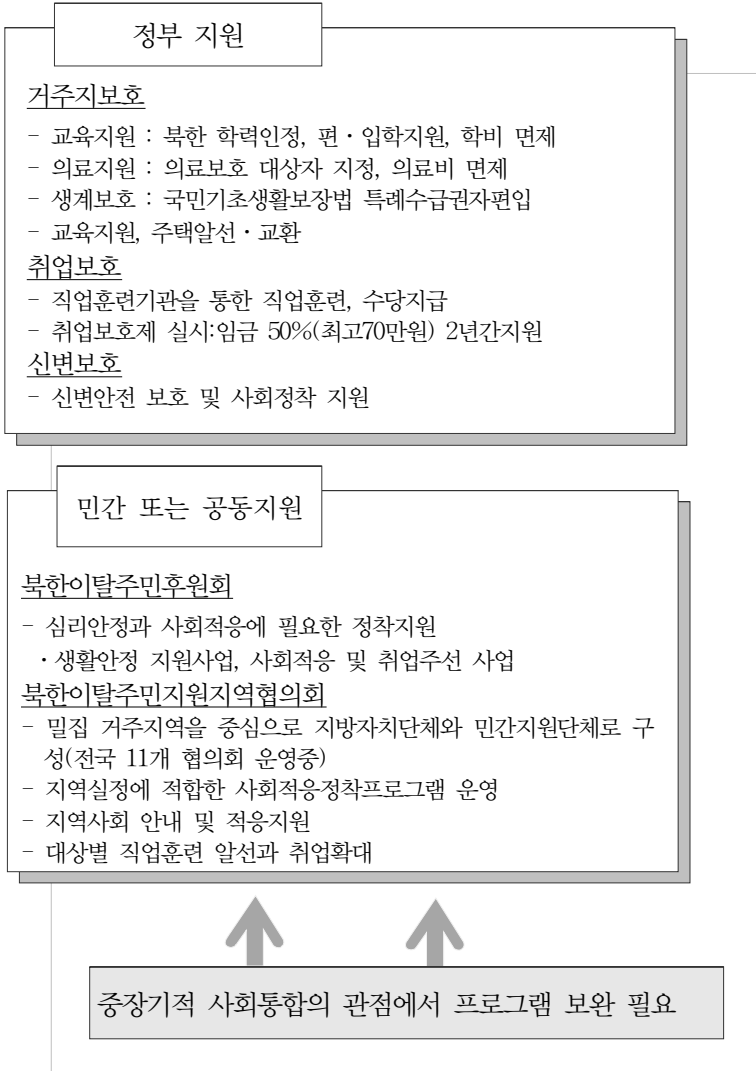
105 통일부,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그림 VI-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의 사회통합교육과 남한사회 이해 교육을 받은 이후 거주지 정착지원을 받으며, 선정된 거주지에 편입되어 5년간의 거주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속에 포함된 내용 속에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은 부재되어 있다.

<그림 VI-8> 거주지 정착지원의 주요 내용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나온 이후 거주지에서의 보호를 받는 기간,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사회통합 교육과 남한의 시민사회 적응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야 하며, 사회통합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을 상담하고, 지원하여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¹⁰⁶ 여기에는 단순히 통일교육기관이나 사회통합 관련 각종 기구에서의 강의 식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담, 면담, 그리고 인식과 사고방식의 진단, 조직 속에서의 갈등원인 진단과 재적응 프로그램의 운용 등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현장에 더욱 밀착된 사회통합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 혹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른 상황변화가 가져올 대량북한이탈주민의 발생을 전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착지원 과정에서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다. 즉, 직업훈련과정과 사회정착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적응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표 VI-4>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교육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사회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험 사례 공유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 시민사회 적응 성공사례 개발과 확산 ● 북한이탈주민 포털사이트 운영과 정보공유 ●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의 시민사회교육 지원프로그램 가동 (사회보험기관, 이탈주민특성화 병원, 교육기관 등) ●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단체의 시민교육 참여프로그램 확대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의 사회통합 교육 확대 ● 통일교육원, 종교단체, 지자체 등의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메커니즘의 네트워크화

이러한 교육은 이론과 강의형식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행동양식, 실천 양식, 시민사회조직에서의 함께 활동하기, 시민사회 직장행동방식 익히기, 협동프로그램, 공동 이해 및 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자본주의 직장문화, 경쟁과 생산성,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 방식 습득, 문화의 다양성과 공존 프로그램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

¹⁰⁶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

는 사회통합교육 기획관리, 원거리 통합교육 시스템과 네트워크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각종 지원기구와 교육기관,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기관, 여성교육기관, 북한이탈전문직 노동자의 남한사회 전문직 연속성을 위한 해당기관 재교육 프로그램, 남한가족 관계의 이해를 위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보호,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의의 네트워크 구성과 연계성 강화를 통하여 상호 관련 정보 공유와 프로그램 진행의 성과 및 수정내용 공동평가 및 운용, 이들 기관의 네트워크화 추진 중앙기구와 관리조직의 설립, 동 기관에 의한 정보의 공유 및 피드백 관리, 통일교육원 등 통일교육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통로 및 협력관계 진행,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지원 등의 제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넷째, 하나원 퇴소이후 사회적응과정에서 실패하거나 문제점을 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재교육을 위한 센터나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네트워크 속에서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참여와 관찰 속에서 사회통합과 관련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여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통합 종합재교육 센터(가칭)와 같은 기관의 운영이 요청된다. 이러한 기관이 운영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와 남한사회 적응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의 내용과 준비

(가)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중점 방향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통일교육기관의 대부분의 통일교육은 남북관계 진전의 초기단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북한의

개혁개방이 초기단계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도 크지 않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도 분단국 사례, 즉 과거 통일이전의 동서독과 현재의 대만과 중국간의 교류수준에 비교해 볼 때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원이나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의 교과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통일교육의 내용과 주요 개설 교과목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이해, 북한의 이해, 일부 남북한 사회통합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 대상자도 대부분 남한 주민과 학생들로서 사회통합 교육과 관련된 교육 참여자나 남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교육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경우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반, 북한이탈주민과 그 담당자반 등이 신설되어 확대되고 있으나 남북교류협력의 진전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초보적인 사회통합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각종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행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 교육도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 최소한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사회통합이라는 입장에서의 교육보다는 경제적 지원 혹은 생활지원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통일 상태와 유사한 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시민단체, 종교단체, 나아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현 단계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준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학교교육, 사회통일교육 기관 등 모든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는 각종 통일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의 중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VI-5> 중장기 통일교육 중점 방향

단계	통일교육 중점 방향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정책, 한반도 주변정세 등 교육 • 남한주민 대상 북한 이해 교육 • 소수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주민 통일교육을 비슷한 비중으로 접근 •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인적교류 본격화, 북한 인터넷 환경 진전으로 남한 방송매체의 북한 전달 가능 • 북한주민 통일교육은 인터넷과 위성 혹은 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남한사회 이해교육에 집중 • 북한이탈주민 급증으로 남한 적응교육 비중 높아짐 • 교류협력의 본격화로 남한주민 통일교육은 북한정보 및 정부정책 전달교육에서 시민사회교육으로 중심이동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이해와 남한사회 적응교육에 집중 •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전면적인 북한주민의 재사회화 교육에 응용 • 북한 지도자 및 간부공무원, 핵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 •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정보 프로그램 제공 • 남북한 공무원, 공기관 간부 사회통합 교육

첫째,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넘어서 중간단계의 교류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남한주민 상대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합 교육으로 전환된다. 이때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대규모 사회통합 교육과 프로그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나아가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 방송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도 복잡 다양화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고, 남북관계가 중간단계에 진입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기관은 교육 비중이 남한주민 상대에서 북한이탈주민 혹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며, 중간단계에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 교육이 같은 비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남한사회의 정치 문화적 다양성과 구성원리, 시민사회의 작동원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예술과 표현의 자유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사회통합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은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간단계를 넘어서서 남북한 통일이 가까운 시기나 통일초기 단계에 이를 경우 통일교육은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완전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남한의 각종 통일교육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북한주민 재사회화 교육과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진행에 집중된다. 이때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넷째, 통일안정 단계에 진입할 경우 북한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과 함께 주요 북한 지도자 및 간부공무원, 핵심기관 책임자 등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과 함께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네트워크화, 정보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종합적 사회통합 교육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나) 통일교육 기관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현재의 통일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보면 사회통일교육기관, 통일교육원, 교원단체, 민간기관 등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관련 교과목을 매우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에 관한 관계의 진전이나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변화, 또는 통일유사 상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주제들로서 중장기적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단체, 사회교육기관, 통일교육 연수기관, 통일교육원 등의 통일교육은 현재의 남북관계, 통일정책, 북한이해에 집중된 통일교육 교과목 편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중

장기적 시점에서 사회통합 교육의 교과목과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각종 통일교육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사회통합 교육과 시민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준비해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한의 각종 통일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해당기관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⁷ 먼저 정부의 통일교육 중심기관이 되고 있는 통일교육원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북한이해,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정책의 비교 등 비교적 각 분야별 균형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반면 교원연수원의 경우 통일교육원과 마찬가지로 통일 및 남북문제 이해와 관련된 각 분야의 교과목이 고르게 개설되었고, 교원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한 통일교육방법론과 사례 등의 교과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통일교육의 일반론적인 내용과 교원단체라는 특수성을 잘 배합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으로 파악된다. 특히 통일교육원의 교원대상 통일교육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교육원의 교과목이 모델이 되고 있으며, 단지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방법론 관련 과목은 이론적, 개념적 차원의 것이 많은데 비하여, 교원단체의 것은 실제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과목이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07 고정식,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방안』.

<표 VI-6> 통일교육기관별 교과 프로그램 특성 비교

교육기관	교과목 특징	교육목표	통일교육 대상자	편성주체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필요성, 북한이해, 남북한 사회통합, 통일정책에 대한 균형적인 교과목배정 • 대상자특성별 교과목이 고르게 안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주의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관 형성 •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 이해 및 안보관 확립 • 평화공존, 화해협력 필요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교원, 민간단체, 방북자, 남북협력 실무자, 종교인 단체 등 한국사회 각 기관이 균형되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통일교육 편성 노하우 보유 • 통일교육 교과목별 전문가 충분히 보유 • 체계적인 추진조직과 인력
교원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통일 교육에 집중 • 통일필요성, 북한이해, 남북한사회 통합, 분단국이해 등 균형 배치 • 지방연수원은 경험과전문가 부족으로 교과목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목표와 동일 • 청소년의 통일의식 고취와 교원들의 통일교육 방법, 능력 제고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중등, 대학교 재직 교원들이 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장학관 순환보직으로 연속성 부족 • 단기간 불규칙적 통일교과 개설, 노하우부족 • 통일교육원 참여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통일교육담당
민간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민간교류 관련 과목이 특징, 균형적 교과 개설은 어려움 • 통일 및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과 의미의 차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체의 특성에 따른 해당 북한 분야 이해 •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민간단체 입장의 이해 •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일반인, 사회운동 세력 등 성격이 다양한 일반인들이 혼합됨 • 교육 대상자는 대학생과 청년층이 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총연맹은 교육 노하우와 조직력보유 • 경실련은 최소 인력과 일부 교수가 주도 • 좋은벗들 등은 종교인이 주도

반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교과목은 민간단체 기관별 성격과 특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총연맹 등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의 교과목 구조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가도 통일교육원 교수 혹은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실련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벗들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은 해당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과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과 해석에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개설된 교과목도 정부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그것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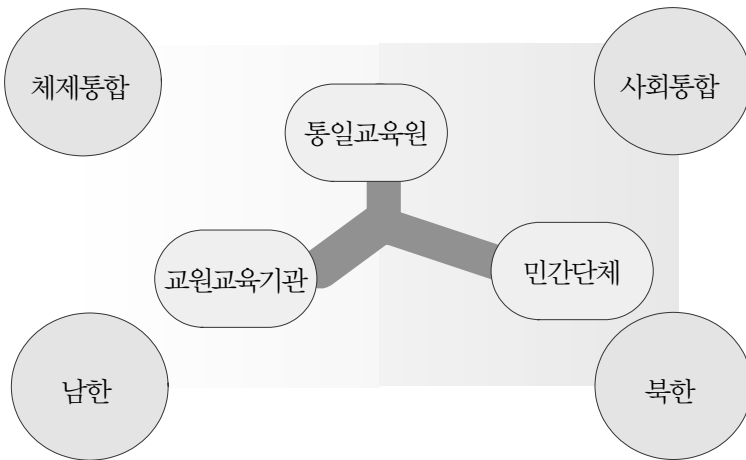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통일교육 기관의 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의 차이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특성, 그에 따른 통일교육 목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교육원의 경우 정부기관이라는 성격과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교원연수원도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를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단지 통일교육 최종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방법론 등이 추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민간단체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나 방법, 교과목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 통일교육기관이나 교원단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남한 주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아직은 소수이고, 생활에 힘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접근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남북관계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볼 때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초기

남북한 사회통합 모델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각 통일교육 기관의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경우 현재의 남한주민 대상 통일교육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부분을 크게 강화하고,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에 대한 역할분담과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VI-9> 통일교육기관의 연계 강화



(다)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통일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 등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 교과목 혹은 교과관련 주제를 새롭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 방향에 따른 통일교육 교과목은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 도입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시장경제의 이해, 시장경제에서의 가격결정원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와 정치과정과 같은 과목들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인터넷 통일교육, 통일위성교육 등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며, 통일단계에서는 동서독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교육의 내용들과 유사한

교과목, 즉, 한반도의 발전과 미래,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이해, 과거 분단과정 돌이켜보기, 객관적 역사인식 회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교육 등 다양한 교과목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남북한 교류협력 초기 단계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현재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골격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남한주민과 공동으로 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추가하여, 심화보완해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에 이르면 현재의 통일교육 교과목과 프로그램은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일교육 대상자 중점비중이 다수 남한주민과 소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다수 남한주민과 다수 북한주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교육방법론도 오프라인 통일교육과 온라인 통일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급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교과목의 설계와 교육수단의 채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때의 북한주민 통일교육은 사회통합에 중점이 두어지고, 교육 방식은 인터넷 통일교육, 통일위성방송, 사이버통일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 교과목 운영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통일교육 교과목과 교육매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남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교과목 중 북한이해 영역은 남북왕래와 북한정보의 남한 사회 개방 확대로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통합과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관련 내용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통일초기 단계에 들어서면 남한의 통일교육 핵심은 북한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집중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한주민 상대 통일교육의 내용은 사회통합 부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 내용은 남한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해 부분에, 남한주민을 상대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7> 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 설정(예시)

분야		남북통합 일반교육 주제설정
일반	기본	남북한통합에의 기여 (사회단체, 기관, 시민단체, 학생 등 사례) 끝나지 않은 통일, 완전한 통일을 향하여 남북한 갈등구조 상이한 문화간의 대화 정부 재정과 세제 언어의 이질성 극복
	심화	한반도 역사와 왜곡 사회통합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DMZ와 생태환경의 관리 경제개발과 환경문제 한반도 관광자원의 개발 북한 군사시설의 상용화 방법과 문제 구북한 지역 실업자 해소와 직업훈련 구북한 행정/법제 개편 성과와 문제점 북한지역 기업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민주주의와 시민	기본	민주주의 학습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정치과정 민주주의와 선거, 토론, 인권 시민사회의 발전과 역할
	심화	공산주의 체제와 인권 국가와 법치주의
남북통일	기본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 통일 한반도의 미래 동북아시아대와 한반도 21세기 한반도 발전과 번영을 위한 프로그램
	심화	남한과 북한의 일체성과 상이성 남북한 통일과정: 정치, 경제, 사회 동북아경제통합과 남북통일
남북한 사회와 통합	기본	통일독일에서의 사회갈등과 통합 남북한 심리적 통합, 어떻게 가능한가? 남북한의 적대감정, 관용, 사회통합 남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비교 남북한 언론과 방송의 문제
	심화	구 북한지역의 사회생활 구 북한에서의 문화와 정치 북한의 변혁과정

<표 VI-7>중장기 사회통합 교육 교과목 설정(예시)

분야		남북통합 일반교육 주제설정
정치분야	기본	한반도 통일의 성과와 당면과제 UN에서의 한반도 통일의 책임 신연방주의와 지방정부 통일 한반도에서의 좌우의 극복문제 통일 한반도의 중간평가 동북아에서의 한반도 문제 북한의 공산당 실체와 평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공산당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탈출과 생존과정
	심화	정치교육의 현재, 미래 한반도에서의 정치적 극단주의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이념적 대립에 대항한 프로그램 한반도에서의 외국인 구북한 공산주의 독재의 희생, 인권 군사독재시절의 인권 남한 민주화 과정의 이해 구북한 반체제의 역사 구북한 공산주의 역사와 결과 한반도에서의 독재와 민주주의 동북아질서재편과 한반도의 문제
경제분야	기본	동북아경제통합, 새로운 질서의 시작 동북아공동체구축과 한반도의 기여 한반도 통일비용, 통일이익 사회주의 체제변혁의 과거와 현실 남북한 고용구조의 변화 한반도 통일과 경제이익, 비용 시장경제의 장점과 경제적 불평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의 이해관계 21세기 한반도 번영의 조건 자본주의 기업의 생산과정과 노동생산성 생산, 효율, 경쟁체제
	심화	구북한의 노동사회 구북한 소유제도 개편방안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영토문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교육내용을 참조하여 남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 교과목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례로 구상해 보면 앞의 표에서와 같다. 이것은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사례이다. 또한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방송, 지상파 방송국의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의 활용 등을 포괄하는 교과목을 가정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연계시키고, 역할을 분담 조정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통합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는 경제적지원이나 법률, 심리상담 등의 비경제적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은 생활적응 교육에 밀려서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예산과 인력, 조직을 가지고 사회통합 교육까지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자수가 늘어가고,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의 급증에 대비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사회통합 교육의 성과를 축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앞에서 분석한 북한이탈주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의 확대개편이다. 하나원에 입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이해와 적응능력을 크게 제고시키고, 사회통합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입국 초기 적응과정에서의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수준별, 성별, 연령별, 가족그룹별, 제3국 체류기간별 등의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분류하고, 이들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퇴원 이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적응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재교육시킬 수 있는 중장기 통합교육 관리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통합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부의 전문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하나원 생활과정에서의 교육과정에 긴밀하게 참석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원과 하나원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남한 사회 사회통합 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통일교육원 내에 설립(가칭: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센터)하도록 한다.

넷째, 노동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활성화하고, 기술 습득과 재교육 과정에서 남한사회 기업경영의 방식,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 노동과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사용자와 노동관계, 기업조직운영 방식과 경쟁관계, 남한의 기업문화 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의 기업과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남한 기업 취업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과 조직문화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남한 기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섯째, 각 지자체별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단체를 조직화하고,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과정에서의 남북주민간의 심리적, 정신적 충돌과 물이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

악하고, 이들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교육조직과 연계하여 재교육 혹은 사회통합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한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북한이탈주민 재교육기관(사회통합 재활센터: 가칭)에 재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에 재입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실패시의 비용과 성공시의 이익 중간선의 경제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응 성공시의 이익과 유사수준의 지원을 할 경우 재입소 이후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패시의 비용과 유사한 수준일 경우 재입소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입소의 지원체제는 그 중간수준이면 유인조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전국적인 비정부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단체나 조직의 컨소시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국적인 비정부 기구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직화하며,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정부 사회통합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교단체,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방송국 등의 조직과 각 기구의 인터넷 방송 조직도 연계될 수 있다. 중앙과 각 지방의 네트워크 거점을 두며, 네트워크 연계망은 인터넷, 방송, 오프라인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될 수 있고, 사이버 사회통합 센터의 사이버 토론방 개설, 의료 법률 상담, 직장 문화 이해와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사이버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정보화 시대의 통일교육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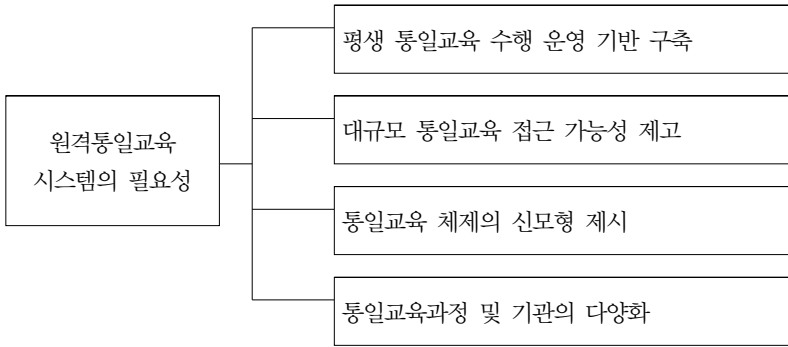
가.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방안

(1)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과 교육의 결합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개인별 학교 교육 과외는 물론이고, 각종 어학, 기술실무교육, 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 원격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 교육기관도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보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공무원 교육기관, 교원연수원, 각종 사회교육기관이 원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나아가 교육을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기관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이버교육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격교육 시스템이 통일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기존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원격교육 시스템을 확충보완하며, 네트워크화 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근 교육과 인터넷의 빠른 결합과 상호 협력관계 진행속에서 원격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평생통일교육 수행 기관으로서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원격통일교육체제는 집합 교육에 비하여 교육 수용인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 또한,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연수받을 수 있는 체제로서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의 집합교육생 이외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통일교육 수행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림 VI-10>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여 통일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따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통일교육은 집합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대국민 대상 통일교육체제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이 실현될 경우 남북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혼란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대규모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할 경우, 혹은 북한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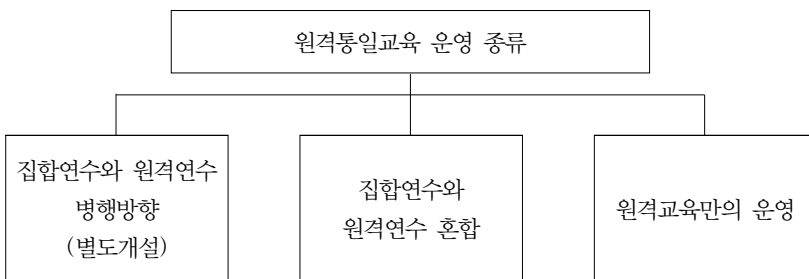
셋째, 통일교육 강사나 교사에 대한 새로운 통일교육 체제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각급 교원 등에 대하여 원격통일교육체제는 문제해결형 교육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 풍부한 자료, 자유로운 학습시간과 장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향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원격통일교육 연수 기능이 각각의 통일교육기관으로 확대되거나 통합시스템으로 나아갈 경우 전체 통일교육 연수 경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원격통일교육시스템이 가능할 경우 통일교육 과정 및 기관의 다양화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많은 단체나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갖게 된다. 각 기관 혹은 단체가 추진하는 원격통일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각 원격교육 실시 단체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용이하게 연수프로그램 중의 일부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프로그램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기존 통일교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강사 물색과 연수 교과목 선정의 문제, 전문가 강사의 일정에 프로그램 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애로사항 등을 극복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며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 원격통일교육센터 운영방식

현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통일교육원, 시도교육연수원, 대학 및 종합고원연수원, 민간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원격교육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관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VI-11> 원격통일교육 운영방식



첫째,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시·도 교육연수원은 가장 많은 원격연수원의 종류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 교육연수원은 공무원, 교원연수 전문기관으로 집합연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기관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도 교육연수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대학이나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 또한 집합교육과 원격연수를 병행하고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연수원들도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원격연수 부분을 확장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둘째,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운영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육의 일부 내용에 한에서 원격 형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병행 방식은 각각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가 별도의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어 연수생들도 각각 다르다. 병행 운영 방식에서 각각의 과정은 완전히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집합연수와 원격연수의 혼합 운영 방식은 같은 교육과정에서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정부의 통일교육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집합교육과 일부 교과목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원격교육이 대표적으로 해당한다. 또한 원격연수원으로 지정 받지 않고 있는 4개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셋째, 원격교육만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대학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일부 기업의 사원교육 연수원의 경우 병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나, 중소기업의 원격연수원은 단일 방식이다. 또한 인터넷 방송교육도 원격교육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발전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확대가 원격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기 원격교육 방식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통일교육을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교과목의 일부를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하는 원격교육의 초보형태 내지 1단계 형식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으로 원격통일교육센터로 기능 및 역할을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각종 사이버 교육기관이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상기 형식을 모두 구사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교육의 본격적인 원격교육은 사이버대학교의 원격강의 기능과 구성을 갖추고, 교육대상만 특정 교육생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포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원격교육 사례 분석

(가) 통일교육원 원격통일 교육

통일부의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에서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원격교육기관으로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비교적 체계적인 통일관련 원격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인터넷 통일교육을 시작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는 열린통일강좌, 통일꿈나무, 방북길라잡이, 대학통일연구, 참여마당 등을 통하여 통일관련 다양한 정보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열린통일강좌에서는 누구든 회원 가입을 통하여 원하는 강좌를 원격 사이버 강의시스템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통일교육’이 비교적 체계적인데, 사이버통일교육 강의를 듣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에서 제공하는 통일교과목들은 대부분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시하는 교과목의 일부를 녹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전에는 통일교육원의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강의를 접근할 수 없었던데 비하여 현재는 사이버통일교육원 회원 등록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통일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통일교육을 위한 각종 강의도구가 부족했던 전문강사의 경우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사이버통일교육 강의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경우도 시간의 부족으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제약조건을 벗어나 사이버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일교육원과 교육부, 교육연수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사이버통일교육 연수를 통해 기본적인 교사연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자료실 코너에서는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 이해 등의 통일교육 기본자료와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 등 북한 및 통일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룬 각종 다양한 일반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고, 자료내용 전체를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VI-8> 사이버통일교육 원격강의 교과목(예시)

번호	분류명	과목명	강의수
1	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기법 개론	3강
2	통일교육	북한대중문화를 활용한 북한사회이해 수업의 실제	3강
3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교육수업의 이론적 기초	2강
4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자원기반형 통일 교수학습 방법	2강
5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자원기반형 통일 교수학습 방법	3강
6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커뮤니티형 통일 교수학습 방법	1강
7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프로젝트형 통일 교수학습 방법	3강
8	통일문제이해	통일 어떻게 볼 것인가?	2강
9	통일문제이해	통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2강
10	북한이해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2강
11	북한이해	북한 정치체제의 현황과 전망	2강
12	북한이해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3강
13	북한이해	북한 사회 · 문화의 이해	2강
14	북한이해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	2강
15	북한이해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1강
16	북한이해	북한주민의 직장생활과 여가문화	1강
17	북한이해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2강
18	통일교육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교육수업 실제	7강
19	통일문제이해	남북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3강
20	통일문제이해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4강
21	북한이해	일상생활에서 본 북한의 성평등 실태	3강
22	북한이해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3강
23	통일문제이해	국제환경변화와 최근 한반도 정세	3강
24	통일문제이해	정부의 대북정책	4강

※ 자료: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특히 동영상 자료 코너에서는 북한의 결혼, 북한의 만화, 북한의 영화, 북한 방송, 북한의 추석, 북한의 어린이 날, 북한의 패션, 북한의 이성관, 북한의 종교생활 등 분야별로 동영상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북한의 실상을 진솔하게 이해하고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 꿈나무와 같은 코너에서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전체내용을 애니메이션화 하였으며, 친근감 있는 박광수의 만화 등 치밀한 구성과 손쉬운 접근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통일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이트로 분류되고 있다.

대학통일연구는 각 대학의 학술회의 일정과 발표논문을 소개하고, 역대 대학생통일논문집들을 한데 엮어 놓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각 대학의 북한관련 사이트와 연구기관 사이트들을 정리하여 놓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격 통일강좌를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 눈높이 통일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의 좋은 사례로 들 수 있다.

(나)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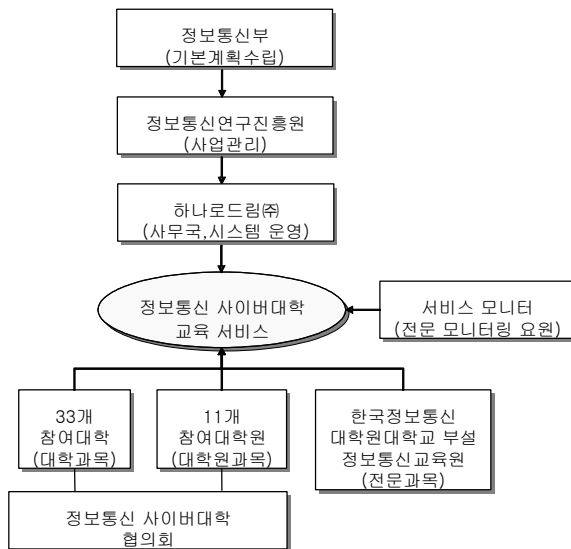
정보통신 사이버대학은 1996년 6월 정보통신부의 인력양성사업 중 정보통신 사이버교육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봄학기 15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대학간 온라인강좌를 통해 학점교류가 이루어지는 대학간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컨소시엄 구성 이후 2000년 가을 학기까지는 별도의 교육 운영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구축하지 않고,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참여 대학의 개별 서버를 통해 가상 교육 콘텐츠 및 학사 운영을 해왔다. 이러한 운영은 개별 학사 운영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각 대학 시스템에 의존적이고, 각 대학간 운영시스템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는 등 서로 상이한 시스템 환경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교과목 개설대학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열악한 경우, 24시간 중

단없는 가상 교육을 운영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사이버대학의 안정적인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부의 주관 아래 2000년 9월 기반통신사업자 중 자체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우수한 통신 기반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하나로통신(주)을 정보통신 사이버대학의 통합운영 사업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하나로통신은 2001년 봄학기에서부터 각 대학의 상이한 수강환경을 통일시킬 수 있는 서버와 교육운영 시스템을(LMS)를 구축하여, 참여 대학 재학생들에게 통합된 홈페이지(<http://www.ituniv.or.kr>)에서 수강 신청 및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통합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그림 VI-12>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교육서비스



2002년 3월에는 통합운영사업의 수행기관인 하나로통신(주)은 교육사업과 온라인포털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과 온라인포털 사업을 별도로 설립된 하나로드림(주)으로 양도함으로써, 통합운영 사업자가 하나로통신(주)에서 하나로드림(주)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부터의 3차년도 사업이 종결되는 2003년 8월 현재,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컨소시엄에는 33개 대학과 11개 대학원이 참여하여 총 77개의 교과목이 개발·운영되는 등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사이버대학 컨소시엄으로 성장하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본 사업의 관리를 맡고 있고, 33개 대학과 11개 대학원 및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이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나로드림은 각 참여대학(원)과 한국정보통신교육원에서 개발된 교육 콘텐츠들이 운영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관리하고 각 참여 대학의 학사관리를 위한 통합운영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사이버대학 원격교육기관으로 한국사이버대학교를 들 수 있다. 한국사이버 대학교(KCU)는 2001년 한국사이버대학교 외 8개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동시 개교하였다. 한국사이버대학교는 1998년 가상교육 프로그램 실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2001년 개교하였다. 그 결과 연세대 등 국내 41개 대학이 상호학점 인정 및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KCU컨소시엄이 결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 8년간 20만명의 학생이 KCU를 통해 학점을 이수받았다.

한국사이버대학교는 10만 여명이 동시에 수강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안정된 학습환경이 지원되고 있으며, MST 강의저작물, E-Stream Expert, 캠퍼시아 강의저작물, 실시간 강의솔루션(CentraOne) 등 최신 강의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또한 방송국 수준의 강의 스튜디오 시설 및 보안·백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 교육기관(연수원) 원격교육

한국에서 개설되어 운영중인 원격교육 연수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허가받은 기관수는 2001년 12월 현재 39개이며, 현재 교원 원격연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교육청 소속의 12개 교육연

수원에서 원격연수원 보고·수리 과정을 통하여 교원 원격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4개의 교육연수원은 원격연수원 지정·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교원 연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된 기관으로서 지역 내의 교원 연수 과정의 일부를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대학과 민간기관을 포함하는 39개 교원 원격연수원이 선정된 상태이다.

<표 VI-9> 교원 원격연수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종합교원 연수원 및 시·도 교육 연수원	서울대학교육행정연수원	http://www1.cne.ne.kr/
	교원대종합교원연수원	http://tcie.knue.ac.kr/sub/sub_4.asp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cyber.pttc.pusan.kr/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www.deti.or.kr/cyber/fra.htm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cyber.ketis.or.kr/
	대전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remote.tenet.or.kr/Home.asp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http://online.ueti.or.kr/
	충북 단재교육연수원	http://cyber.danjae.org/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http://lspace.gbeti.or.kr
	경상남도 교육연수원	http://www.knky.kyongnam.kr/cyber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http://cyber.sadonet.or.kr/
	전라남도 교육연수원	http://www.jeti.or.kr/anytime/
	강원도 교육연수원	http://cyber.ktti.or.kr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	http://www.yulgog.org/main/	

시·도 교육연수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병행하여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연수에 대하여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원연수원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사의 관심 분야에 대한 통일 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원격통일교육과 연계하여 정부의 원격통일교육 센터에 통일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도 원격교육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안정적으로 많은 통일교육생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수, 공간,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교원들을 상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표 VI-10> 대학부설 원격교육기관 현황

기 관 명	홈페이지	운영 상태
공주교육대학교	http://www.kongju-e.ac.kr	운영 않음
광주교육대학교	http://202.31.152.12/eetc/index4.htm?loc=1	운영 않음
전남대학교	http://www.dec21.net/	운영중
전북대학교	http://e-learning.chonbuk.ac.kr	운영중
공주대학교	http://cyber.kongju.ac.kr/	운영중
한국방송대학교	http://cyber.knou.ac.kr/	운영중
고려대학교	http://edugrad.korea.ac.kr/kyowon/	운영 준비중
숙명여자대학교	http://snow.sookmyung.ac.kr/fme_pro.htm	운영중
이화여자대학교	http://www.ewhaedu.org/	운영중
한양대학교	[별도 홈페이지 없음]	운영 않음
조선대학교	http://www.chosun.ac.kr/~cyberedu/	운영중
호남대학교	http://teacher.honam.ac.kr/index.php3	운영중
울산대학교	http://cyber.ulsan.ac.kr/	운영 준비중
경남대학교	http://www.kyungnam.ac.kr/knu_home/member_home/cyber/	운영중
경북외국어 테크노대학교	http://210.178.102.8/	운영하고 있지 않음

대학 및 종합교원연수원도 원격통일교육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통일교육 과목을 교양강좌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통일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단계에서는 정부의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통일교육 시스템과 연계시켜 많은 대학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운영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대학생들의 의사표현이 적극적이고, 젊은 층의 경우 사이버 원격교육 방식에 적극적인 참여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원격통일교육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종 사이버 대학도 원격통일교육의 좋은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각종 사이버 대학은 원격교육 방식의 가장 발전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과의 컨소시엄은 사이버 대학 참여대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의 발전된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들의 경우 다양한 교양과목의 마련이 필수적인데, 원격통일교육을 통하여 남북관련 원격교육 과목이 제공될 경우 상호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남북관계를 다루는 민간단체들과의 통일교육 공동 참여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오프라인 통일교육을 비정기적 모임을 통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간단체와 원격통일교육 컨소시엄을 구축할 경우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관련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동시에 민간단체를 콘텐츠 제작에 참여시킴으로써 통일 콘텐츠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각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며, 통합된 원격통일교육 네트워크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원격통일교육 시스템 효율성 구축 방안

현재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은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의 원격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별도의 통일교육 운영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구축하여 운영한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내용을 일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가상 통일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또한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은 통일교육원 자체의 단일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왔고, 다양한 통일교육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요청하는 교육대상자들에게 제한적인 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해주는 수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과목 개설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폭넓은 사이버통일교육을 운영하는 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각종 통일교육기관과의 원격통일교육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서 원격통일 교육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통일교육대상자 환경을 구현하고, 통일교육원, 교원단체, 공무원 연수원, 대학 사회, 일반인 등 전체를 종합하는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원격통일교육 통합운영시스템과 통합운영사무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에는 각각의 통일교육기관이 통일교육 통합운영사업자로서 별도의 서버와 통일교육운영시스템(LMS)을 구축하고, 통일교육 참여기관이 통합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강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각 통일교육 기관의 사이버통일교육 환경이 모두 동일한 환경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사업은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교육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는 것과, 통일교육 통합운영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통일교육 주체의 협의체로 이루어진 정보통신 사이버통일 교육의 운영을 효율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등 각종 지역 교원 연수원, 동국대, 경남대, 각종 사이버 대학 등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로 제휴하여 일회성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지는 통일교육 과목을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 교원은 물론이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원격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교육생 및 전문교육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원격교육시스템의 확충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통일교육시스템을 원격통일교육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합하거나 네트워크화 할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된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본다.

넷째, 현재 교원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의 원격강의 콘텐츠는 주로 텍스트와 음성녹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강의 콘텐츠가 텍스트가 핵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강의자의 음성녹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격강의용 콘텐츠로서 원격통일교육의 본격화를 위한 사이버통일교육 교과목의 콘텐츠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된다. 사이버통일교육은 집합연수와 같이 수업자체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서로 다른 시간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원격교육은 집중적인 수업은 없는 대신 지속적인 수업이 가능하며 상호작용 도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원격교육에 있어서 교육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텍스트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원격과목 콘텐츠는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포함한 동영상과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 등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성화 기관의 운영이 요청된다.

다섯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안건의 협의, 사이버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격통일사이버교육 담당자들도 컨소시엄의 형태나 개별적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내 모든 사이버 교육에 사이버통일교육을 연계할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대학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교육수요자의 욕구달성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 등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일단 대학의 북한관련 학과나 각종 남북관련 전문연구소는 전문화된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연수원, 통일교육원 등은 통일교육 대상자의 발굴과 전달수단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관의 장점을 서로 연결하여 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격통일교육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시스템 구축

(1)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필요성

인터넷 방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개국될 경우 통일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리라 보고 판단된다. 특히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그대로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변화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통일교육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교원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과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다. 인터넷 콘텐츠 형태가 텍스트에서 동영상, 동영상에서 음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면서 점차 인터넷방송 분야가 각광받을 것이라고 예상해보면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통일교육기관의 텍스트 중심의 통일교육 전달방식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이 개설될 경우 미래 한반도를 책임질 현재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남북한 음악, 영화, 토크쇼 등 문화적인 특성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과 쌍방향 접촉이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탑재가 가능하여 통일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 장르와 수단의 확대, 수용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통일교육의 실시간 방송도 가능함으로써 기존 통일교육 기관의 교육 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일교육과의 방송시스템과의 연계성 제고가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남북한 및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존 방송사의 대북교류과정에 참여하여, 통일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참여함으로써 방송저작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통일관련 전문가 시각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생산프로그램 활용

의 지속성과 반복적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존 방송사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영으로 끝나거나, 기록보존용으로 보관되는 수준인데 비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시작되면 기존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련 프로그램의 폭넓은 활용도 제고(토론프로, 다큐멘터리, 조사 프로그램 등)도 가능하게 된다.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에서 분단과 관련되었던 각종 영상물이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면, 이들 자료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사회의 인터넷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의 통일교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북한의 인터넷 발전수준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발전 1단계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통일교육 내용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개인용 컴퓨터 기능의 업그레이드와 초고속 인터넷 망이 구축될 경우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한 인터넷 통일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기존 방송의 경우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 제약이 많고, 북한 자체의 검색도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인터넷의 경우 방송교류와 같은 어려운 제약조건이 거의 없어진다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우회적인 북한주민 통일교육을 위해서 매우 유용한 교육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즉, 기존 방송시스템에 의한 교류확대는 정치적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터넷에 의한 접촉과 개방은 남북한 정치적 관계개선 없이도 북한의 인터넷 시스템이 발전할 경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섯째,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남북한 영화, 음악, 다큐, 역사물 등 다양한 제작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수강의 중심의 통일교육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형태의 기능을 통합해 낼 수 있으며, 나아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남북한 영상, 음악, 미술 등 예술의 장르와 결합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나 음성녹

화 방식의 단조로운 통일교육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기의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에서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통일교육의 생방송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의 원격 실시간 강의가 가능하고, 쌍방향 미디어 기능의 활용을 통하여 통일교육 강자와 교육생들이 대화할 수 있다. 또한 진행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시스템의 구축은 일반 방송국처럼 많은 설비와 복잡한 운영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나아가 기존 방송국이나 각종 단체에서 활용하는 통일 및 북한관련 콘텐츠의 공동 활용과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인터넷 방송의 통일교육 활용 가능성, 용이성, 기술의 발전성 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2) 통일분야 인터넷 방송의 사례

(가) KBS 아름다운 통일

KBS가 운영하는 아름다운 통일(<http://tongil.kbs.co.kr>)도 인터넷 통일방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KBS가 기존에 방송한 통일 및 남북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영상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통일 및 남북관련 인터넷 방송의 일종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비슷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방송국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서 북한통일뉴스, 스타스페셜, 기획마당, 사이버통일교실, 북한백과, 북한영상자료, KBS 북한 및 통일관련 영상자료, 학습정보, 참여마당 등의 코너를 가지고 있다. 현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통일관련 인터넷 방송국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KBS에서 제공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영상자료가 주제별로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 북한 리포트의 남북의 창(2001~2003년), 서울에서 평양까지, 일요스페셜, 역사스페셜, 각종 특집방송물도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송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표 VI-11> KBS 인터넷 방송 주요 코너와 프로그램 코너

KBS 인터넷 방송 주요 프로그램 코너
북한통일뉴스 스타스페셜 사이버통일교실 북한백과 북한영상자료 서울에서 평양까지 남북의 창 일요스페셜(북한 및 남북관계 프로그램) 역사스페셜(북한 및 남북관계 프로그램)

KBS 인터넷 방송 동영상 프로그램의 사례
[한국사회를 말한다]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2003.09.27) 남북 공동문화 예술행사(2003.08.31)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5편 평화(2003.07.26)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4편 공포(2003.07.19)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3편 총돌(2003.07.12)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2편 증오(2003.07.05) [정전 50년 특별기획] 전쟁과 평화 - 제1편 정전(2003.06.28)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2003.10.17) 베이징 6자회담, 한반도의 운명은?(2003.09.07) 정몽헌 사후, 남북경협은 어디로?(2003.08.10) 2003 한반도 위기, 미국은 북한핵을 어떻게 보는가(2003.06.22) 북핵위기 돌파구는 없는가(2003.02.09) 북한의 실험 신의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2.10.06)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2002.08.11) 비무장지대의 이방인들 - 중립국감독위원회(2001.06.24)

(나) 민중의 소리(voice of people)

현재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통일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민중의 소리(voice of people)’를 들 수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한국진보정치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치경제, 통일국제, 문화생활, 여론광장, 언론 등의 코너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인터넷 수요

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은 진보진영 최초의 블로그(BLOG)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란 인터넷을 지칭하는 ‘웹(Web)’과 항해지도인 ‘로그(log)’를 합친 말로 네티즌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칼럼과 일기, 기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올리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이는 2002년부터 인터넷상의 ‘1인 언론사’로 불리면서 10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네티즌과 시민운동가 등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 및 남북관계, 한국 사회 문제, 세계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진지한 담론과 고민의 글이 교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진보성향의 네티즌이 사회 각 분야의 낮은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함께 고민하고 읽어 볼만한 글이라면 첨가와 삭제없이 그대로 소개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민중의 소리 블로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부문별 편집을 독자에게 모두 맡기는 ‘독자편집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독자편집위원회가 결정한 편집방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진도 바꾸지 못한다는 원칙도 가지고 있다. 이는 “자발적 참여가 블로그의 핵심”이라는 사실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최근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국에 올라있는 핵심 인터넷 방송 주제는 범국민행동의 이라크 파병반대 행동, 미국의 세계지배 반대, 2003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특집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미관계, 남북관계, 현 정권의 제반정책 문제 등에 대하여 기사를 방송화하여 취급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미국 관련한 핵심 주제는 미국이 일으키는 한반도 전쟁반대, 미선이 효순이를 살려내라, 2003년 평화와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회 등이 있다.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통일행사 관련 방송 내용들의 사례들로는 다음 표에서와 같다.

<표 VI-12> 민중의 소리 인터넷 방송 내용 사례

서울지역 대학생 한 목소리로 이라크 파병반대
한미동맹은 남의 나라 침략동맹이 될 수 없다
8·15 통일행사 끝난 그날 밤, 잠들지 않은 사람들(2003-08-17)
노란 평화의 물결로 용산미군기지 인간띠 잇기 성사
(2003-08-16)

(다) 기타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 형태는 아니지만 인터넷 방송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어 MBC, SBS, EBS와 같은 방송국은 통일관련 인터넷 방송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사에서 제작한 통일 및 남북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방송의 경우 ‘한반도와 북한핵문제’, ‘이라크 전쟁과 남북한’ 등 통일 관련 영상물과 토론내용을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MBC도 다양한 남북관계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에 다른 방송내용과 함께 올려놓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실련 통일협회가 법인 설립과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거쳐 통일TV를 개국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인터넷상에서 북한이나 통일 관련영상물, 뉴스 등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국 ‘통일TV’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을 겨냥, 이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향후 통일의 주역이 될 세대가 통일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방송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의 계획에 따르면 ‘통일TV’는 우선 사이버 상에 ‘통일대학’을 만들어 기존 경실련 통일협회의 민족화해 아카데미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관련 강좌를 녹화해 방영하고, 각종 통일관련 다큐멘터리나, 뉴스 등을 자체 제작해 방영한다는 것이다

(3) 방송 3사 및 지상파 방송국의 인터넷 방송 사례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방송 서비스도 함께 급부상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웹 공간에는 인터넷방송 사이트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사이트마다 보다 많은 네티즌의 눈길을 모으기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네티즌의 입장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하면 기존의 드라마, 영화, 라디오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 3사는 현재 KBS(www.kbs.co.kr), SBS(www.webcast.sbs.co.kr), MBC(www.imbc.com) 웹 사이트에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 라디오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방송 3사는 인터넷 방송 부문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먼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SBS와 KBS에 이어 MBC도 (주)인터넷MBC(iMBC)를 설립하고 인터넷 방송 시장에 합류, 지상파에 이어 인터넷 방송에서도 본격적으로 '3파전'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방송에 뛰어든 SBS는 인터넷 방송 별도 법인 'SBS인터넷'을 설립한 뒤 'SBSi'(www.sbs.co.kr)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뒤이어 KBS는 한국통신과 함께 '크레지오'를 개설했고 이후 별도 법인 '크레지오닷컴'(www.crezio.com)으로 독립시켰다. MBC는 방송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iMBC(www.imbc.com)를 세워, 조금 늦은 셈이다.

이들 인터넷 방송은 우선 동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 기존에 지상파 방송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자메일, 채팅, 동호회 등을 가미하고 연예, 교육, 스포츠, 인터넷 쇼핑 등의 메뉴를 추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3사가 인터넷 방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우선 다른 인터넷 방송국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고 자금력과 조직력도 다른 인터넷 방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또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홈페이지를 찾고 있는 시청

자들을 쉽게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앞으로 공중파 방송이 뛰어넘어야 할 과제인 ‘쌍방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방송 3사의 인터넷 방송은 차별화와 함께 어떻게 수익모델을 창출할 것인가가 과제다. SBS는 인터넷으로 시청자와 TV 출연자를 연결시켜주는 토크 프로그램 ‘토크넷 쇼’처럼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전용 쇼핑몰(www.buy6.com)을 통한 인터넷 쇼핑에 주력할 계획이다.

<표 VI-13> 주요 지상파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크레지오 (www.crezio.com)	iMBC (www.imbc.com)	SBS
개국	99년 11월 25일	2000년 3월 11일	99년 8월 21일
서비스 방식	56K/300K/1M Live, VOD	56K/300K Live, VOD	238K 이상 Live, VOD
공중파 콘텐츠	각 프로그램별 VOD한달간 보유 6개 채널 30여개	뉴스/시사, 교양 /다큐, 드라마 VOD	드라마/영화, 음악/오락 VOD
인터넷 방송용 자체콘텐츠	뉴스, 음악, 드라마, 게임, 생활문화 6개 채널 30여개	NETOP매거진 (동영상 + 웹진) 4개 채널 17개	드라마/영화, 음악/오락, 문화/정보, 스포츠/특집 4개 채널 18개 프로그램

크레지오는 공영방송 KBS와 최대 통신사업자 한국통신이 손잡은 만큼 공영성과 오락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아동,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크게 늘려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MBC는 드라마와 연예 부분을 특화시키고 방송을 보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소품 등을 구입하는 PPL(Products in Placement) 쇼핑몰을 강화, 후발주자로서의 불리함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지상파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방송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제작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 소스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방송국에 비해 다양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규모가 큰 동영상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지상파 채널의 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국의 프로그램 혼합편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티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VI-14> 기타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	방송국명(사이트)	서비스 내용
EBS	EBS(www.ebs.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생중계, VOD(웹클래스), CD-Rom(유료)
PBCTV	카톨릭인터넷 (www.pbc.co.kr)	PBC 뉴스 생중계, PBC영상물 비디오 판매
YTN	YTN(www.ytn.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VOD, 700서비스
KMTV	KMTV(www.kmtv.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MNet	MNet(www.mnet27.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인터넷 전용방송 Mydio, VOD, mp3 파일 판매(900원/곡),
Tooniverse	투니버스 (www.ontooniverse.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중계, 케이블 방송 위주편성(편성표 제공)
동아TV Ch 34	동아TV (www.dongah34.co.kr)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VOD, 패션하우스와 인터넷 투데이 프로그램의 웹서비스
아리랑TV	ArirangTV.Com (www2.arirangtv.com)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생중계, 영상물 판매, VOD, News On Demand
대구방송	TBC(tbc.co.kr)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중계, DreamFM 라디오 생중계

자료: 이만제 외, 「인터넷 방송 공동송출시스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그러나 아직까지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국도 이러한 강점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대부분이 자체 프로그램이며 인터넷 방송만을 위해 기획되거나 편성된 콘텐츠는 음악방송, 이벤트방송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참신한 소재를 통해 네티즌에게 어필하는 인터넷 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과거에

방영하였던 지상파 프로그램을 단순히 VOD, AOD로 서비스하는 방식으로는 경쟁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국과는 차별화된 독립된 콘텐츠 제작 및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개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4) 학교 인터넷 방송의 사례

(가) 제주교육 인터넷 방송

제주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방송(<http://www.jedcast.net>)이며, 교육관련 인터넷 방송국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교육방송을 개국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추진목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문형 교육(EOD: Education On Demand)의 실시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육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환경과 수업방법의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달성하고, 미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사례를 보면 통일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방송에도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 형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교육청의 인터넷 방송의 기대효과는 ①교육정보화 완성단계로서 기반시설 활용의 극대화, ②수준별 교과방송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학습기회의 제공, ③우수수업 교과방송을 통하여 우수한 교수학습 방법의 일반화, ④디지털 동영상 라이브러리(EOD) 구축으로 교수학습 정보의 관리 공유 확대, ⑤각종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현장의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교육의 신뢰성 제고, ⑥방송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각 급 학교 방송국과 연계한 학교방송의 교육적 활용으로 교육적 부가가치 창출 등에 두고 있다. 이러한 제주 교육청의 인터넷 방송 기대효과는 통일교육 관

런 기관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성격과 목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주 인터넷 교육방송에 등록된 교육 동영상 라이브러리는 약 2,983개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의 교수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수준별 교과도 인터넷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보충내용과 심화내용으로 나누어져서 학년별, 교과목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나아가 학교 현장수업도 교과목별, 학년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심층면접 강좌도 기본소양,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특기적성 방송 코너도 마련되어 홈페이지 만들기, 서예의 기초, 만화그리기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 두고 있다.

제주도 인터넷 방송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제주교육인터넷 방송, 교사마당, 학생마당, 교수 학습자료, 교육마당, 각종대회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수학습 자료는 최신자료에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교과목, 학년별 교수자료를 모두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데이터뱅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교사들의 교수자료 녹화시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배하여, 진행하는 등 이미 인터넷 교육방송으로서의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제주도 인터넷 교육 방송의 조직은 9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방송국 전반관리 팀장, 촬영스케줄 관리 및 교과방송 담당 PD, 방송 편집 및 학교현장수업 담당 PD,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교육정보공유체계 담당, 홈페이지 운영 및 서버관리담당자, 기술감독 방송장비 및 스튜디오 관리자, EOD편집과 학교현장 담당자, EOD편집보조, 방송장비 및 중계차량관리자, 방송보조 및 문서업무 담당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http://www.kybc.org>)은 세계화·국제화 속에 21세기를 맞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학적인 감각과 바람직한 정보화 마인

드를 키워주고 정보에 대한 욕구 충족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청소년 육성 및 올바른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은 최초의 청소년 전문방송이며, 전국 12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방송단과 어머니방송단이 함께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비영리 무료서비스와 실시간 생방송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활동은 청소년 관련한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활동내역을 정리한 것을 요약하면, 방송자료 편집 및 송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진행, 기존 방송 모니터와 정보 및 영상감시활동, 청소년 관련 설문조사 및 자료조사 등이며, 청소년 어머니 인터넷 방송단의 경우 청소년방송단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의 주요 내용은 GO! KYBC, 학교가 좋다, 토크파티, 인포JOB, 뉴스투데이, 좋은 세상, VJ플러스, 아카데미, 엔터테인먼트, 라디오, i-shopping 등의 코너를 통하여 약 16개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물론 각 코너마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은 청소년들이 맡고 있으며, 각 장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터넷 망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다.

<표 VI-15> 청소년 인터넷 방송 채널 현황

채널명	내 용	
GO! KYBC	GO! KYBC	청소년이 가볼만한 지역명소, 문화, 예술행사
학교가 좋다	학교가 좋다	학교중심의 공개방송 프로그램
토크파티	토크파티	화제중심의 초대손님과 꾸미는 토크쇼
인포JOB	인포JOB	이색, 신종, 인기 등 직업세계 소개
I-shopping	I-shopping	좋아하는 인기상품, 신상품, 계절상품 등
라디오세상	송이의 음악산책	테마가 있는 음악방송 채널
	1318상담실	
	메모리상자	
	스튜디오안에는	
	라디오초대석	
CJ뮤직라이브	CJ뮤직라이브	CJ와 함께하는 라이브음악채널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	한 주간의 청소년뉴스, IT관련뉴스 소개
	여기는 현장	청소년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뉴스스크랩	청소년관련 뉴스 신문 화제기사 모음
	행사/소식	청소년행사, 문화, 예술 공연 등 행사일정안내
좋은세상	미선이를찾아주세요	우리주변의 미담과 선행사례 소개
	칭찬메아리	사제, 가족, 이웃, 친구간칭찬해주고받는이야기
	푸른아이	신지식인의 꿈을 일구어가는 청소년 소개
	바뀌고쳐버려	상황을 청소년시각으로 재조명하는 기획물
인터미팅	KY초대석	명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다.
	화제주인공	유명인사, 연예인, 스포츠스타와의 인터뷰
	또래스토리	학교동아리, 청소년단체 동아리 소개
VJ플러스	비디오저널리스트	6m/m로 바라본 세상의 이모저모, 비디오저널리스트 작품소개
	뮤직비디오자키	최신뮤직비디오와 사연 등 소개
	웹자키	청소년권장사이트, 쿨사이트, 테마별 사이트
	북자키	베스트셀러, 신간, 추천도서, 좋은 책방 소개
아카데미	생활회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생활회화
	레저스포츠	스포츠, 댄스교실 등
	디지털미디어	절지애니메이션, 클레이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게임중계/게임	스타크래프트 게임중계 및 무료게임
	비디오/시네마	신작영화, 비디오, DVD소개
	댄스	청소년댄스 동아리 소개
	뮤직박스	최신가요, 팝 등
정보뱅크	북스토리	추천도서, 신간도서 소개
	패션/코디	스트리트 패션 소개
	건강	건강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GO! KYBC 채널 1에서는 청소년들이 가볼만한 지역명소, 문화, 예술, 행사 등이 소개되고 있으며, 채널 2의 ‘학교가 좋다’ 코너는 학교중심의 공개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되며, 채널 3의 토크파티에서는 화제중심의 초대손님과 함께 꾸미는 재치만점의 토크쇼가 진행된다. 청소년들이 관심사를 인터넷 방송에 수용하여 채널 6.7에서는 테마를 지닌 음악과 라이브음악이 진행되며, 채널 11 ‘VJ플러스’에서는 청소년 비디오 저널리스트 작품 제작 소개가 이루어지고, 채널 13에서는 각종 게임중계 및 게임 자체가 진행된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등의 게임이 중개되며, 무료게임도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 방송은 전국네트워크를 지니고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적인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각종 청소년 기관, 단체가 대화방과 각종 방송 코너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각 지역별 청소년 인터넷 방송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중앙 부분에서의 자료축적과 공유가 동시에 가능하여 자발적으로 청소년 문화에 참여하고,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5) 사이버 경찰청의 인터넷 방송

사이버경찰청에서도 인터넷 방송(<http://pbn.police.go.kr/>)을 운영하고 있다. 테마기획, PBN리포트, TV속 경찰 코너를 설정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코너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기획 코너의 경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치안 도우미’, ‘지역경찰 운영체계 혁신(순찰지구대)’, ‘싱가폴 경찰5’ 열린 경찰 시민 속으로’, ‘싱가폴 경찰3’ 안전한 교통 문화, 교육이 최선이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용으로 제작하여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PBN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개하고 있다. TV속 경찰 코너에서는 각 방송사가 경찰 관련하여 방송한 프로그램을 방송사와 협력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도움 받아서 경찰청 인터넷 방송에 VOD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이 개설될 경우 사이버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TV속 경찰 코너처럼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서 통일 및 북한 관련 방송자료를 제공받아 인터넷 통일방송에서 송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16> 사이버 경찰청 인터넷 방송 사례

인터넷 방송 주제
[여기 이사람] 경찰관과 늦깎이 학생들
부산지방경찰청 포돌이홍보단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위문 공연]
[경찰체험]폴리스 아카데미
[여기 이 사람] 세일즈 경찰관
[여기 이 사람] 사랑을 찍는 소장님
[여기 이 사람] 박물관지킴이 김현우순경
파출소 옆 동물농장 [계산3파출소]
[화제의 경찰서]충북 단양경찰서편
건강을 위한 걷기 예찬
[화제의 경찰서] 전남 곡성경찰서편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
전국 경찰 사격대회
[화제의 경찰서] 수원 중부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전남해남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강원 고성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전북 부안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포항 북부경찰서편
[화제의 경찰서] 대구 지방경찰청편
[화제의 경찰서] 서울 성북경찰서편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교통지도계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고등파출소
[경찰25시] 수원남부서 원천파출소
[경찰25시] 수원남부서 권선파출소

(6) 인터넷 방송 사례가 원격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에 주는 시사점

기존의 인터넷 방송국의 좋은 사례들은 향후 인터넷 통일방송의 발전과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중에서도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KBS 인터넷 방송국으로서의 아름다운 통일은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이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할 경우 참고할만한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주 교육청 인터넷 방송국의 사례는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이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인터넷 통일교육 구축에 어떻게 공동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제공한다. 즉, 각 학교 교수, 교사들이 인터넷 교육방송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가는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실시할 경우 통일 및 북한관련 전문가들과 어떻게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둘째, 각 기관 및 단체에 의해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실시될 경우 통일교육 내용과 전달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 관련 교수자와 전문가, 심지어는 학습자를 제작과정에 공동 참여시킴으로써 가능한데, 제주 인터넷 교육방송의 사례는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령별, 직업별, 수준별 통일교육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실행될 때 효과적이고, 그 프로그램을 생성하기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인터넷 통일교육 라이브러리의 운영방식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외부 스튜디오와 결합하여 인터넷 통일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아웃소싱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의 강의 녹화과정에서 아웃소싱하는 시스템과 유사한데, 원격통일교육 강좌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찰청 인터넷 방송국의 경우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기관이 통일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좋

은 시사점을 준다. 즉, 통일교육 관련 기관은 각자의 업무 중 국민과 통일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하여 자체적으로 방송국 홈페이지 해당 코너에 올려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능동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통일교육에 대한 자료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각 통일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통일동아리 등의 남북 및 통일관련 활동내용을 녹화, 자체 제작하여 인터넷 통일방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 차원의 기획과 설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통일교육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각 통일교육 기관의 오프라인, 온라인 통일교육이 각 해당기관의 통일교육 목적에 부합되는 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경우 이러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일 및 북한 관련 각종 동영상 자료 및 영화 등을 기존 방송사나 제작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만들어진 방송국 자료들은 제한된 장르에서 제공되고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 효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통일방송국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그 활용도는 훨씬 높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의 경험도 각 통일교육기관의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과 북한문제에 관심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를 인터넷 통일방송국 운영의 장르로 끌어들이 통일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는 점이다. 즉, 인터넷 통일방송이 운영될 경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남북한 음악, 영화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을 통일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이러한 우회적인 교육매체를 통하여 남북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청소년이 자체 제작하는 작품을 통일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에 의해서 활성

화된 인터넷 통일방송 시스템은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과 공동으로 통일 및 남북관련 방송자료를 제작하여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KBS가 운영하는 인터넷 통일방송으로서 ‘아름다운 통일’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북한 영상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인터넷 통일 방송국 코너에 배치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이다. 현재 아름다운 통일 인터넷 방송에서는 북한 스페셜, 특집, 일요스페셜, 북한 리포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동영상을 주제별로 묶어서 배치하고 있다.

둘째, 동영상 방송자료와 텍스트 위주 인터넷 자료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통일 홈페이지에 각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강좌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기존 방송사들이 제작한 남북 및 통일관련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필요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즉, KBS뿐만 아니라 MBC, SBS, 다큐방송 등 기존 방송사들이 만든 통일관련 영상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사장되고 있는데, 이의 효과적인 공동이용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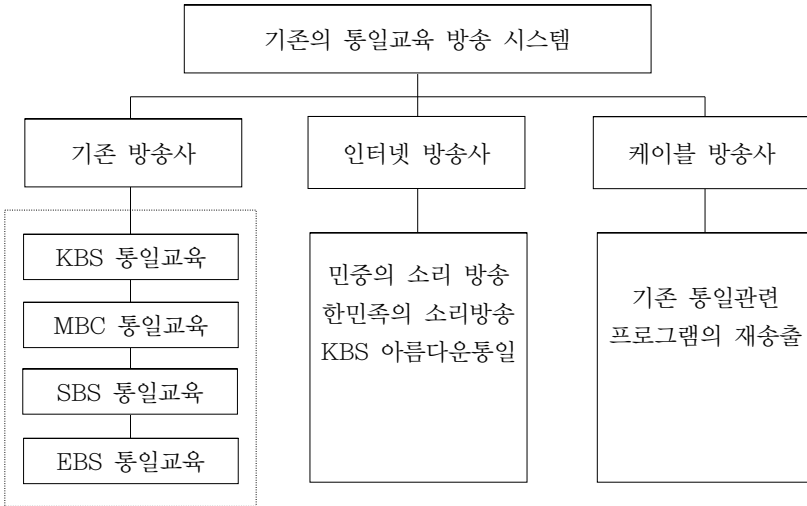
각 통일교육 기관에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운영하게 될 경우 적합한 모델은 상기 네 가지 사례의 종합일 수도 있고, 각 사례가 가진 장점 중 각 통일교육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특징만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이 되든지, 기존의 통일교육의 기능과 오프라인 통일교육 기능을 크게 보완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일교육 매체라고 판단된다.

(7)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시스템의 다양화와 통합

인터넷 방송은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그리고 보편화로 인하여 가장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 방송형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

용하고자 하는 각종 기관과 단체, 민간인들의 욕구로 인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방송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그 설비와 송출의 기능성, 활용방식이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간단하고, 내용구성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 VI-13> 통일교육 방송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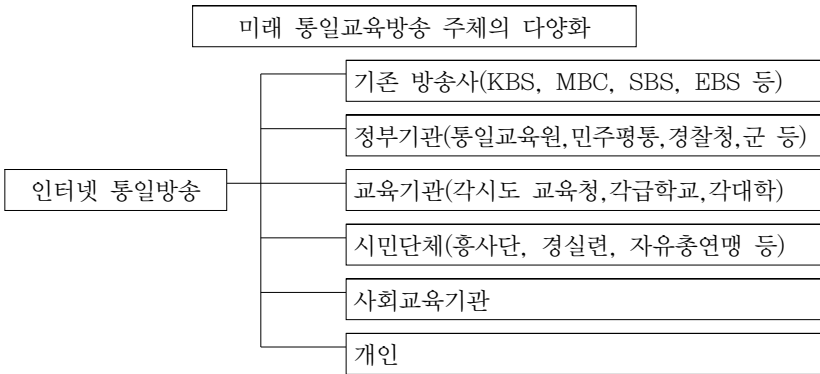


이미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KBS, MBC 등의 기존방송사, 인터넷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등이 인터넷 방송의 형태로 북한과 남북관계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해오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가까운 장래에는 대부분의 통일교육기관이 인터넷 통일방송을 통하여 각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리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다양화와 보편화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예상된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인터넷 방송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일교육의 효율성과 다양성, 상호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의 지역적 거점 네트워크, 방송 주체별, 내용 특성별 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광고나 홈페이지는 개별적으로 검색엔진에 의하여 검색되고, 찾아지는 방식인데, 통일

교육과 관련되어 개별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상기 기준에 의하여 하나의 중앙 네트워크에 올라있거나 연결되어 있을 경우 통일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수용성, 교육의 효율성 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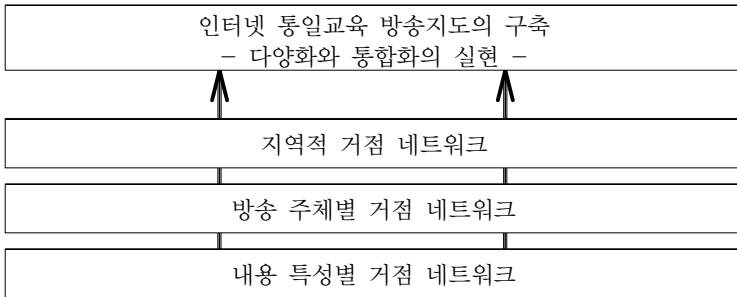
<그림 VI-14> 미래 통일교육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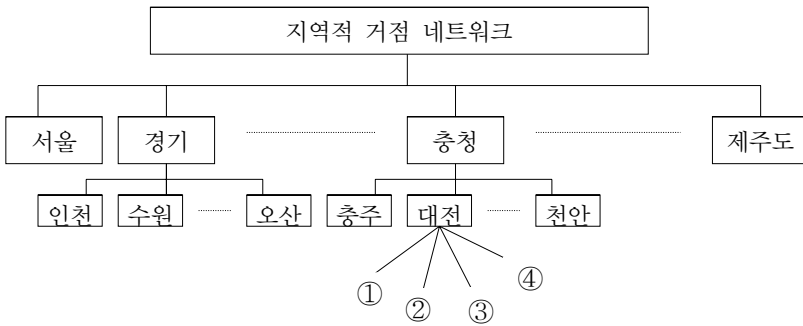
하나의 사례로 각종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주소가 하나의 홈페이지에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하나의 기관을 찾아서 방문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또 정부기관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을 접근하든 중앙 네트워크로 연결되든 통일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특성별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에 풍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타 기관 혹은 타인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자료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는 중복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거할 수도 있고, 많은 이벤트와 일들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 나아가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이나 참여도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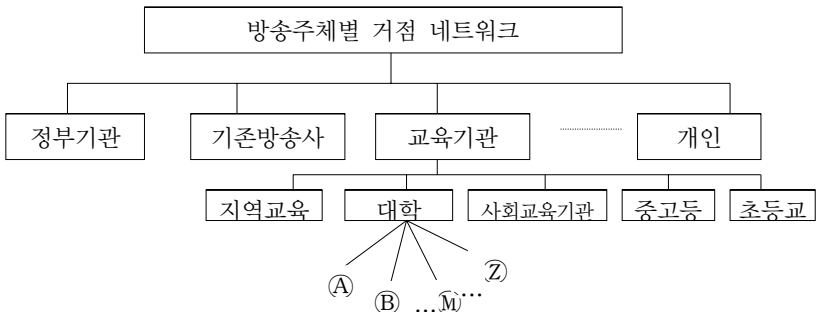
<그림 VI-15>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지도



<예시 1>



<예시 2>



다.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기존 방송사들은 통일 및 남북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큰 범주로 분류하여 보면, 북한관련 소개, 남북한 비교, 북한 이탈주민 문제, 남북문제 관련한 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기존 방송사들의 방영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를 둘러싼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동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영상자료들은 더욱 많은 분량과 규모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종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자료는 강의내용을 포함하여 텍스트 위주의 강의와 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전달수단의 중심이 기존 노트중심, 텍스트 중심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의 동영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볼 때 동영상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방송사의 방영 프로그램은 향후 남북관계 단계별 통일교육 시스템의 다양화와 통합화를 추진하는데 매우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 KBS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자료

KBS는 국가 공영방송으로서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상당수 기획, 제작해왔다. 통일교육 방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KBS의 방송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북한 부분에서 전개된 한반도 역사에 대한 기획, 취재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KBS 역사스페셜이라는 코너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특히 북한문화유산 시리즈라는 프로그램 명칭으로 북한에서 전개된 단절된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였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역사의 복원이라는 통일교육에 매우 부합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다. 주된 내용은 고구려 평양성, 묘향산 보현사, 천년전 국제도시 개경, 고인돌 왕국 고조선, 동명왕릉, 검은 모루 구석기 유적, 700년의 사랑 공민왕릉, 남북역사학의 쟁점, 단군릉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고구려의 무용총, 고분벽화가 다루어졌으며,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획 취재하였다. 이것은 남북간 단절로 인하여 다루지 못하였던 한반도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역사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프로그램들이다.

<표 VI-17> 일요스페셜 통일 및 남북문제관련 프로그램

방송제목	방송날짜	시간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	2003.10.17	60분
베이징 6자회담, 한반도의 운명은?	2003.09.07	60분
정몽헌 사후, 남북경협은 어디로?	2003.08.10	60분
2003 한반도 위기, 미국은 북한핵을 어떻게 보는가	2003.06.22	60분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인터뷰	2003.06.15	60분
송두울 교수의 경계도시	2003.05.11	60분
북핵위기 돌파구는 없는가	2003.02.09	60분
변혁의 땅 베트남, 통일 열차를 타다	2002.12.15	60분
북한의 실험 신의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2002.10.06	60분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02.08.11	60분
다시 백두에 서다	2002.02.03	60분
비무장지대의 이방인들 - 중립국감독위원회	2001.06.24	60분
[남북공동선언 1주년 특별기획] 남과북 함께 부르는 노래	2001.06.10	60분
[독점취재] 아주 특별한 만남-남북최초역사자료공동전시회	2001.03.18	60분
[현지리포] 두만강 사람들 1999.11~2000.11	2000.11.26	60분
서울-평양 2000년 8월 어머니의 눈물	2000.08.20	60분
서울-평양, 2000. 6. 13~6. 15	2000.06.18	60분
평양 아이들의 서울 나들이 - 6박 7일간의 기록	2000.06.04	60분
남북경제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	2000.04.23	60분
영상기록 1000일, 백두산과 사람들	2000.02.06	60분
밀착취재 2년, 떠도는 탈북소년들	2000.01.30	60분
린튼형제의 북한 돕기	1999.09.26	60분

둘째, 남북한관련 핵심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이다. 이는 일요스페셜과 같은 코너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금년에 다룬 프로그램은 남북경협현장, 평양, 남포 그리고 개성(2003), 베이징 6자 회담, 한반도의 운명은?(2003), 정몽헌 사후, 남북경협은 어디로?, 송두울 교수의 경계도시(2003) 등이 있다. 2000년에도 남북경제협력, 분단의 벽은 사라지는가? 에서도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을 다룬바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 관련하여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은 북한의 실험, 신의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2002), 북한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2002) 등이 있다.

이외에도 탈북주민을 다룬 주제로 밀착취재 2년, 떠도는 탈북소년들이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제작되어 방영된 바 있다. 이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핵 위기를 올바로 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전 50년 특별기획 방송자료도 통일교육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정전, 증오, 충돌, 공포, 평화의 주제로 총 5편이 제작되었는데, 분단 50년의 남과 북의 관계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한 좋은 방송 자료이다.

사회주의 북한사회의 문제점과 통일관련 문제를 심층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분단국의 사례를 기획 취재한 프로그램도 다수이다. 베트남 보고(1990)에서는 사이공에 부는 바람, 빈곤과 궁지 하노이 등을 다루고, KBS 집중기획에서는 통독 1년 현장을 가다리는 제목으로 거듭나는 게르만(1991), 마르크화의 빛과 그림자(1991)를 제작하였다.

KBS에서 제작한 남북의 창과 같은 코너에서는 북한의 일상생활과 사회, 정치, 경제와 관련된 제반 뉴스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다양한 생활상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단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물이다. 실질적으로 남북의 창에 방영된 내용을 주제별로 재편집할 경우 북한 사회의 각 부문을 심층적이고 피부에 와 닿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MBC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MBC 방송국도 통일 및 남북문제와 관련된 많은 방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 장르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PD수첩, MBC스페셜, 100분 토론, 시사토론 등 다양한 코너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다. KBS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그 양과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수준이나, KBS는 ‘아름다운 통일’이라는 코너에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통하여 집중 활용하고 있는 반면, MBC에서는 특별히 통일관련 방송 혹은 인터넷 방송 코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MBC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도 통일과 관련 거의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어서 통일교육 기관과의 공동 활용 방안이 모색될 경우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먼저 MBC 스페셜에서 다룬 주제들은 ‘2003 위기의 한반도’, ‘거대한 폭풍, 한반도와 주변열강’, ‘미국이 보는 한반도 위기’ 등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문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와 이를 둘러싼 주변 강국의 입장,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들이다. 이들 주제는 PD수첩에서도 한반도 핵 위기와 악의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된바 있다. 이는 북한 현안 문제와 관련된 통일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룬 프로그램도 적지 않은데, ‘끝나지 않은 비극-탈북자’, ‘탈북자, 30일간의 중국 현지보고(1부, 2부)’와 PD수첩에서 다룬 탈북자 등이 그것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북한주민의 실생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방송 프로그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BC의 방송프로그램에는 연도별로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방송자료를 활용할 경우 역사적 시각에서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향후 전개방향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도 있다.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흐름을 보면, 이슈&이슈 코너에서는 최근 북한문제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들, 즉, ‘송두율 교수 친북활동 논란’, ‘북한인권 개선촉구 결의안

통과 논란’, ‘대북정책, 굴욕외교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인가?’ 등이 다루어졌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활용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의견의 교환은 토론과 자기 판단을 통한 성숙된 통일문제 능력 배양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발생되었던 1990년대 초기 상황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작되어 보존되고 있다. MBC 특별대담 코너에서는 갈루치의 한반도 해법, 한반도 정세와 유엔의 해법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추성춘 시사진단 코너에서 마련된 ‘한반도는 지금(특별대담)’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남북한과 4강’ 등의 방송프로그램이 세계석학과의 대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획, 제작된 이후 방송된바 있다. 이들 방송프로그램은 정부통일기관, 교원연수원, 경실련을 비롯한 각종 통일교육 기관의 운영 교과목에도 부합되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및 북한문제 인식에 객관적인 시각을 교육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송일 교수의 한반도 코너에서 다루어진 프로그램도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폭풍의 역사, 고뇌하는 최후의 왕국, 사회주의 대탈출, 통일경제의 기수들, 운명의 카운트다운과 같은 5부작 시리즈는 1994년에 있었던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현재 남북문제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남북이산가족 찾기와 관련되어 ‘이제는 만나야 한다’ 시리즈와 ‘남북이산가족 찾기 특집’은 분단의 아픔과 남북한 교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방송자료로, 혹은 통일과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인터넷 통일방송이나 오프라인 통일교육 자료로 유용한 자료들이다.

<표 VI-18> 100분 토론 코너의 통일 및 남북문제 프로그램 사례

방송 제목	방송날짜	시간
이라크 파병	2003-10-23	02:30:00
두개의 조국, 하나됨을 위하여, 1권	2003-09-04	01:30:48
두개의 조국, 하나됨을 위하여, 2권	2003-09-04	00:24:15
U대회 반복시위 적절한가	2003-08-28	01:31:05
6·15 공동선언 3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	2003-06-12	01:33:45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미관계	2003-02-13	01:27:51
북 “핵 개발 시인” 그 의미와 대응은	2002-10-24	01:32:33
서해교전 해법은 무엇인가	2002-07-11	01:35:16
악의 축과 한반도	2002-02-08	01:33:55
8.15 축전 무엇을 남겼나	001-08-30	01:36:08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특집)	2001-06-14	01:52:27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하나?	2001-02-08	01:36:22
남북관계 변화속도 이대로 좋은가	2000-10-19	01:33:11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1권	2000-07-20	01:27:40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2권	2000-07-20	00:16:40
베트남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1권	2000-07-06	01:02:22
베트남전 우리에게 무엇인가, 2권	2000-07-06	00:37:13
국가 보안법 체제 수호인가 인권 탄압인가, 2권	1999-10-28	00:18:15

이외에도 ‘여기자 북한 방문기, 평양 10박 11일’, ‘북한 민요기행’, ‘북한 총각 남한 정착기’, ‘유홍준 교수의 북한 답사기’, ‘방북작가 황석영이 본 북한’ 등의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문화 측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익히는데, 유익한 자료들이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사회를 접근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통일교육생이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북한접근의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MBC의 뉴스특보 프로그램은 서해상의 남북군함 교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방송내용을 담고 있어서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이해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MBC가 진행한 수많은 토론 프로그램들도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토론과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통일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통일교육 자료로 가장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가 발전되었던 서독의 경우도 정치교육의 기본원리는 ‘동서독간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여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의 통일교육도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MBC가 보유한 토론프로그램과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은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토론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통일교육 활용은 시민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하다. 토론 프로그램에는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핵심 주제가 모두 망라되어 있어서 한국사회의 시각을 가장 잘 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 ‘U대회 반복시위 적절한가’,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한미관계’, ‘북 핵개발 시인 그 의미와 대응은’, ‘악의 축과 한반도’, ‘8·15 축전 무엇을 남겼나’, ‘국가보안법 존속돼야 하나’, ‘남북관계 변화속도 이대로 좋은가’, ‘북한,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가’ 등의 토론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들이다. ‘국가보안법 체제수호인가, 인권탄압인가(1권, 2권)’ 등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담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1990년대 초에 진행되었던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리즈도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단지 이때에는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다 중단된 시점에서 기획 제작된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통일관련 격렬한 논쟁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여론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로 판단된다.

MBC가 방송한 자료 중에는 1970년대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그램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시간적 흐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전개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자료로 이용가능하다. 이속에는 ‘김구와 남북협상’이라는 민족분단 초기상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부터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남북간계 중대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식’, ‘7·4 남북공동성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다.

(3) EBS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

교육방송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KBS나 MBC와 같은 기존 방송사가 다른 프로그램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교육방송에서 만든 통일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통일교육용에 맞추어진 것들이다. 즉,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이 대종을 이루며, 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도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방송프로그램은 학년별 차등을 둔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 특히 교원연수원이나 정부의 통일교육원 등의 통일교육 기관이 청소년과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방송과의 프로그램 제휴와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통일교육 기관이 인터넷 통일교육, 사이버통일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이들 교육수단과 매체를 통하여 통일교육대상을 통일교육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소년, 북한주민 등으로 무한히 확장한다고 전제해보면, 교육방송국과의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업무협력 체제 구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향후 각종 통일교육기관이 인터넷 통일방송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자연스럽게 교육대상자 특성별로 필요한 통일관련 콘텐츠나 동영상 등을 분류, 기획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 특정대상만을 목표로 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교육용 콘텐츠가 가상공간의 통일교육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에 온라인 통일교육, 인터넷 통일교육 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가상공간에서 전제된 특정 통일교육대상자를 목표로 한 통일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혹은 교육방송국의 제작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인터넷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BS의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대부분 도덕 교과목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통일한국의 미래,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이다.

또한 통일한국과 바람직한 한국인상, 통일한국의 미래상, 국토개발과 통일, 한국의 윤리사상·통일문제 등의 주제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대부분 교원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 등 통일교육 기관의 교원대상 통일교과목에 채택된 것으로서 방송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이들 통일교육 방송 프로그램은 모두 1강에서 28강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서 체계적, 단계적으로 장기간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매우 유용한 통일교육 자료이며, 특히 청소년이 선호하는 방송용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통일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교육방송에서는 ‘EBS 교육진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통일 및 북한관련 현안 주제를 방송용으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체계적인 통일교육 교과목뿐만 아니라 통일 및 북한문제의 현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동 프로그램 내용들은 KBS나 MBC와 같은 기존 방송사에서 남북문제를 다룬 주제들과 유사하며, 그 중 중요한 이슈가 된 내용들을 선택하여 교육용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EBS통일진단’ 코너에서 만들어진 주요 내용들로서 사회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통일시대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은? 등의 방송 프로그램은 교사용 교과목에 부합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다.

반면 EBS의 통일진단 중 북한 경제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13편), 북한 식량난 심화되는가(26편), 북한 인권과 난민문제(29편),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2편), 북한 경제개혁, 어디까지 왔나(37편), 북한의 생존과 외교전략(39편),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방안(7편), 탈북자 문제, 대처방안(6편) 등의 방송프로그램은 통일 및 남북문제 현안을 다룬 내용들이다. 통일정책비교, 한반도 주변 통일 환경 등의 기본 교과목과 남북문제 현안을 다루고 있는 각종 통일교육 기관의 교과목 구성과 비슷한 형식으로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육방송국의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교과목 구성과 매우 유사하고,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내용을 방송프로그램화 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일교육 기관의 향후 통일교육시스템 발전방향과 관련되어 협력할 분야가 많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방송의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이 통일교육기관의 교과목 수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고, 특정 교육대상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공동이용 가능성도 그 어느 방송사보다도 많다고 할 수 있다.

(4) 방송국 프로그램의 통일교육 공동 활용방안

기존의 공영방송국과 상업방송국은 통일 및 남북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상당수 제작하여 확보하고 있다. KBS는 ‘아름다운 통일’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자사가 기획 제작하여 방송한 이후 보유하고 있는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역사스페셜, 남북의 창, 일요스페셜, 기획특집 등 KBS의 일반 프로그램 시간에 기획제작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남북현안 문제, 북한이해 프로그램, 주변 4강과 외교, 북한이탈 주민 등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토론에서 다루어진 각종 남북현안 주제들은 남한사회의 통일관련 시각과 의견, 견해차이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통일교육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분석되었다.

향후 남북교류 확대와 시민사회의 발전, 민주화의 진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통일교육은 그대로의 정보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동서독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KBS가 다룬 토론의 프로그램들은 매우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MBC도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MBC도 100분 토론은 남북현안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서, 이들 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일반인 참여의견이 담긴 토론 내용을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자료와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자료로 활용할 경우 교육효과와 성과는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통일교육기관이 이들 토론프로그램을 일정한 평가시각과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에 적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존 방송국의 방송 프로그램은 일회성 방송으로 시청자에게 전달되고 대부분 사장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즉, KBS가 인터넷 통일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MBC는 MBC 프로덕션을 통하여 인터넷 동영상으로 송출하고 있지만 특별히 통일코너로 마련된 것도 아니며, 일반 방송 프로그램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나 특정 소수가 아니

면 이용하기 힘든 상태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다. KBS의 인터넷 통일방송도 KBS가 지니는 공영방송의 성격에 부합되는 측면은 많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KBS를 방문한 시청자들이 인터넷 통일방송 코너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방송사가 기획 제작한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정보화 시대의 각종 통일교육기관의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이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등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이용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오프라인 통일교육생에 대한 통일교육시의 이용과 학교통일교육 자료로서 교원들의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국 접근시 매우 유용한 기초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각종 통일교육기관들이 기존 방송사의 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사용 가능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향후 통일교육의 전달수단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쪽으로 강화된다는 점,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등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 동영상 교육자료가 교육매체와 수단의 변화환경에 텍스트형 자료보다 적합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라. 통일교육 위성방송국 설치가능성 검토

현재 위성방송을 통하여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이 송출되는 곳은 기존 지상파 방송국들이 운영하는 위성방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기존 방송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편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편성과 시간대에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경우뿐이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위성방송국 개설이 가능한가를 위성방송의 특징, 통일교육과의 결합가능성 차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방송과는 달리 위성방송을 통한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례적인 접근보다는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으로의 활용가능성만을 검토해 본다.

(1) 위성방송 준비 현황

현재 남한에서 국내 위성방송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는 한국통신과 DSM(Dacom Satellite Multimedia System)을 들 수 있으며 또 시험방송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KBS와 EBS 등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성방송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언론사와 대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통합방송법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리랑 TV의 해외위성방송이나 동양 위성방송(OSB), 한미위성방송처럼 해외의 위성체를 활용해 위성방송을 개시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¹⁰⁸ 이미 스카이 라이프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적, 기술적 문제와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상태에 있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2004년 9월 7일 그동안 부처간의 갈등과 사업자들과의 이견으로 논란을 거듭했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뉴미디어의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 DMB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었다. 지난 2004년 3월 이례적으로 국회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국회를 통과시킨 이후 우여곡절 끝에 6개월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절차를 마치게 된 것이다. 방송위는 이제 대통령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공포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고 위성 DMB 채널구성 등 채널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여부 등 여러 가지 논의와 쟁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위성방송 송출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구비됨으로써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가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기존 지상파 방송사의 위성방송

KBS는 위성방송 사업계획 초기부터 2개 채널 방송을 준비하여 1996년 7월 1일 첫 방송을 통해 현재까지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KBS의 위성방송

¹⁰⁸ 이수영 외,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공사, 1999).

실시는 위성시험방송용 실용화 시험국이라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질 수 있었다. KBS의 위성방송은 ‘종합정보채널’과 ‘교양·오락 채널’ 등 두 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KBS의 위성시험방송은 LD 수준의 고화질과 CD 수준의 음질, 16:9의 와이드 화면 등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으로 지름 45cm 정도의 안테나와 셋탑박스만 있으면 수신이 가능하다.

현재 위성방송을 시험 송출하고 있는 KBS는 위성방송 관련 법규만 제정되면 바로 위성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S가 위성방송에 참여할 경우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 위성방송처럼 공영방송의 역할을 그대로 위성방송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공익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유료방송의 성격이 강한 위성방송 사업에 KBS가 참여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위상과 대비되는 측면이다. 더구나 KBS가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위성방송에 굳이 참여해야 하는가와 현재의 거대한 조직이 더욱 커지게 되면 방대한 조직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다.

따라서 KBS의 위성방송 참여는 지상과 방송의 위성방송 참여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참여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KBS의 역할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공익성 제고,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MBC는 1995년 9월 전담준비조직인 ‘위성방송단’을 신설하여 위성방송 편성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입, 시설 및 장비 설치,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MBC는 위성방송 시설은 여의도 본사 사옥을 활용하고 방송장비는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자동화 운용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며 위성방송에 필요한 주소정실 1개와 스튜디오 2개를 비롯해 종합편성실, 더빙실, CG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조달 면에서 MBC는 자체제작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외부제작물량을 국내 제작시장이 허락하는 데 따라 늘려나갈 계획이며 조직과 인력의 운용은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되 효율성과 생

산성은 극대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오락채널”이라는 채널사용사업자로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SBS는 지난 92년부터 뉴미디어위원회를 구성, 위성방송 사업 참여를 준비해오고 있다. SBS는 위성방송 사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기존 지상파의 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위성방송 사업의 인력운용도 소수정예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프로그램 수급면에서는 위성방송 초기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외화 및 지상파 방송물을 적극 활용한 뒤 위성방송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 위성방송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기존 방송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성방송

한국통신은 위성방송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방송법안이 제정되는 즉시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무궁화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으로서는 DSM의 오라이언 위성발사 실패로 단일 위성체 사업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해 한국통신은 초기 채널수를 약 70~8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채널 구성은 기존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사(PP)가 약 30개, 지역민방 13개, 현재 시험위성방송 중인 채널 5개 등 기존 채널 50~60개와 신규채널 20개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치나 외국사업자와의 연계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케이블 TV 등 타 매체와의 관계설정에서 사업 초기에는 일정 지역에 일부 채널만 패키징하는 SCN 방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케이블망의 용량한계와 서비스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DTH 방식 등을 통한 경쟁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데이콤은 위성방송 사업을 위해 자회사인 DSM을 설립했다. 그러나 데이콤 온라인 위성발사의 실패로 데이콤이 위성체 사업자로써 위성방송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통합방송법은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DSM은 한국 통신의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DSM은 위성 플랫폼 사업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SM 측은 프로그램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PP, 신규 채널, 외국 채널 등을 중심으로 채널편성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채널 구성에 있어 국내 PP는 70% 정도, 나머지 30%는 신규채널과 외국채널에 할당할 예정으로 있다. 신규채널의 예를 들면 홈쇼핑, 여행, 낚시, 국내음악, 아시아 음악, 팝송 등 케이블 TV보다 더 세분화된 장르가 거론되고 있고, 외국 채널은 HBO, 디스커버리, 액션, 골프채널 등으로 예정하고 있다. DSM 측에서 제시한 위성방송 사업 실시 초기의 적정 채널수는 60~80개 정도이다. 또 My Channel 시스템의 도입과 쌍방향 E-메일 서비스, 10분 간격의 NVOD 형태로 전송하는 PPV 등의 부가서비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신은 위성체 사업자라는 우선권을 갖고 위성방송사업까지 주도적으로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DSM의 경우 한국통신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채널구성, 가입자 관리 등 실질적인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다.

(2) 위성방송 공익 채널 및 프로그램 운영과 통일교육

위성방송은 대부분의 채널이 유료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논리가 지배적인 논리로 등장하고 가입자 확보를 위해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게 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 비해 공익성에 대한 논의가 적고 프로그램 편성이나 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성방송도 방송매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성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사업 초기에 위성방송에 대한 공영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채널사용사업자는 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단위채널보다는 보유한 채널 전체의 공익성 보장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위성방송 사업 시작 단계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공익성 실현가능성과 의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민방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공익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방송산업과 영상산업 발전에 투자하도록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채널 편성에 있어서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 시민채널과 퍼블릭 액세스 채널(Public Access Channel)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시민채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들이 그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방송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언론운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과 수신자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채널과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무료 채널 또는 기본 채널 패키지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입자들이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운영 방식은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위성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내보내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체 채널을 가지지 않은 독립제작사, 시민단체, 소수 계층 등이 특정 채널을 정해 방송시간의 임대를 통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소수취향의 방송이 가능해진다는 점과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임대한 방송시간에 대한 추가 수수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KBS 등의 공용방송이 위성방송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프로

그럼과 운영의 방향이 공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상당부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된 북한 및 남북관계 방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통일교육 위성방송 개국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미 한국도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위성방송이 본격화 되면서 위성방송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라 몇 가지 통일교육 위성방송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성방송이 본격화 되면서 기존의 방송 채널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즉, 위성방송은 방송신호를 디지털로 압축하여 처리하게 되면서, 기존 아날로그 프로그램의 한 채널 전송에 사용하던 대역폭으로 최대 10개의 디지털 전송까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무궁과 3호 위성을 통하여 TV 채널 86개, 그리고 오디오 채널 60개를 송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방송과 같은 특성화된 채널의 확보가능성도 그 만큼 높다.

또한 통일위성방송의 개국과 관련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거론되는 변수 중의 하나는 위성방송의 공익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미 앞에서 분석한대로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보다도 상업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논리가 지배되고,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상업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방송의 개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실중의 하나가 공익성의 확보문제이다. 핵심방안중의 하나는 시민 채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지역별 미디어 센터를 건립하여,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건설비용과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 등의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체 채널을 가지지 않은 공익성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채널을 정하여 방송시간의 임대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다채널 위성방송 시대의 도래와 공익성의 추가라는 시각에서 정부의 통일교육원 혹은 통일교육 각종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위성방

송 개국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위성방송은 기존 방송국의 설비와 조직, 노하우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일방송의 대안적 형태로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 교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통일위성방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위성방송은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남한내 주민을 대상으로 방송하게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방송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진전되고 북한내 방송의 개방성이 높아진다고 보았을 때 북한의 방송 청취 방식은 케이블 방송 형태보다는 위성방송 형태의 수신이 더욱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케이블망의 확충속도보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통한 방송전파가 더욱 빠르다는 것이 후발 개도국의 경험사례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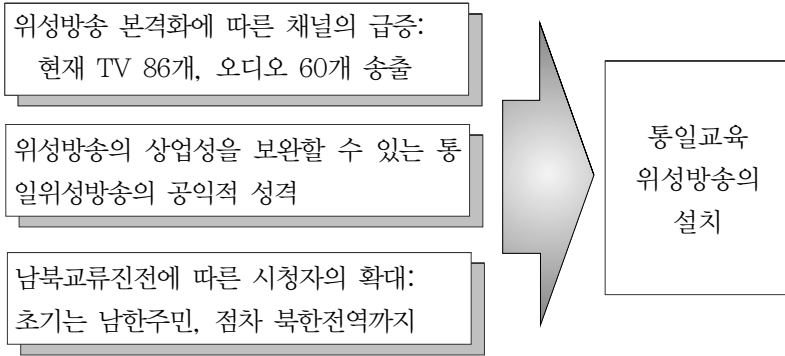
또한 동서독의 경우도 분단상황의 극복방안중의 하나로 위성방송이 이용되었다. 즉 서독의 경우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인 州간 방송법 2조에서 방송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성방송의 통일지향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서독의 공영방송은 위성방송 개국과 함께 다국적 문화채널을 출범시키고, 독일어권을 묶는 문화채널을 지향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는 당시 서독정부의 대동독 문화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대동독 문화정책을 공영방송사의 위성방송을 통하여 추진한 것이었다. 한국도 서독의 위성방송 활용방안을 참조하여 한민족 공동체 채널로서 위성방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⁹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컨소시엄, 혹은 정부의 통일교육원이 통일위성방송의 일종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채널을 확보할 경우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방송국, 사할린 동포, 러시아 고려인 동포, 일본 한인방송국을 연결하여, 한민족 문화의 동

109 이우승 외,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의식 제고방안연구』.

질성 확보, 이질감 극복 등 광의에서의 통일교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림 VI-16> 통일교육 위성방송 설치 필요성 및 가능성



이처럼 위성방송은 통일지향적인 매체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위성방송의 확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일교육 기관이 통일위성방송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일위성 방송의 채널권 확보와 프로그램의 제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위성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통일위성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특정 채널의 통일 프로그램 방송 시간대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위성방송이 그랜드 컨소시엄의 형태로 진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는 독점사업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되는데, 공익성의 성격을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 채널이나 제3채널 운영 등 통일방송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참여프로그램을 구체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공영방송사와 협력하여 위성방송에 제공할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이미 다채널 위성방송 시스템하에서는 기존 방송사 또한 위성방송 채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각종 통일교육 기관이 독립제작사와 결합하여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 제작, 공급하여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들 위성방송용 통일교육 프

그럼은 각각의 통일교육 기관이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 혹은 원격통일교육 강의에도 동시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통일교육 위성방송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의 통일교육원과 같은 조직이 대표적으로 설립에 나서고, 각종 통일교육 기관이 일부 방송시간대를 분담하거나, 역할을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통일위성 방송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될 경우 다양한 연계 방식을 통해서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통일위성방송 참여가 남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경우 그 교육적 성과는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성방송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시청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케이블 방송과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 나아가 프로그램 패키징이 시청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지느냐, 위성방송 시청을 위한 수신기의 가격과 시청료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디지털 공중파방송을 엮는 셋톱박스의 기능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위성방송의 위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위성방송의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위성방송의 내외부적인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들이 유동적이다. 또한 그랜드 컨소시엄의 참여방식과 지배구조, 공익성의 실현방식과 수용여부도 통일위성방송의 단기적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변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위성방송의 개국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통일방송의 성과와 관련되어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수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위성방송의 설립과 활용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위성방송이 개국될 경우 인터넷 통일방송, 통일위성방송, 원격통일교육 등의 시스템이 상호 연계되면서 각종 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의 범위와 교육방식, 교육수단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 케이블 통일방송 개설 가능성 연구

(1) 케이블 방송의 개념

케이블 TV는 국제방송환경에 부응하여 국민의 다양한 전문정보 욕구 충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간망으로 활용하는 등 21세기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종합유선방송법(1991년 12월 31일 제정) 제2조 1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 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한다.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중계유선방송은 유선방송관리법(1986년 12월 31일 제정)의 제2조 2항에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TV매체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전파를 내보내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인 반면 케이블 TV는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협송매체의 개념인 내로캐스팅(narrowcasting)이다.

따라서 케이블 TV는 채널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채널마다 프로그램의 독창성을 갖게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구미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지상파 TV는 인접한 주파수 대역에서의 전파간섭으로 6~7개의 제한된 채널밖에 사용할 수 없으나, 케이블 TV는 방송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이다.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방송국에서 가입자 댁내까지 포설된 케이블 TV 전송망은 정보의 전송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주는 컨버터 즉 채널 변환기와 별도로 모뎀을 설치하면 화상전화, 인터넷, 주문형비디오(VOD), 원격교육, 홈뱅킹, 의료, 원격 방법, 방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 TV 진화과정상 1단계에 해당하는 형태이고, 현재 케이블 TV는 유선방송 진화의 2, 3단계에 해당하는 전문다채널 서비스라는 역할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계유선은 단순히 난시청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을 녹음 및 녹화하여 장르별로 각각 채널을 달리하여 내보내고 있어 일종의 다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계유선은 자체적으로 케이블 TV의 일반적 진화과정을 밟아 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중계유선은 난시청 수요를 일차적으로 흡수했을 뿐 아니라 불법비디오 채널, 외국위성방송 채널 등을 통해 다채널 수요까지도 일부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케이블 TV의 경우는 유선방송 발전상 근간이 되는 난시청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시청자규모로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차지하는 전문다채널 수요만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양 사업자간 갈등과 케이블 TV의 고전은 난시청 수요 흡수의 중요성 등 케이블 TV가 자연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상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에 있던 중계유선방송과는 별도로 케이블 TV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케이블 방송 현황 분석

1995년 3월 1일 48개 케이블 TV방송국(System Operator: SO)과 24개 프로그램공급사(Program Provider; PP), 2개 전송망 사업자가 97,463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방송을 개시하였다. 1999년에는 77개 케이블 TV방송국과 자체 지역채널과 29개 PP채널 및 공중파, 위성방송 등 40여개 채널을 230여만 유료 가입자에게 송출하였으며, 1998년도 케이블 TV 경영분석 결과 77개 SO사 중 34개사(44%)와 29개 PP사중 4개사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⁰

¹¹⁰ 이수영 외, 『위성방송운영방안연구』.

2000년 5월에 방송위원회에서 15개 채널을 추가 승인하여 그 중 14개가 송출함에 따라 PP채널은 43개로 늘어났고, 2001년 3월 PP등록제 실시로 PP수가 급증하였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1차 SO 지역 중계유선방송의 SO전환승인에 따라 33개 중계유선이 SO로 전환하였고 2002년 9월 2차 SO 지역 중계유선방송국의 SO 전환이 완료되었다. 현재 케이블 TV 방송국(SO)은 전국 77개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VI-19> 프로그램 공급사 현황(PP)(45개 채널)

분야	채널명	공급분야	채널명
보도	MBN, YTN	종교	불교TV, 기독교TV, 평화방송TV
영화	OCN, OCN액션 NTV, 무비플러스 HBO, HBO플러스	홈쇼핑	CJ39쇼핑 LG홈쇼핑
드라마	MBC드라마넷 SBS드라마플러스	여성	동아TV SDNTV
스포츠	SBS스포츠30 SBS골프채널	생활 취미	리빙TV, 의료+건강26 웨딩채널, e채널, 바둑TV 리빙TV, 푸드채널
음악	m.net, m.net논스톱 KMTV	어린이	대교방송, JETISS로방송
연예 오락	코미디TV, E!N	정보	Q채널, CTN, 환경TV 히스토리채널
만화	투니버스	공공	K-TV, 방송대학TV 아리랑TV

(3) 케이블 통일방송국의 개국 가능성

통일교육기관이 케이블 TV 영역에 진출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공급자(PP)로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예로 종교계에서 불교방송, 카톨릭의 평화방송, 개신교의 기독교방송이 PP 사업자로 케이블 TV 방송 영역에 진출해 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을 특성화한 만화 케이블 TV인 투니버스, 공공성을 지향하는 방송대학 TV, 아리랑 TV, K-TV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사는 특화된 장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특징적인데, 각 장르를 보면 영화, 드라마, 스포츠, 음악, 연예 및 오락, 만화, 종교, 흡쇼핑, 여성, 생활 및 취미, 어린이, 정보, 공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교육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케이블 TV 방송영역에 진출한다면 공공 혹은 정보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통일교육 케이블 방송을 갖는다 하더라도 케이블 TV 방송 속성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통일교육을 주제로 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비교우위가 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즉, 케이블 TV 방송국(SO)들이 케이블 프로그램의 티어링 전략에 의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묶음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종교방송이 지역 케이블 TV에 방송되는 것은 종교분야의 특정 수요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 기독교, 카톨릭 모두 500만 명 이상의 고정 수요층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영역도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 지역 케이블 TV 공급사들이 프로그램 묶음전략에 포함시키는 주된 이유이다.

대부분의 케이블 TV 프로그램 공급사의 방송내용을 보면 첫째, 특성화되어 있으며, 둘째, 특정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고, 셋째, 비정치적인 분야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내용을 케이블 TV의 프로그램 공급사로서 방송을 제작하고, 케이블 TV 방송국에 공급할 경우 수익성과 고객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케이블 TV 공급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통일교육의 케이블 TV 프로그램공급사로서의 방송국을 설립하여 단일 채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방송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되어진다. 일반 종교영역의 케이블 TV 채널과 유사한 형태로 통일교육 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사로서 케이블 TV 방송국을 설립하고, 통일 및 북한 관련한 각종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수 있다. 통일교육 분야, 즉 통일 및 북한 관련한 수요층도 일정수준 고정되어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여하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블 방송용으로 제작된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이 통일교

육 기관에서 만든 단독채널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묶음 전략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상태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통일 및 북한관련 케이블 방송의 기획제작된 프로그램이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사용해주시느냐의 문제가 케이블 방송용 통일교육 성패의 관건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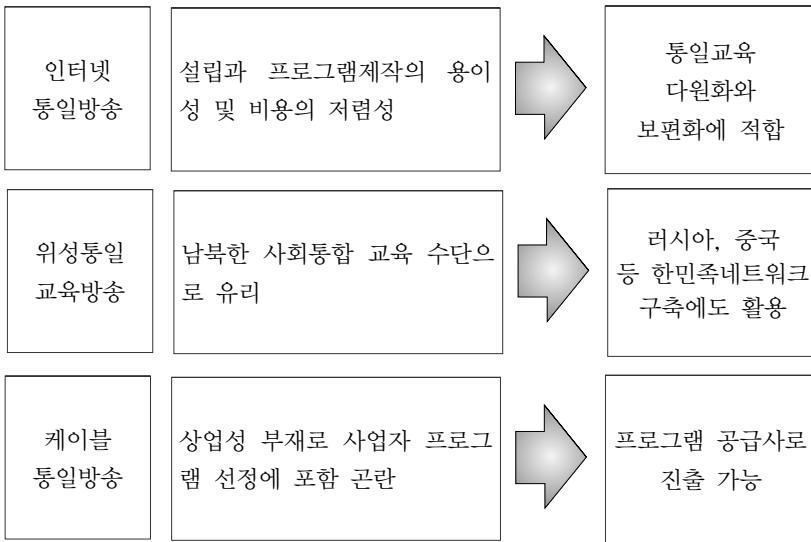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의 경우도 수신용 안테나가 보편적으로 보급되어야 개별 채널에 의한 방송시청이 가능하며,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이 제작될 경우도 결국 난시청 지역에 대한 방송 목적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시스템 운영자들의 프로그램 티어링 전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묶음에 들어가야 수요자들의 방송시청이 가능하다. 결국 통일위성방송을 채택하든, 혹은 케이블 통일방송의 프로그램공급자의 형태를 선택하든지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시청자를 만날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편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형태의 방송국이든지 통일방송국을 개설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방송형태가 실현되고 있고, 또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케이블 방송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일교육 방송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도달하는 것은 통일방송국 설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청자 접근은 케이블 TV가 지니는 상업적 속성 때문에 가장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케이블 방송용 프로그램 공급자로 통일교육방송을 개설할 경우 통일교육 방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을 위시하여 케이블 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 공급 네트워크 사업에 공공성의 표현비중을 규정화하고, 여기에 통일 및 북한관련 프로그램을 묶는 방법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방송국의 개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추진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

송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요계층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통일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교육적 성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도 큰 장점중의 하나이다.

<그림 VI-17> 통일교육 방송 인프라구축 가능성



그 다음으로 위성을 통한 통일교육 방송도 고려해볼만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교육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참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케이블 TV 등과 연계될 경우 자연스럽게 케이블 방송영역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 공급자로서 케이블용 통일교육 방송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이 케이블 방송보다 위성방송쪽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위성용 통일교육 방송국을 고려하는 것도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케이블 통일방송국 개국은 케이블 TV의 공공성이 규정이나 법규 등으로 명문화되거나 일정한 방송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영화관에서 국산영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시간대나 혹은 채널권을 확보한다하더라도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케이블 시청자 분야에서 공공성으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VII

결론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 그리고 통일지향 교육 인프라구축 방안 등으로 나누워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즉,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통일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한편에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 체제가 약화되는 등 통일의 외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역동적 시민사회의 출현으로 내적 통일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과 이른바 ‘남남갈등’의 확산 등 통일역량을 저해하는 요인도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는 올바른 통일관의 부재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국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그리고 정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 교육은 국가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여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는 평화의식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화한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의식을 키워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의 정치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갈등의 평화적 해결, 대화와 타협,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정치교육의 확산 등 우리의 통일교육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적극적 통일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내용적으로 적극적 통일의지 배양, 건전한 안보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관, 민족공동체 의식에 의거한 객관적·균형적 북한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의거한 이념관의

형성을 지향한다. 방법상으로는 공급자의 의도와 수요자의 관심간 조화, 강의식 교육과 참여교육간 균형, 집합교육과 on-line 교육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통일교육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 역할분담에 의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개선하고 통일교육 강사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며, 통일교육센터 혹은 통일교육대학원 등 통일교육을 전담할 독립기관의 설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위상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평화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4장(학교통일교육), 5장(사회통일교육), 그리고 6장(통일교육 인프라)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제3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북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과반 수 이상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고(42.6%), 바람직한 통일의 방식으로는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없는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청소년이 다수였으며(59.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재의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할 수준에 달하였다(21.3%). 또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여(44.0%),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을 국가 경쟁력이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북한·통일문제 관련 정보를 주로 입수하는 주된 경로는 TV·라디오(64.3%)였으며, 인터넷(10.0%)의 응답률이 신문(5.6%)이나 잡지·일반서적(1.8%)의 응답률을 월등하게 상회하였다.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렵고”(49.9%),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45.4%)라고 생각하고 있어, “금강산 방문 등 현지방문 기회 제공”(78.7%)과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71.5%) 등의 교육방법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로서는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69.3%), 현재의 한미동맹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66.9%에 달하였다. 북한주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함께 살 동포”라는 의견이 55.9%로서 과반수를 점하였고, 북한청소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할 남짓한 반면, 전체의 절반이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응답(50.6%)하였다. 북한 대중매체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할 미만의 소수에 머물렀고(28.6%), 실제로 북한 대중매체에 접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36.9%에 불과하였다.

현재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시청각자료 활용 수업”이 47.8%로서 다수였고, 바람직한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현장견학·체험학습”의 응답률이 61.1%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관심 부족”(85.7%)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2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북한의 실상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4%에 불과하였고, 주관기관은 “정부·공공기관”(41.8%)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교육내용이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 정도(50.0%)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은 4할 남짓한 수준에 머물렀다(43.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는 ①북한·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중장기적 비전을 갖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TV,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은 이해하기 쉽고,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⑥통일문제는 국내문제이면서 국제적 수준의 정치·군사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공공-민간 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이 구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⑧평화·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통일지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재정립 방안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 제시된 평화통일교육확산 패러다임에 따라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통일관을 평화관, 이념관, 그리고 북한관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제4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원칙과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관’은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잘 인식하는 길은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남북한 관계 및 변화에 대해 그때그때 현안대로 인식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관’은 통일교육의 평화적 지향을 함양하는 인식의 강화를 요구한다. 평화적 인식 강화는 그 동안에 강조되었던 안보 의식을 뛰어넘어 보다 한 차원 높은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외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념관’은 ‘자유 민주주의 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통일교육의 원칙은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실천의 생활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역동성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실천적인 평화 공간으로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하여 평화의지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나 우리의 노력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남북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목표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교수자 즉,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통일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의 현황은 분명 남북한 간에 놓여 있는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분단의 표본들이다. 이러한 분열적 요소를 통합적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은 반분될 것이다.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보편적인 민족주의의 인식과 비판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하는 강의자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진척과 동북아 정세를 통일 우호적으로 바뀌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통일교육 교수자들은 통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철저한 분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한 화해와 협력무력 도발의 불용,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와 교류 협력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주장을 실천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사회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의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변화하는 통일교육환경과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기초하여 사회통일교육의 출발점부터 재검토하는 한편, 현실적인 체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통일교육은 그 속성상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①‘사실상의 통일’지향, ②적극적 ‘평화 만들기’와 포괄적 안보관의 수용, ③사회문화 영역의 중시, ④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재규정하고, 교육시설의 이용 협조,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 법적 근거

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통일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각급 사회교육단체는 통일부장관이 정한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심의회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연계성을 높이도록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화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조정 및 협조를 이루며 정책개발 및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은 교육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의 종합적 지원센터로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부와 교육기관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교육의 구체적 방향·목표·내용을 정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며, 교재 개발 및 지원, 교육기관의 조정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등 사회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통일교육’을 위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민간 통일교육을 특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도록 역할 분담과 함께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강사요원은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방향과 교수기법을 전문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이버통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민간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일센터의 지정 및 활용, 전국 12개의 통일관 및 통일교육전문위원회의회의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통일교육 지역중심센터 육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600만 명의 재외동포는 통일을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일 뿐만 아니라 통일후 남북주민간 갈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중간지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를 필요도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 하려면, 우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른 한편,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일교육의 개선에는 모든 단체, 국민들이 동참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각종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연계시키고, 역할을 분담·조정하며,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루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회통합 교육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의 확대개편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수준별, 성별, 연령별, 가족그룹별, 제3국 체류기간별 등의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분류하고, 이들에 부합하는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퇴원이후 각지에 흩어져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정과 적응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재교육시킬 수 있는 중장기 통합교육 관리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통합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부의 전문 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사이버통일교육 센터를 이용하여 하나원 생활과정에서의 교육과정에 긴밀하게 참석한다. 나아가 통일교육원과 하나원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남한 사회 사회통합 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사회통합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을 통일교육원 내에 설립(가칭: 남북한 사회통합 교육 센터)하도록 한다.

넷째, 노동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활성화하고, 기술 습득과 재교육 과정에서 남한사회 기업경영의 방식,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 노동과정과 노동조합의 역할, 사용자와 노동관계, 기업조직운영 방식과 경쟁관계, 남한의 기업문화 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 지자체별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과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단체를 조직화하고, 경제적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과정에서의 남북주민간의 심리적, 정신적 충돌과 물이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사회통합 교육조직과 연계하여 재교육 혹은 사회통합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한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북한이탈주민 재교육기관(가칭: 사회통합 재활센터)에 재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여섯째, 전국적인 비정부기구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한다.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단체나 조직의 컨소시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국적인 비정부 기구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직화하며,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정부 사회통합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여기에는 종교단체, 교원단체, 민간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북한이탈주민의 방송국 등의 조직과 각 기구의 인터넷 방송 조직도 연계될 수 있다. 중앙과 각 지방의 네트워크 거점을 두며, 네트워크 연계망은 인터넷, 방송, 오프라인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될 수 있고, 사이버 사회통합 센터의 사이버 토론방 개설, 의료 법률 상담, 직장 문화 이해와 적응, 북한이탈주민의 사이버 공동체 형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원격통일교육은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원격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각종 통일교육기관과의 원격통일교육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서 원격통일 교육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적이고 일괄적인 통일교육대상자 환경을 구현하고, 통일교육원, 교원단체, 공무원 연수원, 대학 사회, 일반인 등 전체를 종합하는 통일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원격통일교육 통합운영시스템과 통합운영사무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의 단계별 발전 사업은 사이버통일교육 시스템 운영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비하고 교육 시스템 안정화를 기하는 것과, 통일교육 통합운영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각 통일교육주체의 협의체로 이루어진 정보통신 사이버통일 교육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의 공무원 연수원, 서울시, 부산시 등 각종 지역 교원 연수원, 동국대, 경남대, 각종 사이버 대학 등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로 제휴하여 일회성 통일교육뿐만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지는 통일교육 과목을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도입하고 일반 공무원, 교원은 물론이고,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원격통일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교육생 및 전문교육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교원연수원이나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통일교육의 원격강의 콘텐츠의 개선 및 보완이 요청된다. 사이버 원격통일교육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내용의 콘텐츠 제작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특성화 기관의 운영이 요청된다.

다섯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안건의 협의, 사이버교육관련 정보교환 및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코스웨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공무원사이버교육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격통일사이버교육 담당자들도 컨소시엄의 형태나 개별적으로 동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내 모든 사이버 교육에 사이버통일교육을 연계할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이버대학의 경우 원격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 교육수요자의 욕구달성을 위한 코스웨어 개발 등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일단 대학의 북한관련 학과나 각종 남북관련 전문연구소는 전문화된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원연수원, 통일교육원 등은 통일교육 대상자의 발굴과 전달수단에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 기관의 장점을 서로 연결하여 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격통일교육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통일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방송국의 개설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통일방송국의 추진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통일교육 방송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수요계층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고,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이버통일교육과 연계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고, 교육적 성과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통일교육도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도 큰 장점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위성을 통한 통일교육 방송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교육 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참여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이 케이블 방송보다 위성방송쪽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위성용 통일교육 방송국을 고려하는 것도 남북관계 변화와 관련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자로서의 케이블 통일방송국 개국은 케이블 TV의 공공성이 규정이나 법규 등으로 명문화되거나 일정한 방송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영화관에서 국산영화 쿼터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시간대나 혹은 채널권을 확보한다하더라도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 케이블 시청자 분야에서 공공성으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통일지향 교육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그 구현방안을 탐색하

러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를 ‘통일을 지향하는’ 다시 말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발달시켜야 할 가치관과 태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함으로써 통일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Ossis’와 ‘Wessis’의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차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정민. 『인터넷 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고정식·오일환·독고순. 『중장기 통일교육원 발전방안』. 통일교육원, 2003.
- 교육인적자원부. 『탈북 학생 사회·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002.
-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반편견교육』. 서울: 인간사랑, 2004.
- 김성윤 등. 『사이버통일교육: 분석과 전망』. 통일교육원, 2001.
- 김용섭. 『인터넷방송 기획실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중고교 도덕윤리교사 통일문제 및 학교통일교육 실태 조사결과』. 2000.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2000.
- 박영규·김수암.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3-08. 2003.
- 제성호 외.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3.
- 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서울: 인간사랑, 2001.
- 방정배 외. 『위성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2.
- 신수범 외. 『교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1.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내외 평화교육의 적용방안 연구』. 통일부, 2001.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2003.
- 오기성 외. 『북한영상자료의 통일교육 활용을 위한 분석』. 통일부, 2001.
- _____. 『통일교육지침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통일부, 2003.
- 유영옥. 『남북교육론』. 서울: 학문사, 2002.
- 이근철·오기성.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월드, 2000.
- 이돈희 외. 『학교통일교육자료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 이만제 외. 『인터넷 방송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8.
- 이만제 외. 『인터넷방송 공동송출시스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2000.

- 이상만.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개선방안 연구』. 통일부, 2001.
- 이수경. 『우리나라 사이버교육의 현황과 통일교육원의 발전과제』. 2004.
- 이수영 외. 『위성방송 운영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 이우승. 『북한,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제작방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2000.
- 이우승 외. 『방송을 통한 국민통일의식제고방안 연구』. 통일부용역과제, 2001.
- 이우영 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KDI 주관 97년 국가정책개발사업 연구보고서, 1999.
- 이장희. 『사회통일교육의 나아갈 방향』. 통일교육원, 2001.
- 이장희 외.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중장기 통일교육 발전계획』. 통일부, 2001.
- 장익 외. 『대학교육정보화 활성화 지원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_____. 『사이버대학 모니터링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 전우택 외.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 보고』.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 정현백 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원, 2002.
- 조동기 외.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조용권. 『인터넷 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 삼성경제연구원, 2000.
-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2000.
- _____.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2001.
- _____.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 워크숍 자료, 2001.
- _____.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 창출을 위한 분야별 실천과제』. 2002.
- _____. 『사이버통일교육센터 활용핸드북』. 2002.
- _____. 『통일교육원 30년사: 통일교육의 발자취, 1972-2002』. 2003.
- 통일부. 『남북한 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 2000.
- _____.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2002.
- _____. 『통일부 30년사: 평화·화해·협력의 발자취, 1969~1999』. 서울: 통일부, 1999.
- _____. 『2004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3.

-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방안』. 1999.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1.
-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2003.
- 함인희 외. 『통일교육 분야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통일부 용역 과제. 2002.
-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 황병덕. 『통일교육개선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Babbie, Earl. 고성호 외(역),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그린, 2003.
- Heater, Derek.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Falmer, 2004.
- Keat, Russell and John Urry. *Social Theory as Science*.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1982.
- Riesenberg, Peter. *Citizenship in the Western Tradition: Plato to Rousseau*. Chapel Hill, NC: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2. 논문

- 권혁범.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0.
- 김용철.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기피 현상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상돈 외 (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 오름, 2002.
- 김창환. “통일 전 독일의 통일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주체 『통일 그리고 북한과 독일의 교육현실』 세미나 발표문. 2002.
- _____. “통일교육지침총론 및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2003 통일교육발전워크숍 자료집, 2004.
-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분석.” 통일부용역과제. 2002.
- 독고순. “탈북주민의 가치정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5집 1호.

- 서윤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동계심포지움 발표문. 2003.
- 손호철. “대북포용정책과 남남갈등.”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남북한관계의 회고와 전망』 발표문. 2002.
- 오기성. “학교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 연구.” 『국민윤리연구』 46권, 2001.
- 윤성이.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통일부용역과제. 2001.
- 윤여상. “탈북자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 실태.” 『자유공론』 301호 (2002).
- _____. “탈북자 현황과 한국사회 적응실태.” 『자유공론』 (2002).
- 윤인진.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 지원의 새로운 접근.” 『한국사회학』. 1999.
- 이새롭.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분과위원회 회의자료. 2003.
- 이장희. “통일교육 활성화를 법제도 개선방안.” 이장희 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3.
- _____.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정상돈 외 (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 오름, 2002.
- 정상돈. “이데올로기 문제와 통일교육의 다원화.” 정상돈 외 (편),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 방안』. 서울: 오름, 2002.
- 차우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지침 및 교육방법개선연구.” 이장희 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 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2003.
- 최종렬.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과 운용검토.” 새교육, 2000.
- 황병덕.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워크숍(2002)』 발표문. 1999.

Alger, C. F. “What Should Be the Foundations of Peace Education?.” in Y. Iram, *Education of Minorities and Peace Education in Pluralistic Societies*. London: Praeger, 1996.

Aspeshlagh, Robert and Robin J. Burns, “Approaching Peace Through Education: Background, Concepts and Theoretical Issues.” in Robin J. Burns and Robert Aspeshlagh, *Three Decades of Peace*

Education Around the World: An Anthology.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6.

Meinardus, Roland. “독일의 성인 정치교육 및 한국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활동 상황.” 명지대 및 유럽연구센터-함부르크대 정치학 연구소 공동 주최, 『독일의 정치교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모델이 될 것인가?』 학술회의 자료집. 1998.

3. 기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관련인터넷<www.unikorea.go.kr>자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관련 보도 자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안내 자료. 2003.

부록: 설문 문항

-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개인 및 학교에 관한 정보는 통계법 제13·14조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일교육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통일교육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통일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응답내용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전산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연구와 정책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아래의 <응답요령>에 따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 10.

한국청소년개발원

주소 :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빌딩

<http://www.youthnet.re.kr>

조사책임자 : 길은배(02-2188-8843)

먼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내용은 절대비밀이 보장되오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당신의 성별은?

- 1. 남 자
- 2. 여 자

<문 2>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 1. 인문계 고등학교
- 2. 실업계 고등학교

<문 3> 몇 학년입니까?

- 1. 1학년
- 2. 2학년
- 3. 3학년

<문 4> 학교성적은 대략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매우 못 하는 편
- 2. 중간보다 못 하는 편
- 3. 중간 수준
- 4. 중간보다 잘 하는 편
- 5. 매우 잘 하는 편

<문 5> 살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1. 단독주택
- 2. 아파트
- 3. 연립·다세대 주택
- 4. 상가주택
- 5. 기 타

<문 6>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 1. 두 분 모두 계시다
- 2. 아버님만 계시다
- 3. 어머님만 계시다
- 4. 두 분 모두 안 계시다

<문 7>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단,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예: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졸업”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1) 아버지	1	2	3	4	5
2) 어머니	1	2	3	4	5

<문 8> 형제 또는 자매가 있습니까? 있다면 자신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들(또는 외동딸)”이다
2.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만이(첫째)”이다
3.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막내”이다
4. 형제(자매)가 있고, 그중에서 “중간”이다

<문 9> 현재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친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2. 외할아버지·할머니(또는 두분중 한분)와 함께 살고 있다
3.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

<문 10>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못 사는 편
2. 중간보다 못 사는 편
3. 중간 수준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5. 매우 잘 사는 편

<문 11>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가장 가깝습니까?

1.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2. 늦어지더라도 사회적인 혼란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통일이 되기보다는 현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문 12>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다
2. 비교적 높다
3. 그저그렇다
4. 대체로 낮다
5. 매우 낮다

<문 13> 언제쯤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1.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2. 3~5년 정도 걸릴 것이다
3. 5~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4. 1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이다
5. 잘 모르겠다

<문 14>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는 다음 중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북한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러시아
6. 잘 모르겠다

<문 15>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약간 관심이 있다
4. 매우 관심이 있다

<문 1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원래 한 민족, 한 국가였기 때문에
2.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4. 북한의 경제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문 17> 북한/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1	2	3	4
2)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문제이다	1	2	3	4
3)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1	2	3	4
4)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이다	1	2	3	4

<문 18>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이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변함이 없다 | 2. 별로 변함이 없다 |
| 3. 약간 변화하였다 | 4. 크게 변화하였다 |

<문 19>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크게 축소되어야 한다 | 2. 축소되어야 한다 |
| 3.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다 | 4. 확대되어야 한다 |
| 5.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 |

<문 20>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북한의 핵개발 의지 | 2.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
| 3. 북한 미국의 비타협적 대결 | 4. 한국의 부절적인 대북정책 |

<문 21> 현재의 한미동맹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더욱 강화해야 한다 | 2.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 3. 재검토되어야 한다 | |

<문 22>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부분적인 철수가 우리나라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1.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3.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23> 우리에게 북한주민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함께 살 동포
2. 대치하는 적
3. 적이자 동포
4. 무관심의 대상

<문 24> 북한주민은 우리(남한주민)를 어떻게 보고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1. 함께 살 동포
2. 대치하는 적
3. 적이자 동포
4. 무관심의 대상

<문 25>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2.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
3. 약간 위협적이다
4. 매우 위협적이다

<문 26> 북한의 대중매체(영화/방송/소설/신문/잡지/만화 등)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또한 직접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1. 관심도 없고, 접해 본 경험도 없다
2. 관심은 없지만, 접해 본 경험은 있다
3. 관심은 있지만, 접해 본 경험은 없다
4. 관심도 있고, 접해 본 경험도 있다

<문 27> 북한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이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문 28>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알지 못한다 2. 별로 알지 못한다
- 3. 약간 알고 있다 4. 많이 알고 있다

<문 29> 북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 1. 전혀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2. 친근하지 않게 느껴진다
- 3. 친근하게 느껴진다
- 4.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문 30> 북한/통일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중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얻고 있습니까?

- 1. 학교 수업(통일관련 교육) 2. TV·라디오
- 3. 신문 4. 잡지·일반서적 5. 인터넷

<문 31> 주위의 사람들 중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누구와 가장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부모님 2. 형제·자매 3. 학교선생님
- 4. 친구나 선·후배 5. 대화상대가 없다

<문 32>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전혀 없다	한두 번 있다	여러 번 있다
1) 약한 친구를 왕따시킨 경험이 있다	1	2	3
2) 생활형편이 어려운 친구를 차별한 경험이 있다	1	2	3
3)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차별한 경험이 있다	1	2	3
4) 장애인을 차별한 경험이 있다	1	2	3

<문 33> 북한 청소년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화적이다	1	2	3	4
2) 합리적이다	1	2	3	4
3) 근면하다	1	2	3	4
4) 겸손하다	1	2	3	4
5) 믿을 수 있다	1	2	3	4
6) 인내심이 강하다	1	2	3	4

<문 34> 현재 학교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강의식 수업
2.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3. 토론/토의식 수업
4. 현장견학/체험학습

<문 35> 현재 학교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내용이 재미가 없다	1	2	3	4
2)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1	2	3	4
3) 학습자료/교재가 미흡하다	1	2	3	4
4)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3	4
5)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1	2	3	4

<문 36> 학교에서의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다음의 각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의 필요성·당위성에 이해	1	2	3	4
2)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이해	1	2	3	4
3)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	1	2	3	4
4)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1	2	3	4
5)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차이	1	2	3	4
6) 통일과 관련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	1	2	3	4

<문 37>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다음과 같은 정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 통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보급	1	2	3	4
2) 통일논의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2	3	4
3)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의 실시	1	2	3	4
4) 금강산 방문 등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1	2	3	4
5) 탈북 주민/청소년들과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 제공	1	2	3	4

<문 38> 북한/통일관련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강의식 수업
- 2. 시청각 자료 활용 수업
- 3. 토론/토의식 수업
- 4. 현장견학/체험학습

<문 39> 학교에서의 북한관련 교육내용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2.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3. 그렇다고 생각한다
- 4. 매우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 40>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통일관련 교육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 1. 전혀 유익하지 않다
- 2. 유익하지 않다
- 3. 유익하다
- 4. 매우 유익하다

<문 41>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 42> [위에서 “없다”고 응답한 사람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 2. 그렇지 않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지금부터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북한/통일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 번 경험이 있으면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문 43> 다음 중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에 참여하셨습니까?

1.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유스호스텔 연맹 등
2. 일반 시민단체: YMCA, YWCA, 흥사단,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자유총연맹 등
3. 정부/공공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교육원,
시·도교육청 등
4. 기타

<문 44> 교육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 | | |
|----------------|-------------|
| 1.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 2. 유익하지 않았다 |
| 3. 유익했다 | 4. 매우 유익했다 |

<문 45> 어떠한 계기로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 | | |
|---------------|--------------|
| 1. 학교/선생님의 추천 | 2. 청소년단체의 추천 |
| 3. 부모님/가족의 권유 | 4. 친구/친지의 권유 |
| 5. 스스로 판단해서 | |

<문 46> 교육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 | |
|---------------|--------------|
| 1. 강의식 수업 | 2. 시청각 자료 활용 |
| 3. 토론/토의식 수업 | 4. 현장견학/체험학습 |
| 5. 초청인사 특강/강연 | |

<문 47> 교육받은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반나절 이하
2. 하루 종일
3. 2~3일 정도
4. 4~5일 정도
5.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문 48>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오랜 시간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리고 응답 못한 문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험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최의철·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형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F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